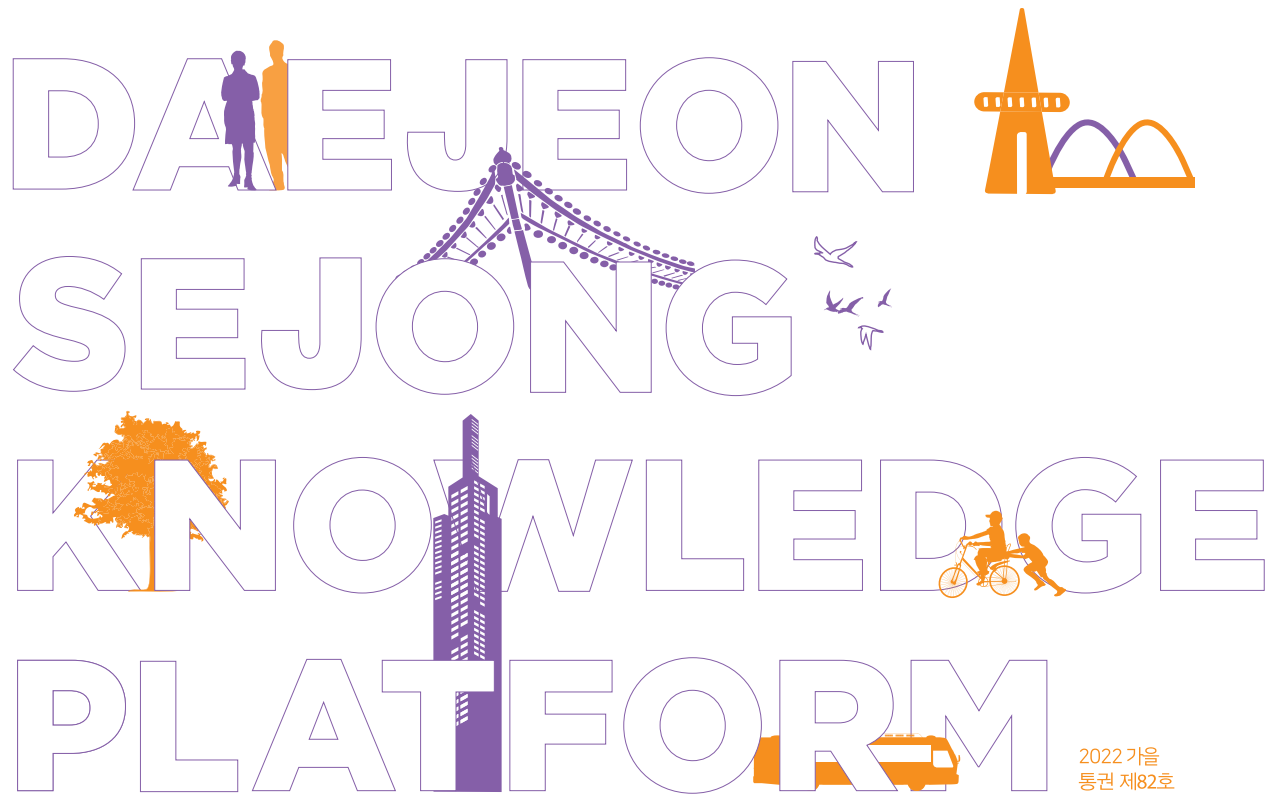


DAEJEON SEJONG KNOWLEDGE PLATFORM



2022 가을
통권 제82호

DAEJEON SEJONG FORUM

대전세종포럼

시민행복과
도시성장을 견인하는
지식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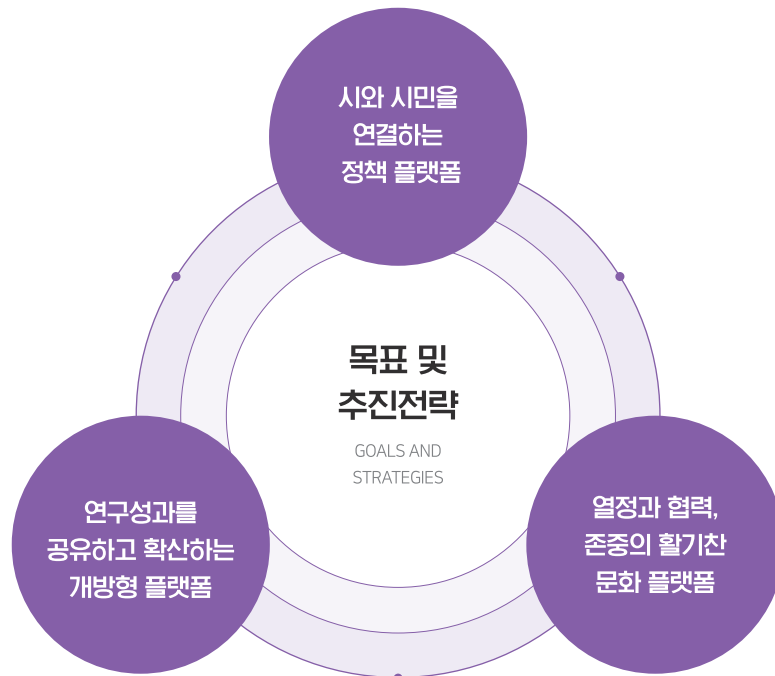
MISSION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VISION

시민행복과 도시성장을 견인하는 지식 플랫폼

- 디지털 전환의 시대, 도시 정책 연구
 - 아젠다 중심 정책 형성
 - 수요맞춤형 연구 개발



- 글로벌 도시 정책네트워크 확대
 - 초광역 협력네트워크 강화
 -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인재 확보 및 조직 유연화
 - ESG 경영체계 확립
 -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연구환경 조성

DAEJEON SEJONG FORUM

대전세종포럼

2022 가을 통권 제82호

Contents

대전세종포럼 / 2022 가을 통권 제82호



권두언

- 06 새로운 변화를 위한 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정재근 대전세종연구원장

특집

기획특집

- 10 2022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지역의 대응방안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
- 22 대전시가 일류경제도시를 지향해야 하는 이유
정경석 대전세종연구원 혁신공간연구실장
- 44 대전시 도로 및 철도 정책방향과 과제
이범규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56 대전과 세종의 청년정책 방향과 과제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70 세종시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소고
김성표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80 미래전략수도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세종시 지역산업 발전 방향
남영식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정담情談

ISSUE & TALK

- 94 RANDEV 큐브위성, 누리호와 함께 우주로 날아오르다
김태호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R&D 트렌드

- 98 뉴스페이스(New Space)의 문을 연
대전 우주산업 대표기업을 소개합니다

FOCUS_IN

- 100 세계적인 항공우주도시를 향하여
신명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 위원장
(발사체보증팀 책임연구원)

- 104 도요샷의 위대한 비상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 책임연구원

대전과 세종의 소식

- 108 가볍게 떠나기 좋은 대전 세종 문화산책

연구원 이모저모

DSI NEWS

- 112 연구원 뉴스

권 두 언

새로운 변화를 위한 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정재근 / 대전세종연구원장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원자재의 공급망 혼란과 예상보다 급박한 금리인상으로 인해 경제침체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글로벌 블록경제에 따른 한국경제의 저성장이 장기간 계속되고 고물가 인플레이션 등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가운데 새정부 및 민선 8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들은 4년 동안 전세값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공공요금이나 서비스요금의 인상으로 자신의 삶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전과 세종의 도시환경과 교육환경 등 경제, 문화, 생활 전반에 걸친 시정의 변화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지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선거과정에서 나온 여러 공약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각계 각층의 이해와 요구가 부딪히는 사안들인지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의 실질적인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갖게 될 것인지 대전세종연구원은 민선 8기 시대, 지역 변화를 위한 연구를 충실히 해나가야겠습니다.

대전 이장우 시장님이 발표한 『일류경제도시』와 세종 최민호 시장님이 발표한 『미래전략도시』는 경제와 문화수준을 높여서 삶의 질을 보장하자는 점에서 지향점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구체적인 노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기업유치, 과학기술기반기업육성, 상권활성화,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에 대전과 세종 모두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세종포럼 가을호의 기획특집 주제를 “대전과 지선 이후 지역정책의 방향과 과제”로 기획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에 대한 정책 변화, 일류경제도시를 위한 대전의 산업현황 분석과 발전 방향, 도로와 철도의 교통체계 개선 방안, 대전과 세종의 청년 정책 및 상권활성화와 과학기술기반 지역산업에 대한 발전 방향을 담았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민선 8기 시대는 새로운 공약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새로운 변화는 늘 논란이 많은 법이지만 대전과 세종의 도시성장을 위한 도전을 두려워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변화는 도전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도전을 실천하고 있는 누리호발사성공 등의 우주관련 지역 소식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찬 발걸음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한 도전을 적극적으로 해나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AEJEON

논담(論談)

2022

대선과 지선 이후

지역정책의 방향과 과제

기획특집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

/정경석

대전세종연구원 혁신공간연구실장

/이범규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성표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남영식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SEJONG

기 획 특 집 0 1

2022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지역의 대응방안

허문구 /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

1 — 수도권 집중의 마태효과 심화

지방의 20~30대 사이에서 자주 회자되는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어)’이라는 신조어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조적인 용어이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고 교육받고 성장했는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교육의 기회 및 재산·자산의 크기가 달라지고, 심지어 혼인의 기회까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지방의 많은 인구는 상대적으로 많은 기회를 접할 수 있는 수도권으로 떠난다(허문구, 2022a).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수도권 중심으로 촘촘하게 짜여진 경제·사회 구조는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못하며 정의는 실종되었다는 인식 속에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이 팽배하다(허문구, 2022b). 이러한 구조가 지속되는 한 지역균형발전 실현이라는 목표는 요원하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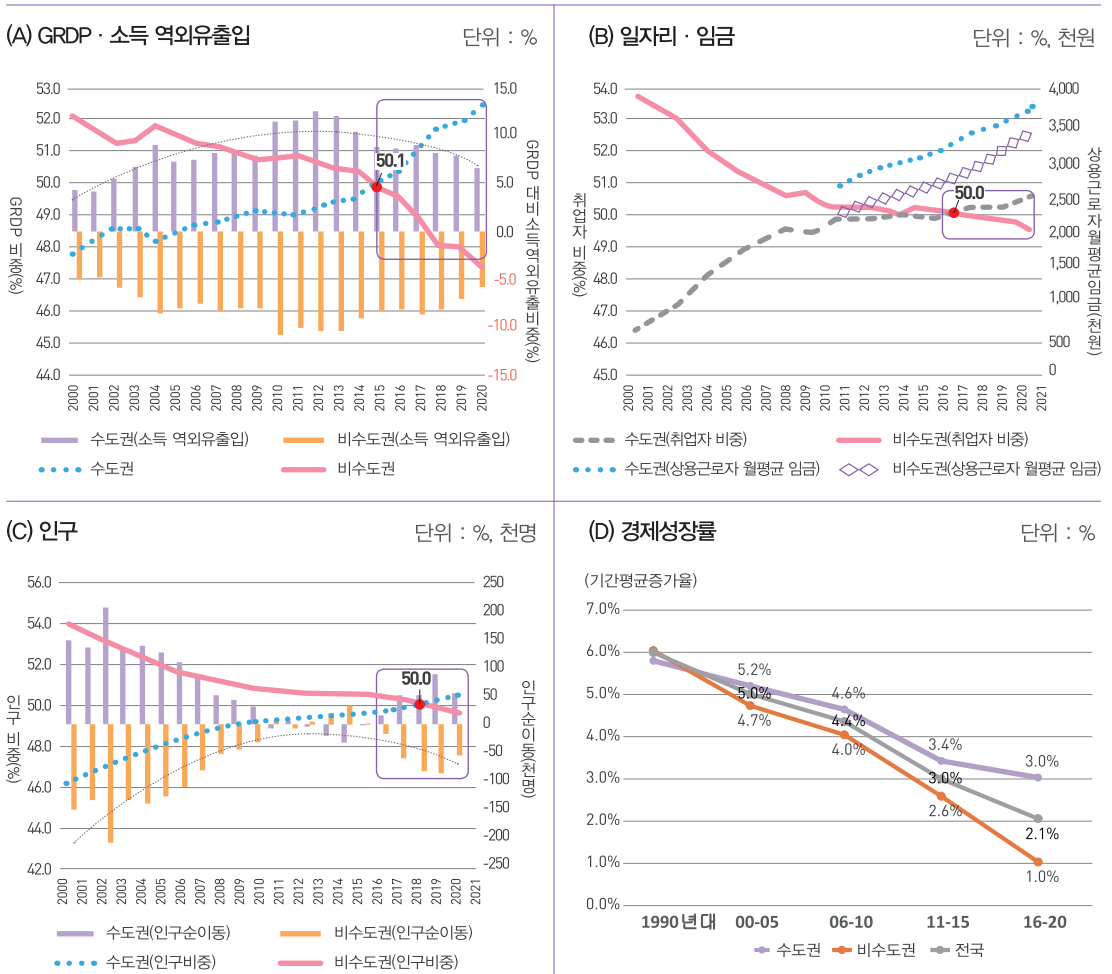
2003년 이후 지역균형발전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의 마태효과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소득과 일자리, 인구는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으로 절반 이상이 몰리고 있다. 지역내총생산(GRDP)의 경우는 수도권의 가파른 증가로 2015년에 역전현상이 나타났으며, 그 이후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다. 비수도권의 생산소득 중 12.8%가 유출된 2012년을 기점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에도 여전히 6~8%대의 소득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 같은 결과는 수도권 본사, 비수도권 분공장의 구조에 의해 비수도권 기업의 이익잉여금이 본사 소재의 수도권으로 계상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내에서의 생산활동 증가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 2000년 기준으로 비수도권의 취업자 비중은 53.5%로 수도권의 46.5%에 비해 7.1%p나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그 이후 차이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2017년부터 수도권 취업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상용근로자의 임금수준도 비수도권에 비해 28만 6,000원~50만 9,000원

(2010~2021년) 정도가 높아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서 창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허문구, 2022a). 일자리 창출은 인구가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수도권의 고용 확대는 인구의 증가로 이어져 2019년에는 비수도권의 인구를 상회하고 있다.

소득, 고용,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역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1990년대에는 비수도권의 경제성장률이 수도권을 웃돌았으나, 그 이후 역전되면서 양자 간의 차이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2016~2020년 간 수도권의 경제성장률은 3.0%를 기록하고 있으나 비수도권은 1.0%에 불과하여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고, 이는 곧 국가 성장 침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간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경험하듯이, 지역도 “성장 → 침체 → 쇠퇴 → 재생장”의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역 간 발전 격차는 고착화되어가는 모습이다. 즉, 위에서 살펴봐왔듯이 발전하는 지역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반면, 저발전지역은 더욱더 침체 또는 쇠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그림1〉 지역경제 주요 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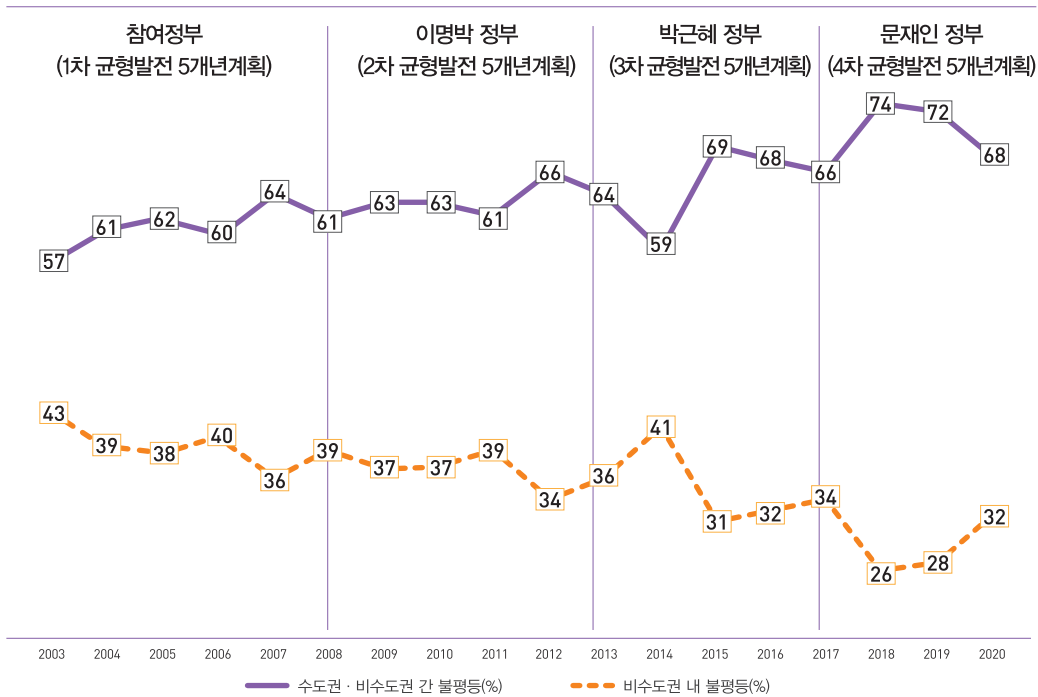


자료 : 산업연구원(2022)

II —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확대 요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권 쏠림현상의 마태효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확대를 초래한다. 산업연구원(2022)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의에 따라 27개의 지표를 이용하여 균형발전 불평등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비수도권 내 격차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즉, 전체 불평등도를 100%로 환산했을 경우 2003년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는 57%, 비수도권 내 격차는 43%를 기록하였으나, 그 이후 점진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하여 2018년 및 2019년에는 74%, 72%까지 이르고 있다. 이는 발전의 기회균등(교육, 일자리, 소득)뿐만 아니라 자립적 발전역량(인력, 산업, 기업, 재정), 삶의 질(보건·복지, 문화·여가, 주거·환경, 안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성장잠재력, 글로벌화) 등의 분야에서 수도권이 큰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¹⁾ 이 같은 결과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격차 완화를 위한 균형발전정책이 요구됨을 함의하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확대 요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2〉 수도권·비수도권 간 및 비수도권 내 균형발전 불평등도



1) 국가균형특별법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01 산업구성의 차이

지역내 산업구성은 해당 지역의 성장과 직결되고, 지역 간 격차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특정 지역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이 전체 산업 중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냐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지식기반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국가나 지역이 혁신활동 강화를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도모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도권 연구개발, 비수도권 생산기능 등으로 분절되어 있어 고부가가치 산업에 속하는 기업의 입지가 크게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수도권은 기업들의 R&D 기능이 집적하여 산업구조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부가가치 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특성을 보인다. 최근의 고부가가치 기업은 주로 지식기반제조업²⁾ 및 지식기반서비스업³⁾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실은 <표 1>을 확인하면 명확하게 나타난다.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상위 10위에 속하는 지역들을 비교해보면, 1995~2005년간의 경우는 10개 지역 중 비수도권이 3곳(충남 천안, 경남 김해, 대전 서구)을 차지하였으며, 이들 10개 지역의 2005년 제조업 평균 비중은 34.0%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2006~2016년 기간 동안 상위 10위를 차지한 지역은 모두 수도권의 시 또는 구 등으로 비수도권 지역은 1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이들 지역의 2016년 제조업 평균 비중은 16.8%로 10년 전의 상위 10위권의 평균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산업구조의 변화로 과거 제조업 중심의 고용 창출에서 최근에는 비제조업 부문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는 것을 함의한다. 수도권의 비제조업 비중 확대와 비수도권의 높은 제조업 비중은 생산성뿐만 아니라 고용의 격차 확대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국에는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표 1> 일자리 창출 상위 10위권 비교(시군구)

단위 : 천명, %

순위	1995년~2005년	증가	제조(2005년, %)	2006년~2016년	증가	제조(2016년, %)
	비수도권 3곳	(천명)	제조업 중심	모두 수도권	(천명)	비제조업 중심
1	경기 화성시	108.5	64.7	경기 화성시	179.9	51.5
2	경기 고양시 일산구	103.4	15.8	서울 강남구	121.3	2.3
3	경기 성남시 분당구	92.5	7.0	경기 성남시 분당구	108.1	3.3
4	경기 시흥시	86.3	55.2	서울 서초구	85.2	1.5
5	경기 용인시	76.1	33.0	서울 금천구	84.9	18.8
6	충남 천안시	74.8	36.5	서울 영등포구	82.4	4.0
7	경남 김해시	68.2	46.2	경기 파주시	81.2	43.5
8	경기 수원시 팔달구	51.8	33.3	경기 고양시 일산구	80.4	11.0
9	대전 서구	49.7	4.0	경기 용인시	78.8	29.4
10	경기 평택시	45.8	44.6	서울 마포구	77.4	2.2

주 : 전산업(농림어업 제외) 대비 제조업 비중

자료 : 박진(2022), "지역 허브 중심의 균형발전 전략"에서 재인용

2) 지식기반제조업은 전자정보기기,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정밀화학, 생물, 정밀기기, 신소재, 환경, 항공우주 등의 9개 산업으로 구성된다.

3)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정보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문화서비스, 관광서비스, 물류서비스 등의 5개 업종으로 구성된다.

02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⁴⁾

지방의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향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들 수 있다. 저임금·중노동 등의 이유로 노동력의 공급이 수요를 크게 밀도는 시장과, 고임금·고대우 등으로 노동력이 집중되는 시장으로 노동시장이 양분된 구조이다. 전자는 중소기업이, 후자는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이 해당한다. 이로 인해 대기업 정규직과 같은 1차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지방의 청년인구를 중심으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2차 노동시장(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근로자는 1,788만 명으로 전체의 89.2%나 차지하는 데 비해, 1차 노동시장인 대기업 정규직은 216만 명으로 10.8%에 불과하여 동 시장의 진입장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실감할 수 있다. 또한 임금(월)의 경우는 대기업 정규직이 409만 9천 원으로 2차 노동시장 평균임금 240만 1천 원에 비해 1.7배 높으며, 중소기업 비정규직과 비교하면 2.6배 높은 현실이다. 근속 연수에 있어서도 1차 노동시장 근로자는 12.2년이나, 2차 노동시장 평균은 5.0년으로 2.4배, 중소기업 비정규직과는 3.6배의 차이를 보인다. 임금의 경우 1980년 중반까지는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이 대기업의 90% 수준을 유지했으나, 그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로 50%대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방인구, 특히 청년층들은 1차 노동시장의 분포가 높은 수도권으로 떠난다. 대기업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사업체 60.7%, 종사자 63.4%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 2차 노동시장 간 자유로운 이동 촉진 및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추진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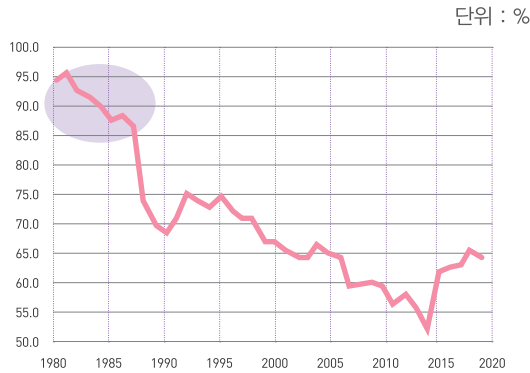
〈표 2〉 노동시장 이중구조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		
	대기업 정규직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수(만명) (비율, %)	216 (10.8%)	37 (1.8%)	1,127 (56.2%)	624 (31.1%)
임금(만원/월)	409.9	282.9	280	157.4
근속 연수(년)	12.2	4.7	6.9	3.4

자료 : 산업연구원(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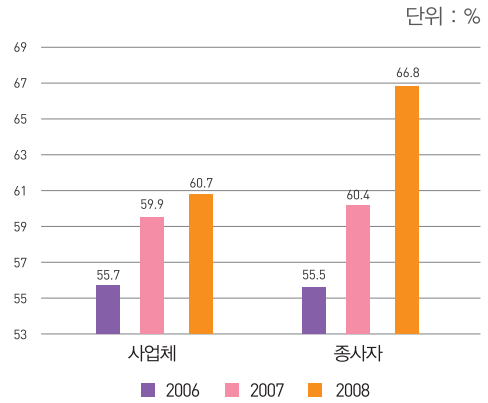
4) 허문구(2022a),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와 정책과제”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그림3〉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수준



자료 : e-나라지표를 토대로 작성

〈그림4〉 대기업 중 수도권 분포 비율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를 토대로 계산

03 자산의 공간적 격차⁵⁾

지방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수도권 비대화는 지역 간 부동산 가격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가구는 순자산(=전체자산-부채) 격차 확대 및 재산소득의 수도권 점유율의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다. 순자산의 경우 전국평균(100.0) 대비 수도권은 116~125, 비수도권은 75~84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2016년 이후의 자산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정준호,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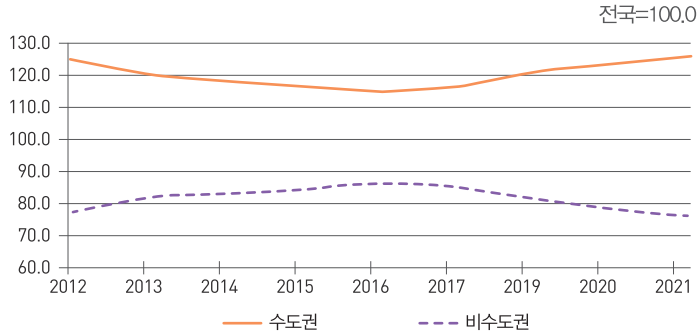
이에 더해 지역 간의 아파트값 상승률 격차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016~2021년간의 아파트값은 서울과 경기도 각각 108.6%와 85.1%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부산은 55.4%, 강원은 19.4%에 머물러 지역 간의 격차가 크게 확대되는 양상이다. 또한 서울 대비 아파트 매매가 비율의 경우는 같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48.1%에 그치고 있으며, 대도시인 부산과 대구도 각각 39.4%, 31.8%에 불과하며, 강원은 13.9%로 다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인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은 공간적으로 불균등한 가격 격차를 초래하고, 이는 가구의 자산총액에 반영되어 지역 간 자산 불평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코로나19 이후 경제불평등의 원인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34.1%로 1위를 차지할 만큼 부동산가격의 변동이 자산 격차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리얼미터·YTN, 2021).

이같이 자산의 공간적 격차는 비수도권 주민의 상실감으로 이어지고 균형발전을 저해하므로 공정한 기회 및 공평한 자립발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

5) 허문구(2022a),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와 정책과제"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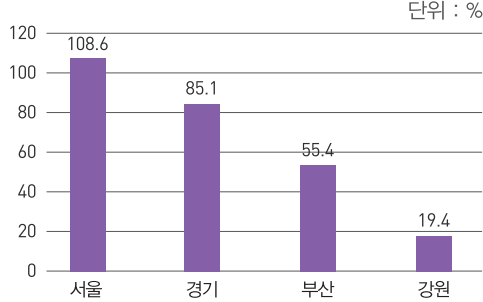
〈그림5〉 가구의 상대 순자산 추이



자료 : 정준호(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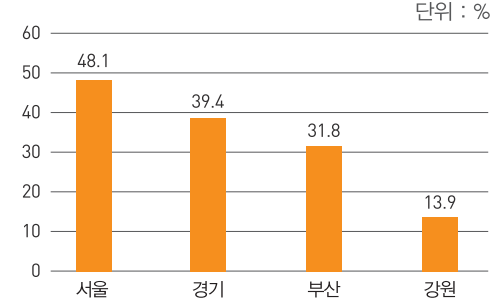
〈그림6〉 지역별 아파트값 변동 추이

5년간 아파트값 상승률(2016~2021년)



자료 : 매일경제신문(2021.12.5)

서울 대비 아파트 매매가(2021년)



자료 : 매일경제신문(2021.12.5)

III —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시그니처 프로젝트

01 지역균형발전 3대 전략·10대 국정과제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고령화로의 인구구조 변화 등 경제환경 대변혁의 파고를 맞이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재도약할 것이냐 아니면 침체의 길로 접어들 것이냐 하는 갈림길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국가경쟁력은 지역의 경제성장애 의해 결정된다. 이런 점에서 지금의 수도권과 지방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담보하기 어렵다.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는 ‘지역 간 불균형’ 및 ‘지역·산업·경제 양극화’의 완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식과 공정 기반의 ‘공간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모토로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곧 윤석열 정부는 본격적인 지방시대의 시작을 의미하고, 지역주도 및 시장친화형 지역발전을 구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3대 전략·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3대 전략은 1) 자율 :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2) 혁신 :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3) 공정 : 지역 고유특성 극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자율 기반의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역량 제고, 시장친화형의 혁신성장역량 확충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자원 및 특성을 고려한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국정과제로는 전략 1의 자율 부문에서는 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②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③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소통·협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자치역량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전략 2의 혁신 부문에서는, ⑤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⑥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성장거점 육성, ⑦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등의 과제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전략 3의 공정 부문은, ⑧ 지역특화형 산업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⑨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⑩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현하고, '인구취약지역에 대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지역균형발전 3대 전략·10대 국정과제

3대 전략	10대 국정과제	소관 부처
1. 자율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②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③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행안부 행안부·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2. 혁신 혁신성장 기반의 좋은 일자리	⑤ 기업의 지방이전 및 투자 촉진 ⑥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성장거점 육성 ⑦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3. 공정 지역 고유특성 극대화	⑧ 지역특화형 산업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⑨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⑩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산업부 중기부·행안부 산업부·행안부

자료 : 대한민국 정부(2022)

02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시그니처 프로젝트 : 기회발전특구(ODZ)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역대 정부와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지역주도형 정책'과 '시장친화형 지역발전' 기반의 '자치분권형 지역균형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해 균형발전정책에 '자율'이라는 가치가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지역 사회간접자본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주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역할을 확대한다는 점이다.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추진방식에서

지방정부에 자율권 및 권한을 주어 민간기업 또는 투자자 등이 지역에서 시장친화적으로 주도하는 상향식 균형발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그간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정책은 정부가 국가 권력을 기반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을 통한 '분산형 균형발전'이었던 것과 달리 새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기업과 사람이 스스로 지방으로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분권형 균형발전'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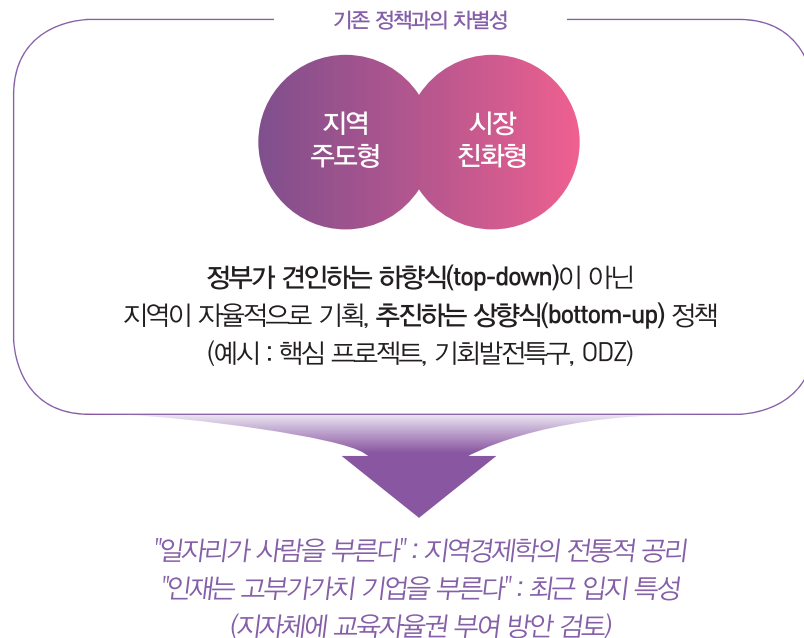
진정한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면 저발전지역에 발전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중 지역이 가장 주목해서 보아야 할 핵심 프로젝트는 '기회발전특구(ODZ ; Opportunity Development Zone)'이다. 동 프로젝트는 지역특위에서 미국의 '기회특구(OZ ; Opportunity Zone)'를 모델로 연구설계가 시작되었다(허문구, 2022a). 미국은 극심한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 연방정부가 미(저)개발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장기민간투자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기회특구제도를 추진하였다. 대상지역은 개인빈곤율 20% 이상, 가구당 중간소득이 지역 중간소득의 80% 이하 수준이 지속되는 저발전지역이다. 기회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인구는 약 3천만 명에 이르며, 평균 빈곤률은 31%로 미국 평균의 두 배, 주민의 56%가 유색인종으로 다양한 경제 및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지역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성과로는 2019년 말 기준으로 민간투자 규모는 75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일자리는 대도시 기준으로 2017년 대비 3.75% 증가, 78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산업연구원, 2022).

새 정부가 지향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전례없는 파격적인 조세정책 시험장으로써의 균형발전 핵심 정책 수단이다. 동 특구는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가 고유한 성장전략에 입각하여 지역특화 모델과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이전하는 기업과 투자하는 개인에게 각종 세제, 법령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월간중앙, 2022.5.17). 다만, 중앙정부는 특구의 선정기준 및 지역경제 특성 등을 분석하여 지역에 제공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참고로 자율적으로 대상지역 지정 등에 활용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법인세, 기업 승계를 위한 상속세 감면 등이 지원된다. 또한 기회발전특구에 직접투자 또는 간접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이연 및 감면, 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동 제도는 "과거 정부가 지역에 특구를 할당·배분하던 틀에서 벗어나 (연방정부가 대상지역을 지정하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지자체가 스스로 특구를 구상하고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지역 자율성이 반영된 보텀업(Bottom-Up) 정책"이다(월간중앙, 2022.5.17).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지역주도'와 '시장친화형'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모두 담고 있는 제도이다. 동 특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세 인센티브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동 특구가 대도시로 지정되었을 경우 인근 낙후지역(또는 지방소멸지역)과의 산업·경제적 연계방안, 기업 및 개인투자자가 선호하는 조세 혜택의 규모 및 종류에 대한 의견수렴 등 아직도 꼼꼼히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의 지역 간 불균형의 정도와 과거 정책추진의 결과를 고려할 때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수단이 시행되지 않는 한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이다. 하나의 대안으로서 시범사업으로 특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 추진한 후 그 성과를 점검하여 전국적 확산 또는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허문구, 2022b).

고용과 인구 간의 관계를 보면, 통상적으로 “일자리가 사람을 부른다”는 지역경제학의 전통적인 공리가 적용되어 왔다.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은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고부가가치 기업의 입지 특성은 다르다. 이들 기업은 사람(인재)을 따라가는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 ICT 관련 기업이 집중되는 이유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생산성이 높은 인재들의 수급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업 입장에서는 만성적인 인재 부족에 시달리는 비수도권으로 이동하기를 꺼린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새 정부에서는 지방정부에 대폭적인 교육자율권을 부여하여 교육부가 아닌,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기업과 협의하여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커리큘럼을 직접 만들고, 졸업 후에는 해당 지역 내 기업에 바로 취업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림7〉 새 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차별성



자료 : 저자 작성

IV — 지역의 대응방안

앞서 우리나라의 지역 현안과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그리고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여기에서는 향후 지역이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별 7대 분야·15대 정책과제에 대한 '상시 점검·조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7개 시도별로 7대 분야·15대 정책과제가 선정되어 있으며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들 정책과제 추진 여부에 따라 지방시대 및 균형발전의 체감도가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최근 지방선거로 인해 지자체장이 상당수 바뀌면서 시정·도정의 기본방향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특히 충청권의 4개 시도의 경우는 모두 새로운 지자체장으로 바뀌면서 정책변화의 필요성이 더해졌다. 따라서 각 지역은 기존에 설정된 7대 분야 및 15대 정책과제에 대해 수정, 보완을 위해 지역 내 정책별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균형발전 정책과제 상시 점검·조율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각 지역의 정책과제를 점검·조율하는 것뿐만 아니라, 광역권 단위로 확대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정책 시너지효과를 유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지역에서 관심이 높은 초광역협력사업 등에 대해 각 지역의 15대 정책과제와 연계한 새로운 사업발굴 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역 및 광역권 차원에서 정책과제에 대한 점검을 통해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및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칭)지방시대위원회'와 협의하여 새로운 정책과제를 반영할 수 있는 사전적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분권형 균형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자치분권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이 기존 정책과 가장 다른 특징은 지방분권이라는 큰 이슈가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역대 정부에서는 국가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분리되어 시행됨으로써 정책효과가 반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 정부에서는 '지역주도', '시장친화형'의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있어 국가사무의 이양 및 지방세 조정 등을 통한 재정적, 행정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시대적 조류 변화에 대비하여 주민 삶의 질 증진 및 지역경쟁력 강화라는 지방분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운영역량과 주민자치의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지방분권의 목표 명확화 및 기존 정부 한계 보완을 통한 실행 전략의 효율화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박기관, 2022).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과거 국가 권력을 앞세운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분산형 균형발전'에서 자치역량 제고를 통해 기업과 사람이 스스로 지방으로 갈 수 있는 '분권형 균형발전'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려면 각 지역의 자치분권 역량 제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역내에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성장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신정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최종적인 목표는 비수도권 경제활성화를 통해 수도권과의 격차를 완화하여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 2의 '혁신성장 기반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역내에 좋은 일자리 창출은 '지역민 소득증대 → 역내 지출 확대 → 기업

생산 확대 → 고용 증대'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는 역내에 '사람 · 교육 → R&D → 창업 → 신산업 기반'의 혁신성장역량의 흐름이 작동되어야 한다. 이들 흐름이 수월하게 작동하려면 무엇보다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해 창업활성화 및 신산업의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혁신성장 경로 흐름 관점에서 보면, R&D 역량이 우수한 지역은 R&D 성과가 창업활동, 신산업과 연계되어 지역경제 생산성 증대를 촉진하지만, 대전 및 세종을 비롯하여 많은 지역에서 이들 요소 간 미스매치 현상이 관찰된다. 혁신성장을 도모하려면 R&D와 창업활동, 신산업 기반의 부문 간 단절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R&D 역량 → 기술사업화 촉진 → 창업활성화 → 신산업 기반'으로 연결되는 지역성장 선순환구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이 기술사업화를 통한 창업활동 및 신산업 기반을 혁신성장의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식생태계와 비즈니스생태계가 조화된 플랫폼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인프라적인 차원에서 창업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스타트업 빌리지(Start-up Village)와 같은 공간을 마련하여 유사 업종의 기업 · 전문인력 간 교류를 통한 융복합 기술 및 신산업이 도출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연구개발 활동의 경우는 자금과 R&D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창업기업이 특정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리빙랩(Living Lab) 또는 메이커스페이스(MakerSpace)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e-나라지표, 가구순자산.
- e-나라지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율.
- 대한민국 정부(2022),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 동아일보(2019.9.3), “노동시장 이중구조, 왜 문제가 되나요” .
- 리얼미터 · YTN(2021),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경제불평등 인식조사.
- 매일경제신문(2021.5.12.5), “서울 · 지방 아파트값 격차 5년새 더 벌어졌네” .
- 박기관(2022), 자치분권을 통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의 전략과 과제」 특별세미나, 산업연구원.
- 박진(2022), 지역 허브 중심의 균형발전 전략, 제5회 서울인구심포지엄 발표자료.
- 산업연구원(2022),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 월간중앙(2022.5.17.), “윤석열 정부 지역 · 인구 전략의 이면” .
- 정준호(2020), 패러다임 전환과 회복력 있는 지역경제, 한국지역정책학회 발표자료.
- 통계청(KOSIS), 전국사업체조사.
- 허문구(2022a),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와 정책과제, KIET산업경제, vol. 286, 산업연구원.
- 허문구(2022b),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 지역주도 · 시장친화형 지방시대의 시작,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Vol. 43,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기 획 특 집 0 2

대전시가 일류경제도시를 지향해야 하는 이유

정경석 / 대전세종연구원 혁신공간연구실장

I — 연구배경 및 목적

오늘날 우리 사회는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에 직면해 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에서도 그러하듯이 우리나라도 수도권 일극 집중의 심화와 인구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멸 문제는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지방으로부터 더 이상 흡입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수도권 지역 역시 쇠퇴의 길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적잖이 들리고 있다.

공간 및 장소의 질은 필연적으로 갈을 수가 없기에 지역간의 불균형 및 공간에 대한 불평등 문제는 늘 국토 및 지역정책에서 중요한 담론이자 화두가 되곤 하였다. 국토의 불균형발전 문제는 단순히 수도권지역 대 비수도권지역의 문제로만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국가의 흥망성쇠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지방 대도시 역할과 기능 재정립에 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국토 및 도시정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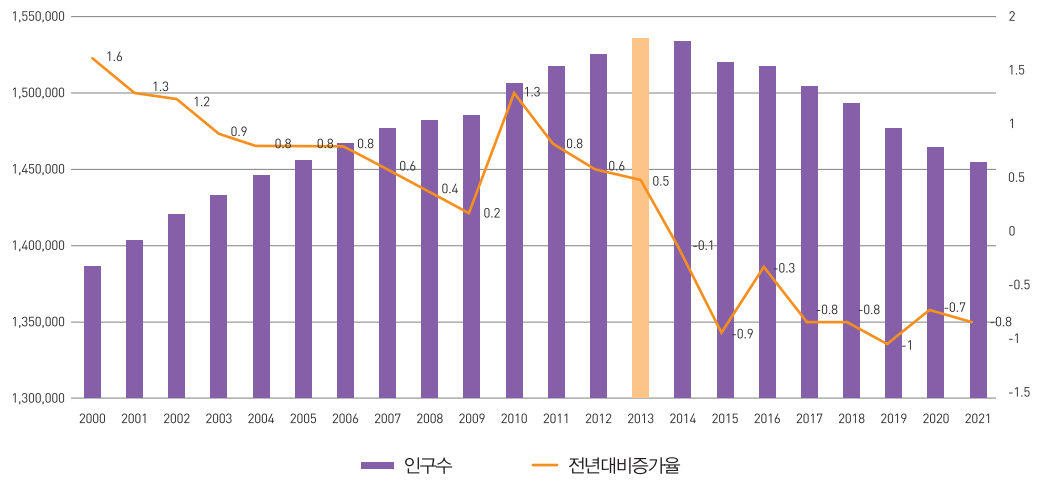
본 고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중부권역의 주요 수부도시로서 대전시의 도시 기능 및 역할이 어떻게 재편되어 왔고, 대전시의 도시 영향력 범위 또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대전시가 일류경제도시를 지향해 나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 20여 년간 축적되어온 각종 통계 자료들 가운데, KOSIS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구이동 관련 마이크로데이터와 국가교통DB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목적별 통행량 및 기준물동량 OD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대전시 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기로 한다. 또한 민선8기의 주요 시정방향이라 할 수 있는 일류경제도시에 담긴 의미를 되짚어보고, 향후 대전시가 지향해 나가야 할 도시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 지난 20여 년간의 대전시 이동량 변화

01 인구변화

대전시 인구는 지난 2000년 1,385,606명에서 전년대비 0.2~1.6%대의 꾸준한 인구증가율을 보이면서 지난 2013년 1,532,811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세종시의 출범과 수도권 지역의 규제완화, 그리고 자연인구감소(데드크로스) 등의 영향으로, 2013년 이후 매년 -0.1~-1.0%대의 인구감소율 추세를 보이면서 2021년 말 1,452,251명까지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향후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1〉 대전시 인구변화 추이



1) 인구이동 추이 분석

① 총전출 분석

대전시를 기준으로 시도별 총 전출 추이를 살펴보면, 대전시 지역내에서의 전출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총전출자의 약 58.6%~6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시도별로는 2021년 기준으로 경기도로의 전출률이 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충남 6.9%, 세종시 6.4%, 서울시 6.3%, 충북 4.0%순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서울, 인천시를 포함한 수도권으로의 전출률은 전체 14.7%를 차지하였다.

충남북으로의 진출률은 약 10.9%로 나타났고,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역으로 진출률은 17.3%로 나타났으며, 경상권역은 4.0%, 호남권역은 3.3%, 강원권역은 1.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여년간 진출률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시 및 경기도의 경우 꾸준하게 5.7%~7.3%대의 진출률을 보이고 있으며, 충남의 경우 6.5%~9.0%를, 세종시는 5.7%~9.8%대를, 충북은 3.0~4.0%를, 전북과 경북이 각각 1.4%~2.2%와 0.9%~1.3%대의 진출률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1〉 대전시와 각 시도별 총전출자수 및 진출률

대전 시도간	총전출자 수					
	2001	2005	2010	2014	2018	2021
서울	17,689	16,639	15,793	14,172	14,221	13,854
부산	2,158	2,042	1,976	2,190	1,608	1,796
대구	1,796	1,940	1,757	1,818	1,525	1,502
인천	3,362	2,946	2,762	2,621	2,577	2,511
광주	1,450	1,477	1,512	1,248	1,135	1,124
대전	206,129	189,569	175,962	156,961	133,319	131,535
울산	750	715	745	909	595	601
세종	-	-	-	14,093	22,180	14,044
경기	18,375	19,258	18,022	15,189	15,399	16,071
강원	2,791	2,454	2,603	2,400	2,094	2,251
충북	8,941	8,860	8,847	8,256	7,902	8,738
충남	20,512	25,723	21,192	16,552	14,673	15,288
전북	6,687	4,768	4,300	4,116	3,358	3,703
전남	2,160	1,952	1,815	1,799	1,569	1,682
경북	2,878	3,198	3,190	2,851	2,599	2,905
경남	1,950	2,572	2,549	2,483	2,063	2,031
제주	517	512	452	739	816	860
합계	298,145	284,625	263,477	248,397	227,633	220,496

대전 시도간	총전출률					
	2001	2005	2010	2014	2018	2021
서울	0.0593	0.0585	0.0599	0.0571	0.0625	0.0628
부산	0.0072	0.0072	0.0075	0.0088	0.0071	0.0081
대구	0.0060	0.0068	0.0067	0.0073	0.0067	0.0068
인천	0.0113	0.0104	0.0105	0.0106	0.0113	0.0114
광주	0.0049	0.0052	0.0057	0.0050	0.0050	0.0051
대전	0.6914	0.6660	0.6678	0.6319	0.5857	0.5965
울산	0.0025	0.0025	0.0028	0.0037	0.0026	0.0027
세종	-	-	-	0.0567	0.0974	0.0637
경기	0.0616	0.0677	0.0684	0.0611	0.0676	0.0729
강원	0.0094	0.0086	0.0099	0.0097	0.0092	0.0102
충북	0.0300	0.0311	0.0336	0.0332	0.0347	0.0396
충남	0.0688	0.0904	0.0804	0.0666	0.0645	0.0693
전북	0.0224	0.0168	0.0163	0.0166	0.0148	0.0168
전남	0.0072	0.0069	0.0069	0.0072	0.0069	0.0076
경북	0.0097	0.0112	0.0121	0.0115	0.0114	0.0132
경남	0.0065	0.0090	0.0097	0.0100	0.0091	0.0092
제주	0.0017	0.0018	0.0017	0.0030	0.0036	0.0039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② 총전입 분석

대전시를 기준으로 시도별 총 전입 추이를 살펴보면, 대전시 지역내에서의 전입률 역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총전입자의 약 62.2%~6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외 시도별로는 2021년 기준으로 충남으로부터의 전입률이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기도 6.2%, 서울시 5.3%, 충북 4.1%, 세종시 3.5%, 전북 2.0%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서울, 인천시를 포함한 수도권으로부터의 전입률은 전체 12.6%를 차지하였다.

충남북으로의 전입률은 약 11.1%로 나타났고,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역으로부터의 전입률은 14.6%로 나타났으며, 경상권역은 5.6%, 호남권역은 3.9%, 강원권역은 1.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여년간 대전시로 전입된 전입률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시 및 경기도의 경우 꾸준하게 5.0%~6.3%대의 전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충남의 경우 7.0%~8.3%를, 세종시는 1.2%~3.5%대를, 충북은 3.3~4.1%를, 전북과 경북이 각각 1.8%~2.2%와 1.3%~1.8%대를, 그리고 경남이 1.0%~1.4%대의 전입률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2〉 대전시와 각 시도별 총전입자수 및 전입률

대전 시도간	총전입자 수					
	2001	2005	2010	2014	2018	2021
서울	15,163	14,366	13,819	13,403	11,591	11,144
부산	2,865	2,391	2,266	2,150	2,180	2,124
대구	2,561	2,528	1,956	2,254	2,067	2,239
인천	3,221	3,088	2,589	2,736	2,263	2,407
광주	1,650	1,817	1,633	1,665	1,475	1,350
대전	206,129	189,569	175,962	156,961	133,319	131,535
울산	801	846	929	839	844	843
세종	-	-	-	2,744	6,365	7,376
경기	17,846	16,201	16,368	15,187	13,412	3,056
강원	3,520	3,047	2,976	2,867	2,529	2,462
충북	10,932	10,349	8,853	8,552	7,905	8,682
충남	25,347	27,386	21,341	17,037	15,349	14,739
전북	6,699	6,372	4,814	4,572	4,634	4,219
전남	2,717	2,357	1,977	2,026	2,027	1,947
경북	4,030	4,081	3,474	3,419	3,511	3,792
경남	2,649	2,931	2,953	2,577	2,720	2,877
제주	457	506	522	570	689	773
합계	304,985	287,835	262,432	239,559	212,880	211,565

대전 시도간	총전입률					
	2001	2005	2010	2014	2018	2021
서울	0.0497	0.0499	0.0527	0.0559	0.0544	0.0527
부산	0.0094	0.0083	0.0086	0.0090	0.0102	0.0100
대구	0.0084	0.0088	0.0075	0.0094	0.0097	0.0106
인천	0.0106	0.0107	0.0099	0.0114	0.0106	0.0114
광주	0.0054	0.0063	0.0062	0.0070	0.0069	0.0064
대전	0.6759	0.6586	0.6705	0.6552	0.6263	0.6217
울산	0.0026	0.0029	0.0035	0.0035	0.0040	0.0040
세종	-	-	-	0.0115	0.0299	0.0349
경기	0.0585	0.0563	0.0624	0.0634	0.0630	0.0617
강원	0.0115	0.0106	0.0113	0.0120	0.0119	0.0116
충북	0.0358	0.0360	0.0337	0.0357	0.0371	0.0410
충남	0.0831	0.0951	0.0813	0.0711	0.0721	0.0697
전북	0.0220	0.0221	0.0183	0.0191	0.0218	0.0199
전남	0.0089	0.0082	0.0075	0.0085	0.0095	0.0092
경북	0.0132	0.0142	0.0132	0.0143	0.0165	0.0179
경남	0.0087	0.0102	0.0113	0.0108	0.0128	0.0136
제주	0.0015	0.0018	0.0020	0.0024	0.0032	0.0037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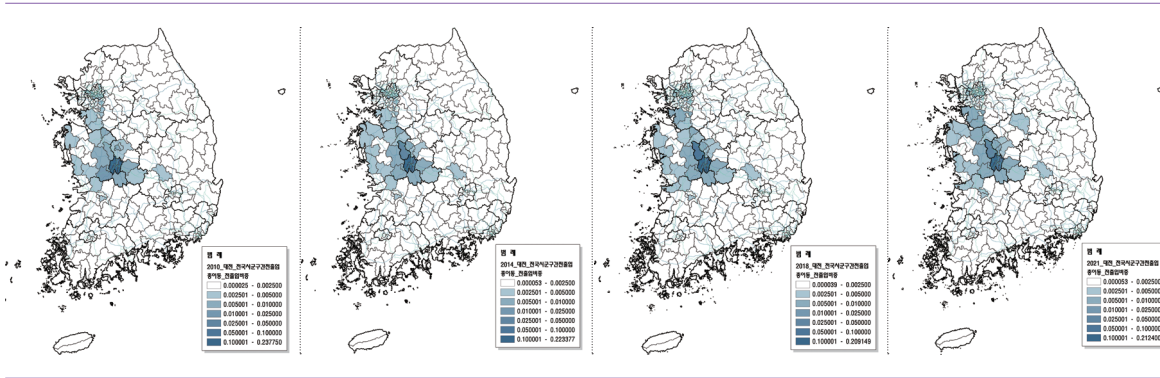
③ 총전출입 비중 분석

다음은 대전시를 기준으로 각 시도별로 전출된 전출자 수와 각 시도로부터 전입된 전입자 수를 합친 총 전출입 비중을 살펴보면, 대전시 지역내에서의 전출입자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총전출입자의 약 60.9%~6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외 시도별로는 2021년 기준으로 충남과의 전출입 비중이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기도 6.7%, 서울시 5.8%, 세종시 5.0%, 충북 4.0%, 전북 1.8%, 경북 1.6%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서울, 인천시를 포함한 수도권으로부터의 전출입 비중은 전체 13.7%를 차지하였다.

충남북으로의 전출입 비중은 약 11.0%로 나타났고,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역으로부터의 전출입 비중은 16.0%로 나타났으며, 경상권역은 4.8%, 호남권역은 3.6%, 강원권역은 1.1%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여 년간 대전시와 각 시도간의 전출입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시 및 경기도의 경우 꾸준하게 5.4%~6.7%대의 전출입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지역으로의 전출입 비중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충남의 경우 6.8%~9.3%를, 전북은 1.7%~2.2%대를 보이고 있으나, 충남과 전북의 비중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종시는 3.5%~6.5%대를, 경북과 경남은 각각 1.1%~1.6%와 0.8%~1.1%대로서 비중은 낮으나 꾸준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요약해 보면, 대전시의 전통적인 인구 유출입 지역이었던 충청권역과 호남권역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지역으로의 유출입 비중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남권역과의 전출입자수는 정체 내지 다소 줄어드는 양태를 보이고 있으나, 오히려 유출입 비중은 근소한 차이기는 하나 다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대전시와 각 시군구간 전출입 비중 변화(2010, 2014, 2018, 2021년)



〈표 3〉 대전시와 각 시도별 총전출입자수 및 전출입 비중

대전 시도간	총전출입자수					
	2001	2005	2010	2014	2018	2021
서울	32,852	31,005	29,612	27,575	25,812	24,998
부산	5,023	4,433	4,242	4,340	3,788	3,920
대구	4,357	4,468	3,713	4,072	3,592	3,741
인천	6,583	6,034	5,351	5,357	4,840	4,918
광주	3,100	3,294	3,145	2,913	2,610	2,474
대전	412,258	379,138	351,924	313,922	266,638	263,070
울산	1,551	1,561	1,674	1,748	1,439	1,444
세종	-	-	-	16,837	28,545	21,420
경기	36,221	35,459	34,390	30,376	28,811	29,127
강원	6,311	5,501	5,579	5,267	4,623	4,713
충북	19,873	19,209	17,700	16,808	15,807	17,420
충남	45,859	53,109	42,533	33,589	30,022	30,027
전북	13,386	11,140	9,114	8,688	7,992	7,922
전남	4,877	4,309	3,792	3,825	3,596	3,629
경북	6,908	7,279	6,664	6,270	6,110	6,697
경남	4,599	5,503	5,502	5,060	4,783	4,908
제주	974	1,018	974	1,309	1,505	1,633
합계	603,130	572,460	525,909	487,956	440,513	432,061

대전 시도간	총전출입 비중					
	2001	2005	2010	2014	2018	2021
서울	0.0545	0.0542	0.0563	0.0565	0.0586	0.0579
부산	0.0083	0.0077	0.0081	0.0089	0.0086	0.0091
대구	0.0072	0.0078	0.0071	0.0083	0.0082	0.0087
인천	0.0109	0.0105	0.0102	0.0110	0.0110	0.0114
광주	0.0051	0.0058	0.0060	0.0060	0.0059	0.0057
대전	0.6835	0.6623	0.6692	0.6433	0.6053	0.6089
울산	0.0026	0.0027	0.0032	0.0036	0.0033	0.0033
세종	-	-	-	0.0345	0.0648	0.0496
경기	0.0601	0.0619	0.0654	0.0623	0.0654	0.0674
강원	0.0105	0.0096	0.0106	0.0108	0.0105	0.0109
충북	0.0329	0.0336	0.0337	0.0344	0.0359	0.0403
충남	0.0760	0.0928	0.0809	0.0688	0.0682	0.0695
전북	0.0222	0.0195	0.0173	0.0178	0.0181	0.0183
전남	0.0081	0.0075	0.0072	0.0078	0.0082	0.0084
경북	0.0115	0.0127	0.0127	0.0128	0.0139	0.0155
경남	0.0076	0.0096	0.0105	0.0104	0.0109	0.0114
제주	0.0016	0.0018	0.0019	0.0027	0.0034	0.0038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 청년층 인구이동 추이 분석

① 총전출 분석

19~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인구이동 추이 변화를 살펴보면, 대전시 지역내에서의 청년 전출자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총전출자의 약 52.3%~6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외 시도별로는 2021년 기준으로 서울시로의 전출률이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기도 9.1%, 충남 7.1%, 세종시 5.1%, 충북 4.3%, 전북 1.9%, 경북과 인천이 각각 1.6%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서울, 인천시를 포함한 수도권지역으로의 전출률은 전체 20.7%를 차지하였다.

충남북으로의 전출입 비중은 약 11.4%로 나타났고,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역으로부터의 전출입 비중은 16.5%로 나타났으며, 경상권역은 4.9%, 호남권역은 3.7%, 강원권역은 1.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제주도 등은 모두 대전시로부터 청년층이 1% 미만의 전출률을 보이는 시도로 나타났다.

지난 20여 년간 대전시와 각 시도간의 전출률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시 및 경기도의 경우 7.0%~10.5%대의 전출률을 보이며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충남의 경우 7.0%~9.9%를, 전북은 1.6%~2.1%대를 보이고 있으나, 충남과 전북으로의 전출률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4.7%~7.8%대를, 경북과 경남은 각각 1.1%~1.6%와 0.7%~1.3%대로 전출자수는 증감추세를 보이나, 전출률은 미세하게나마 다소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대전시와 각 시도별 청년층(19~34세 이하) 총전출자수 및 전출률

대전 시도간	청년층 전출자 수					
	2001	2005	2010	2014	2018	2021
서울	8,853	8,470	7,940	8,051	8,770	8,980
부산	822	862	780	897	716	889
대구	731	855	646	698	698	797
인천	1,609	1,382	1,195	1,207	1,327	1,384
광주	572	643	585	431	481	605
대전	76,256	68,254	55,985	48,983	43,877	47,505
울산	334	318	302	426	265	341
세종	-	-	-	4,020	6,517	4,551
경기	8,121	8,788	7,469	6,497	7,095	8,168
강원	1,031	942	952	978	817	994
충북	3,822	3,853	3,377	3,312	3,278	3,872
충남	8,643	10,922	7,940	6,323	5,816	6,356
전북	2,496	1,905	1,572	1,451	1,297	1,682
전남	794	752	649	687	652	696
경북	1,298	1,492	1,363	1,223	1,132	1,417
경남	819	1,059	1,013	1,083	844	961
제주	203	207	135	232	281	292
합계	116,404	110,704	91,903	86,499	83,863	89,490

대전 시도간	청년층 전출률					
	2001	2005	2010	2014	2018	2021
서울	0.0761	0.0765	0.0864	0.0931	0.1046	0.1003
부산	0.0071	0.0078	0.0085	0.0104	0.0085	0.0099
대구	0.0063	0.0077	0.0070	0.0081	0.0083	0.0089
인천	0.0138	0.0125	0.0130	0.0140	0.0158	0.0155
광주	0.0049	0.0058	0.0064	0.0050	0.0057	0.0068
대전	0.6551	0.6165	0.6092	0.5663	0.5232	0.5308
울산	0.0029	0.0029	0.0033	0.0049	0.0032	0.0038
세종	-	-	-	0.0465	0.0777	0.0509
경기	0.0698	0.0794	0.0813	0.0751	0.0846	0.0913
강원	0.0089	0.0085	0.0104	0.0113	0.0097	0.0111
충북	0.0328	0.0348	0.0367	0.0383	0.0391	0.0433
충남	0.0743	0.0987	0.0864	0.0731	0.0694	0.0710
전북	0.0214	0.0172	0.0171	0.0168	0.0155	0.0188
전남	0.0068	0.0068	0.0071	0.0079	0.0078	0.0078
경북	0.0112	0.0135	0.0148	0.0141	0.0135	0.0158
경남	0.0070	0.0096	0.0110	0.0125	0.0101	0.0107
제주	0.0017	0.0019	0.0015	0.0027	0.0034	0.0033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② 총전입 분석

대전시를 기준으로 시도별 총 전입 추이를 살펴보면, 대전시 지역내에서의 전입률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총전입자의 약 53.1%~6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시도별로는 2021년 기준으로 충남으로부터의 전입률이 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기도 7.3%, 서울시 7.1%, 충북 5.2%, 세종시 2.9%, 전북 2.7%, 경북 2.6%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서울, 인천시를 포함한 수도권으로부터의 전입률은 전체 15.9%를 차지하였다.

충남북으로의 전입률은 약 13.7%로 나타났고,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역으로부터의 전입률은 16.6%로 나타났다. 경상권역은 7.8%, 호남권역은 5.2%, 강원권역은 1.4%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울산과 광주,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시도들에서 최소 1% 이상의 청년층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20여 년간 대전시로 전입된 전입률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시 및 경기도의 경우 꾸준히 5.4%~7.5%대의 전입률을 보이고 있으며, 충남의 경우 8.3%~11.2%를, 세종시는 1.1%~2.9%대를, 충북은 4.0~5.2%를, 전북과 경북은 각각 2.2%~2.8%와 1.6%~2.6%대를, 그리고 경남이 0.9%~1.8%대의 전입률 추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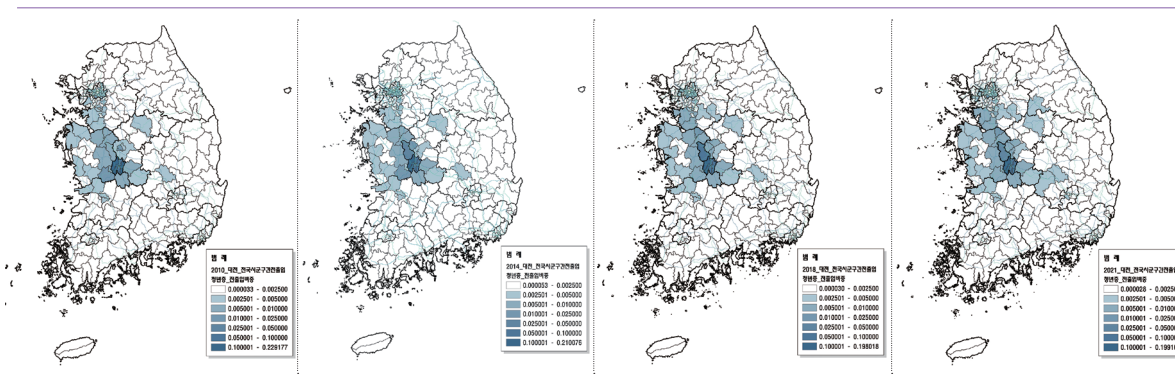
〈표 5〉 대전시와 각 시도별 청년층(19~34세 이하) 총전입자수 및 전입률

대전 시도간	청년층 전입자수					대전 시도간	청년층 전입률					
	2001	2005	2010	2014	2018		2021	2001	2005	2010	2014	2018
서울	6,845	6,645	6,156	6,279	5,862	6,381	0.0572	0.0591	0.0674	0.0747	0.0729	0.0713
부산	1,253	1,101	974	944	1,048	1,194	0.0105	0.0098	0.0107	0.0112	0.0130	0.0133
대구	1,139	1,137	795	951	1,022	1,311	0.0095	0.0101	0.0087	0.0113	0.0127	0.0146
인천	1,333	1,341	1,084	1,160	1,087	1,322	0.0111	0.0119	0.0119	0.0138	0.0135	0.0148
광주	780	831	656	720	759	775	0.0065	0.0074	0.0072	0.0086	0.0094	0.0087
대전	76,256	68,254	55,985	48,983	43,877	47,505	0.6370	0.6068	0.6129	0.5826	0.5454	0.5307
울산	360	368	373	386	425	511	0.0030	0.0033	0.0041	0.0046	0.0053	0.0057
세종	-	-	-	943	2,055	2,603	-	-	-	0.0112	0.0255	0.0291
경기	6,507	6,724	6,194	6,082	6,027	6,564	0.0544	0.0598	0.0678	0.0723	0.0749	0.0733
강원	1,310	1,163	1,060	1,115	1,114	1,275	0.0109	0.0103	0.0116	0.0133	0.0138	0.0142
충북	4,905	4,939	3,681	3,612	3,644	4,638	0.0410	0.0439	0.0403	0.0430	0.0453	0.0518
충남	11,804	12,642	8,552	6,993	6,866	7,636	0.0986	0.1124	0.0936	0.0832	0.0853	0.0853
전북	2,881	2,806	1,968	1,902	2,273	2,404	0.0241	0.0249	0.0215	0.0226	0.0283	0.0269
전남	1,126	1,045	793	892	1,018	1,111	0.0094	0.0093	0.0087	0.0106	0.0127	0.0124
경북	1,895	2,049	1,646	1,716	1,777	2,322	0.0158	0.0182	0.0180	0.0204	0.0221	0.0259
경남	1,109	1,255	1,241	1,211	1,328	1,642	0.0093	0.0112	0.0136	0.0144	0.0165	0.0183
제주	208	189	186	184	268	327	0.0017	0.0017	0.0020	0.0022	0.0033	0.0037
합계	119,711	112,489	91,344	84,073	80,450	89,521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③ 총전출입 분석

다음은 대전시를 기준으로 각 시도별로 전출된 청년층의 전출자 수와 각 시도로부터 전입된 청년층의 전입자 수를 합친 총 전출입 비중을 살펴보면, 대전시 지역내에서의 청년층 전출입자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총전출입자의 약 53.1%~6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외 시도별로는 2021년 기준으로 서울시와의 전출입 비중이 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기도 8.2%, 충남 7.8%, 충북 4.8%, 세종시 4.0%, 전북 2.3%, 경북 2.1%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서울, 인천시를 포함한 수도권으로부터의 전출입 비중은 전체 18.3%를 차지하였다.

〈그림 3〉 대전시와 각 시군구간 청년층 전출입 비중 변화(2010, 2014, 2018, 2021년)



충남북으로의 전출입 비중은 약 12.6%로 나타났고,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권역으로부터의 전출입 비중은 16.6%로 나타났으며, 경상권역은 6.4%, 호남권역은 4.4%, 강원권역은 1.3%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여년간 대전시와 각 시도간의 전출입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시 및 경기도의 경우 꾸준하게

6.2%~8.9%대의 전출입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지역으로의 전출입 비중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충남의 경우 7.7%~10.6%를, 전북은 1.9%~2.3%대를 보이고 있으나, 충남과 전북의 비중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종시는 2.9%~5.2%대를, 경북과 경남은 각각 1.4%~2.1%와 0.8%~1.5%대로서 비중은 낮으나 꾸준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6〉 대전시와 각 시도별 청년층(19~34세 이하) 총전입자수 및 전입률

대전 시도간	청년층 전출입자 수					
	2001	2005	2010	2014	2018	2021
서울	15,698	15,115	14,096	14,330	14,632	15,361
부산	2,075	1,963	1,754	1,841	1,764	2,083
대구	1,870	1,992	1,441	1,649	1,720	2,108
인천	2,942	2,723	2,279	2,367	2,414	2,706
광주	1,352	1,474	1,241	1,151	1,240	1,380
대전	152,512	136,508	111,970	97,966	87,754	95,010
울산	694	686	675	812	690	852
세종	-	-	-	4,963	8,572	7,154
경기	14,628	15,512	13,663	12,579	13,122	14,732
강원	2,341	2,105	2,012	2,093	1,931	2,269
충북	8,727	8,792	7,058	6,924	6,922	8,510
충남	20,447	23,564	16,492	13,316	12,682	13,992
전북	5,377	4,711	3,540	3,353	3,570	4,086
전남	1,920	1,797	1,442	1,579	1,670	1,807
경북	3,193	3,541	3,009	2,939	2,909	3,739
경남	1,928	2,314	2,254	2,294	2,172	2,603
제주	411	396	321	416	549	619
합계	236,115	223,193	183,247	170,572	164,313	179,011

대전 시도간	청년층 전출입 비중					
	2001	2005	2010	2014	2018	2021
서울	0.0665	0.0677	0.0769	0.0840	0.0890	0.0858
부산	0.0088	0.0088	0.0096	0.0108	0.0107	0.0116
대구	0.0079	0.0089	0.0079	0.0097	0.0105	0.0118
인천	0.0125	0.0122	0.0124	0.0139	0.0147	0.0151
광주	0.0057	0.0066	0.0068	0.0067	0.0075	0.0077
대전	0.6459	0.6116	0.6110	0.5743	0.5341	0.5307
울산	0.0029	0.0031	0.0037	0.0048	0.0042	0.0048
세종	-	-	-	0.0291	0.0522	0.0400
경기	0.0620	0.0695	0.0746	0.0737	0.0799	0.0823
강원	0.0099	0.0094	0.0110	0.0123	0.0118	0.0127
충북	0.0370	0.0394	0.0385	0.0406	0.0421	0.0475
충남	0.0866	0.1056	0.0900	0.0781	0.0772	0.0782
전북	0.0228	0.0211	0.0193	0.0197	0.0217	0.0228
전남	0.0081	0.0081	0.0079	0.0093	0.0102	0.0101
경북	0.0135	0.0159	0.0164	0.0172	0.0177	0.0209
경남	0.0082	0.0104	0.0123	0.0134	0.0132	0.0145
제주	0.0017	0.0018	0.0018	0.0024	0.0033	0.0035
합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요약해 보면, 대전시의 전통적인 청년층 유출입 지역이었던 충청권역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거나 정체 중에 있는 반면, 수도권지역으로의 유출입 비중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영남권역과 호남권역은 근소하게나마 다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과 광주, 제주도와와의 유출입 비중은 지난 20여년간 1%대 미만으로 나타났다.

02 통행량 변화

1) 총통행량 유출률

지난 2005~2019년까지 대전시와 전국 시군구간의 목적별 통행량을 합산한 총통행량 기준으로 대전시로부터의 유출률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대전시 서구에서의 통행량 유출률이 27.1%로 가장 높았고, 대전시 중구, 대전시 동구, 대전시 유성구, 대전시 대덕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관외 지역으로는 계룡시, 논산시, 공주시, 금산군, 천안시, 옥천군, 연기군 순으로 유출률이 높게 나타났다. 충북지역 중 옥천군과 청주시 흥덕구를 제외하고는 유출률이 0.2% 미만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9년에는 대전시 서구, 대전시 유성구, 대전시 중구, 대전시 동구, 대전시 대덕구 순으로 통행량 유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외 지역으로는 세종시, 금산군, 공주시, 옥천군, 논산시, 청주시 상당구, 계룡시, 청주시 청원구, 청주시 서원구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대전시 기준 시군구단위 연도별 총통행량 유출률 순위

순위	2005		2010		2015		2019	
1	대전 서구	0.2713	대전 서구	0.3072	대전 서구	0.2947	대전 서구	0.3011
2	대전 중구	0.2034	대전 유성구	0.1669	대전 유성구	0.2117	대전 유성구	0.2167
3	대전 동구	0.1710	대전 중구	0.1645	대전 중구	0.1376	대전 중구	0.1361
4	대전 유성구	0.1463	대전 동구	0.1333	대전 동구	0.1152	대전 동구	0.1196
5	대전 대덕구	0.1316	대전 대덕구	0.1228	대전 대덕구	0.1052	대전 대덕구	0.0960
6	계룡시	0.0078	청원군	0.0145	세종시	0.0131	세종시	0.0342
7	논산시	0.0057	금산군	0.0103	금산군	0.0104	금산군	0.0087
8	공주시	0.0047	공주시	0.0063	옥천군	0.0082	공주시	0.0083
9	금산군	0.0045	계룡시	0.0050	공주시	0.0074	옥천군	0.0066
10	천안시	0.0045	옥천군	0.0048	논산시	0.0063	논산시	0.0050
11	옥천군	0.0031	논산시	0.0041	청주시 서원구	0.0061	청주시 상당구	0.0046
12	연기군	0.0029	연기군	0.0029	계룡시	0.0058	계룡시	0.0040
13	청주시 흥덕구	0.0021	천안시 서북구	0.0027	청주시 상당구	0.0056	청주시 청원구	0.0036
14	서울 중구	0.0020	천안시 동남구	0.0024	천안시 서북구	0.0055	청주시 흥덕구	0.0031
15			청주시 흥덕구	0.0023	청주시 흥덕구	0.0046	청주시 서원구	0.0026
16					천안시 동남구	0.0044		
17					청주시 청원구	0.0025		
18					부여군	0.0023		

2) 총통행량 유입률

지난 2005년과 2019년 자료를 비교해 보면, 대전 유성구와 세종시, 옥천군으로부터의 통행량 유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반해 청주시로부터의 통행량 유입률은 2015년에 가장 높은 유입률이 나타난 이후 2019년에는 유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고, 천안시로부터의 유입률은 0.2% 미만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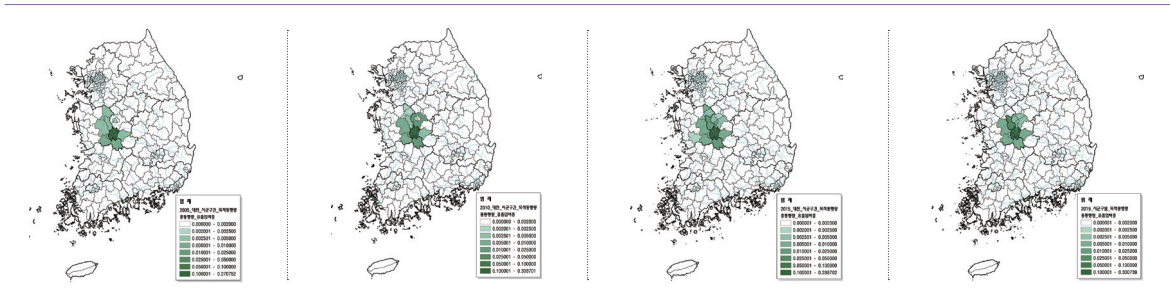
〈표 8〉 대전시 기준 시군구단위 연도별 총통행량 유입률 순위

순위	2005		2010		2015		2019	
1	대전 서구	0.2713	대전 서구	0.3002	대전 서구	0.2827	대전 서구	0.3004
2	대전 중구	0.2086	대전 유성구	0.1671	대전 유성구	0.2070	대전 유성구	0.2183
3	대전 동구	0.1637	대전 중구	0.1636	대전 중구	0.1409	대전 중구	0.1356
4	대전 유성구	0.1426	대전 동구	0.1346	대전 동구	0.1187	대전 동구	0.1287
5	대전 대덕구	0.1316	대전 대덕구	0.1229	대전 대덕구	0.1100	대전 대덕구	0.0928
6	계룡시	0.0066	금산군	0.0152	금산군	0.0146	세종시	0.0294
7	금산군	0.0065	청원군	0.0141	세종시	0.0139	금산군	0.0084
8	논산시	0.0059	공주시	0.0095	계룡시	0.0094	공주시	0.008
9	천안시	0.0054	논산시	0.0071	논산시	0.0093	옥천군	0.0071
10	공주시	0.0051	계룡시	0.0063	옥천군	0.0086	논산시	0.0051
11	연기군	0.0039	옥천군	0.0049	공주시	0.0083	청주시 청원구	0.0043
12	옥천군	0.0035	연기군	0.0028	청주시 서원구	0.0066	청주시 흥덕구	0.0042
13	청주시 흥덕구	0.0028	천안시 동남구	0.0021	청주시 흥덕구	0.0051	계룡시	0.0041
14	청주시 상당구	0.0020	천안시 서북구	0.0021	천안시 서북구	0.0046	청주시 서원구	0.0031
15					천안시 동남구	0.0037	청주시 상당구	0.0026
16					청주시 상당구	0.0028	당진시	0.0022
17					부여군	0.0020		
18					청주시 청원구	0.0020		
19					당진시	0.0020		

3) 총통행량 유출입 비중

대전시와 각 시군구간 총통행량의 유출입 비중을 주요 5년 단위로 구분하여 지도로 시각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총통행량 유출입 비중 변화(2005, 2010, 2015, 2019년)



지난 2019년 기준으로 대전시 5개구 내에서는 서구, 유성구, 중구, 동구, 대덕구 순으로 통행량 유출입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관외 지역에서는 세종시, 금산군, 공주시, 옥천군, 논산시, 계룡시, 청주시 4개구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과 2019년 자료를 비교해 보면, 총통행량 유입률과 비슷하게 대전 유성구와 세종시, 옥천군과의 통행량 유출입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청주시와의 유출입 비중은 2015년 이후로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천안시와는 0.2% 미만으로 유출입 비중이 낮아져, 통행량 기준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대전시가 주변 도시간에 미치는 도시 영향력 범위는 과거에 비해 다소 축소된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대전시 기준 각 시군구단위 연도별 총통행량 유출입 비중 순위

순위		2005		2010		2015		2019
1	대전 서구	0.2708	대전 서구	0.3037	대전 서구	0.2887	대전 서구	0.3007
2	대전 중구	0.2060	대전 유성구	0.1670	대전 유성구	0.2093	대전 유성구	0.2175
3	대전 동구	0.1674	대전 중구	0.1641	대전 중구	0.1392	대전 중구	0.1358
4	대전 유성구	0.1444	대전 동구	0.1340	대전 동구	0.1169	대전 동구	0.1242
5	대전 대덕구	0.1316	대전 대덕구	0.1228	대전 대덕구	0.1076	대전 대덕구	0.0944
6	계룡시	0.0072	청원군	0.0143	세종시	0.0135	세종시	0.0318
7	논산시	0.0058	금산군	0.0127	금산군	0.0125	금산군	0.0086
8	금산군	0.0055	공주시	0.0079	옥천군	0.0084	공주시	0.0081
9	천안시	0.0050	계룡시	0.0057	공주시	0.0078	옥천군	0.0068
10	공주시	0.0049	논산시	0.0056	논산시	0.0078	논산시	0.0051
11	연기군	0.0034	옥천군	0.0048	계룡시	0.0076	계룡시	0.0040
12	옥천군	0.0033	연기군	0.0029	청주시 서원구	0.0063	청주시 청원구	0.0040
13	청주시 흥덕구	0.0025	천안시 서북구	0.0024	천안시 서북구	0.0051	청주시 흥덕구	0.0036
14			천안시 동남구	0.0023	청주시 흥덕구	0.0049	청주시 상당구	0.0036
15			청주시 흥덕구	0.0020	청주시 상당구	0.0042	청주시 서원구	0.0029
16					천안시 동남구	0.0040		
17					청주시 청원구	0.0022		
18					부여군	0.0022		
19					당진시	0.0020		

03 물동량 변화

1) 총물동량 유출률

물동량 변화는 대전시와 전국 시군구간의 물동량 흐름 중, 최소 2.5% 이상의 유출률, 유입률, 유출입 비 중을 보이고 있는 시군구 중심으로 총물동량 및 품목별 물동량을 정리하였다.

지난 2005년 기준으로 총물동량의 유출률 순위는 대전시 대덕구, 대전시 서구, 부산시 동구, 대전시 동구, 청주시 흥덕구, 대전시 중구, 청원군, 천안시, 대전시 유성구, 연기군 순으로 나타났으나, 2020년에는 대전시 서구, 대전시 대덕구, 부산시 남구, 대전시 동구, 대전시 중구, 부산시 강서구 순으로 나타났다.

〈표 10〉 대전시 기준 각 시군구 단위 연도별 총물동량 유출률 순위

순위	2005		2010		2015		2020	
1	대전 대덕구	0.0940	대전 서구	0.1062	대전 서구	0.1375	대전 서구	0.1142
2	대전 서구	0.0689	대전 대덕구	0.0938	대전 대덕구	0.1058	대전 대덕구	0.0879
3	부산 동구	0.0633	부산 중구	0.0828	부산 남구	0.0912	부산 남구	0.0726
4	대전 동구	0.0454	대전 중구	0.0695	대전 유성구	0.0900	대전 유성구	0.0667
5	청주시 흥덕구	0.044	대전 유성구	0.0658	대전 동구	0.0649	대전 동구	0.0658
6	대전 중구	0.0393	대전 동구	0.0559	부산 강서구	0.0593	대전 중구	0.0507
7	청원군	0.0320	청주 흥덕구	0.0383	대전 중구	0.0591	부산 강서구	0.0456
8	천안시	0.0305						
9	대전 유성구	0.0295						
10	연기군	0.0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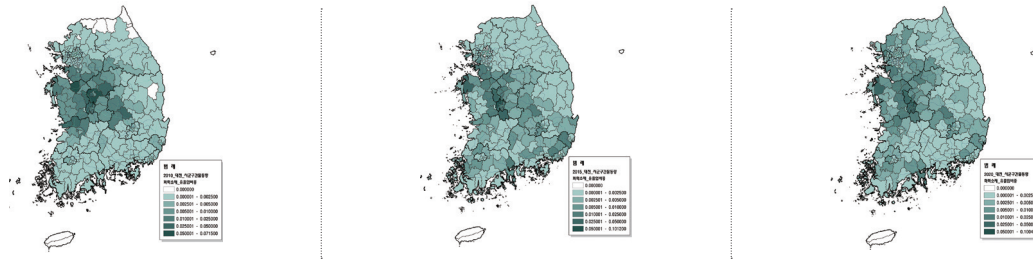
2) 총물동량 유입률

지난 2005년 기준으로 총물동량의 유입률 순위는 대전시 대덕구, 대전시 유성구, 대전시 서구, 군산시, 대전시 동구, 청원군, 청주시 흥덕구, 익산시, 대전시 중구, 양산시 순으로 나타났으나, 2020년에는 대전시 대덕구, 대전시 서구, 대전시 동구, 대전시 유성구, 세종시, 평택시 순으로 나타났다.

〈표 11〉 대전시 기준 각 시군구 단위 연도별 총물동량 유입률 순위

순위	2005		2010		2015		2020	
1	대전 대덕구	0.0859	대전 대덕구	0.0686	대전 대덕구	0.0666	대전 대덕구	0.0830
2	대전 유성구	0.0580	아산시	0.0545	평택시	0.0460	대전 서구	0.0329
3	대전 서구	0.0419	청원군	0.0485	화성시	0.0411	대전 동구	0.0321
4	군산시	0.0339	군산시	0.0362	군산시	0.0395	대전 유성구	0.0318
5	대전 동구	0.0326	연기군	0.0350	대전 유성구	0.0319	세종시	0.0306
6	청원군	0.0315	청주 흥덕구	0.0315	파주시	0.0304	평택시	0.0271
7	청주시 흥덕구	0.0306	괴산군	0.0314	용인시 처인구	0.0279		
8	익산시	0.0296	익산시	0.0275	인천 중구	0.0274		
9	대전 중구	0.0269	구미시	0.0266	대전 서구	0.0259		
10	양산시	0.0268						

〈그림 6〉 화학소재 관련 물동량 유출입 비중(2010, 2015,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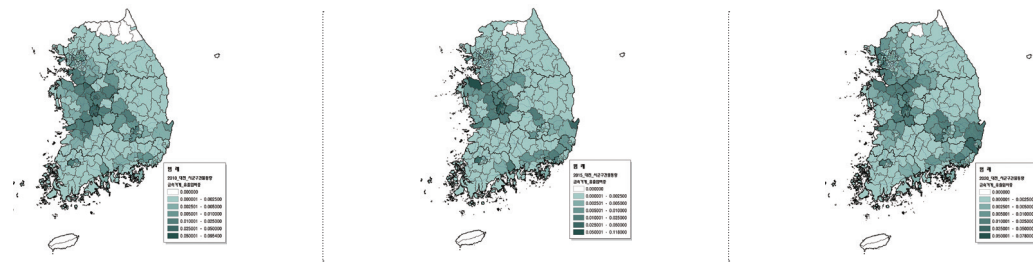


〈표 13〉 대전시 기준 각 시군구 단위 연도별 화학소재품 관련 유출입 비중

순위	2005		2010		2015		2020	
1	대전 대덕구	0.1019	아산시	0.0715	대전 대덕구	0.1012	대전 대덕구	0.1004
2	대전 유성구	0.08	대전 대덕구	0.0606	대전 유성구	0.0517	대전 서구	0.0496
3	대전 서구	0.0727	청원군	0.0536	금산군	0.0471	세종시	0.0343
4	청원군	0.0468	연기군	0.0455	서산시	0.0412	대전 동구	0.0329
5	청주시 흥덕구	0.0451	괴산군	0.0372	세종시	0.0367	서산시	0.0313
6	연기군	0.0425	대전 서구	0.037	대전 서구	0.0338	대전 중구	0.0274
7	대전 중구	0.0358	청주 흥덕구	0.035			대전 유성구	0.0253
8	대전 동구	0.0344	구미시	0.0321				
9	천안시	0.0283	군산시	0.0303				
10	익산시	0.0283	익산시	0.0291				
11	아산시	0.0252	대전 유성구	0.0253				

금속가공·기계장비제조품의 경우, 지난 2005년에는 대전시 대덕구, 대전시 동구, 천안시, 청주시 흥덕구 순으로 물동량 유출입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2020년에는 대전시 대덕구, 대전시 유성구, 울산시 울주군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7〉 금속기계 관련 물동량 유출입 비중(2010, 2015,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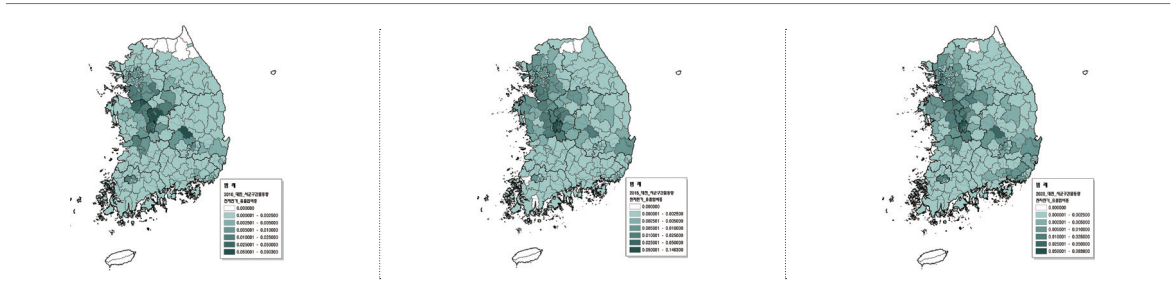


〈표 14〉 대전시 기준 각 시군구 단위 연도별 금속기계품 관련 물동량 유출입 비중

순위	2005		2010		2015		2020	
1	대전 대덕구	0.1296	대전 대덕구	0.0954	대전 대덕구	0.1180	대전 대덕구	0.0780
2	대전 동구	0.0715	대전 유성구	0.0421	당진시	0.0995	대전 유성구	0.0325
3	천안시	0.0349	대전 중구	0.0402	대전 유성구	0.0898	울산 울주군	0.0269
4	청주시 흥덕구	0.0288	대전 서구	0.0389	대전 서구	0.0437		
5			대전 동구	0.0346	포항시 남구	0.0344		
6			청주 흥덕구	0.0254	광주 광산구	0.0307		
7			천안 서북구	0.0251				

전자부품·전기장비제품의 경우, 지난 2005년에는 청주시 흥덕구, 천안시, 구미시, 대전시 대덕구, 청원군, 대전시 서구, 평택시 순으로 물동량 유출입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2020년에는 대전시 유성구, 대전시 대덕구, 대전시 서구, 청주시 흥덕구, 천안시 서북구, 구미시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전기전자부품 관련 물동량 유출입 비중(2010, 2015,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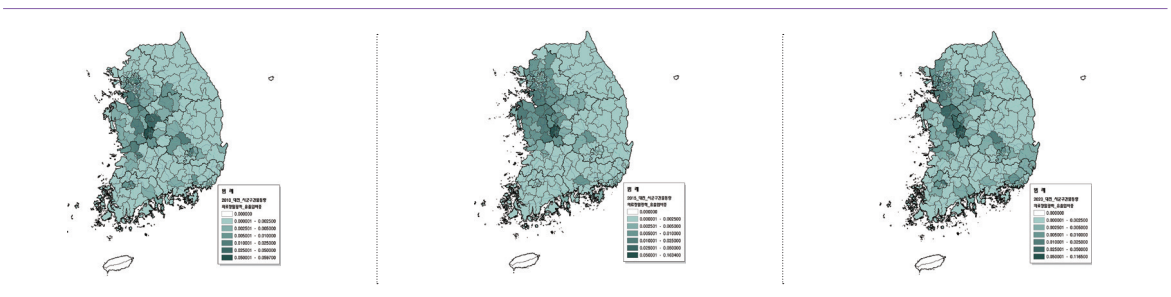


〈표 15〉 대전시 기준 각 시군구 단위 연도별 전기전자제품 관련 유출입 비중

순위	2005		2010		2015		2020	
1	청주시 흥덕구	0.0731	청주 흥덕구	0.0903	대전 유성구	0.1463	대전 유성구	0.0838
2	천안시	0.0715	천안 서북구	0.0682	대전 대덕구	0.0931	대전 대덕구	0.0598
3	구미시	0.0498	청원군	0.0568	대전 서구	0.0727	대전 서구	0.0344
4	대전 대덕구	0.0349	구미시	0.0553	대전 동구	0.0383	청주시 흥덕구	0.0294
5	청원군	0.0326	대전 유성구	0.0488	대전 중구	0.0330	천안시 서북구	0.0294
6	대전 서구	0.0272	대전 대덕구	0.0469	청주시 흥덕구	0.0258	구미시	0.0257
7	평택시	0.0251	대전 서구	0.0444				
8			아산시	0.0380				
9			대전 중구	0.0260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기계 제조업제품의 경우, 지난 2005년에는 청원군, 대전시 대덕구, 대전시 서구, 대전시 중구, 대전시 유성구, 대전시 동구, 서울시 강남구 순으로 물동량 유출입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2020년에는 대전시 유성구, 대전시 대덕구, 대전시 서구, 천안시 서북구, 세종시, 아산시, 대전시 중구, 대전시 동구 순으로 물동량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9〉 의료정밀광학기기 관련 물동량 유출입 비중(2010, 2015,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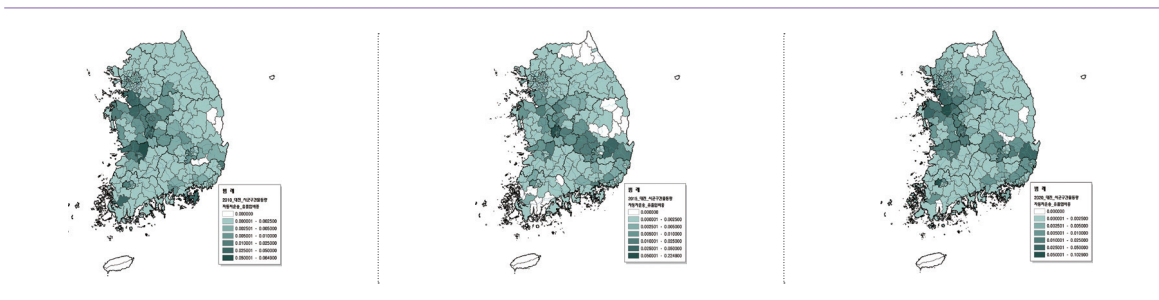


〈표 16〉 대전시 기준 각 시군구 단위 연도별 의료정밀광학품 관련 유출입 비중

순위	2005		2010		2015		2020	
1	청원군	0.0539	대전 유성구	0.0597	대전 유성구	0.1634	대전 유성구	0.1165
2	대전 대덕구	0.0509	대전 서구	0.0570	대전 대덕구	0.0717	대전 대덕구	0.0554
3	대전 서구	0.0508	대전 대덕구	0.0537	대전 서구	0.0622	대전 서구	0.0500
4	대전 중구	0.0334	대전 중구	0.0387	대전 중구	0.0429	천안시 서북구	0.0423
5	대전 유성구	0.0331	청원군	0.0343	대전 동구	0.0258	세종시	0.0312
6	대전 동구	0.0302	대전 동구	0.0281			아산시	0.0265
7	서울 강남구	0.0251	청주 흥덕구	0.0257			대전 중구	0.0264
8							대전 동구	0.0254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운송장비 제조품의 경우, 지난 2005년에는 양산시, 울산시 동구, 군산시, 대전시 대덕구, 마산시, 영암군, 완주군 순으로 물동량 유출입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나, 2020년에는 광주시 광산구, 아산시, 화성시, 천안시 서북구, 대전시 대덕구, 서산시, 평택시, 경주시 순으로 물동량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10〉 자동차 및 운송장비 관련 물동량 유출입 비중(2010, 2015, 2020년)



〈표 17〉 대전시 기준 각 시군구 단위 연도별 자동차 및 운송품 관련 유출입 비중

순위	2005		2010		2015		2020	
1	양산시	0.1641	대전 대덕구	0.0649	대전 대덕구	0.2248	광주 광산구	0.1029
2	울산 동구	0.119	완주군	0.0646	대전 유성구	0.0751	아산시	0.0873
3	군산시	0.0497	군산시	0.0498	대전 서구	0.0616	화성시	0.0486
4	대전 대덕구	0.0370	아산시	0.0465	경산시	0.0430	천안시 서북구	0.0353
5	마산시	0.0365	대전 서구	0.0358	대전 동구	0.0310	대전 대덕구	0.0346
6	영암군	0.0315	익산시	0.0345	영천시	0.0293	서산시	0.0313
7	완주군	0.0261	거제시	0.0334			평택시	0.0258
8			평택시	0.0327			경주시	0.0254
9			천안 서북구	0.032				
10			영암군	0.0309				
11			대전 중구	0.0260				
12			화성시	0.0254				

종합해 보면, 각 물동량 품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과거에 비해 총물동량의 유출입 비중은 전국단위로 좀 더 확산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화학소재, 금속기계, 전기전자부품,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자동차 및 운송 장비 등의 물동량은 과거에 비해 특정 지역과의 물동량 비중을 높이면서 집적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전반적으로 수도권과 충청북권역간의 물동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소결 및 정책적 함의

앞서 살펴보았듯이, 대전시의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뿐 아니라, 산업 측면에서도 충청권의 수부도시로서의 위상이 점차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인근의 전북 지역뿐 아니라, 일부 충청북 지역에서도 대전시의 도시 세력권에서 벗어나 점차 탈동조화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전, 세종, 청주, 천안시 등 전통적인 정부축을 중심으로 인구 및 통행, 산업물류 흐름과 집적도는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충청권의 거점 중핵도시로서의 대전시 위상과 중심성은 주변도시들을 압도할 만큼 독자적인 도시 세력권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수도권 지역으로 점차 예측화 되어 가고 있는 특성들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단적인 예로서, 대전시는 전국 인구 비율 2.82% 대비 총물동량 비중은 0.85% 수준으로서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정도로 도시 경제력 규모에 대한 체질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인다.

〈표 18〉 대전시 전국 대비 인구 비율 및 물동량 비율 비교

시도명	인구(2020)		총물동량(2020)		
	인구수	비율	유출량 비율	유입량 비율	유출입량 비율
서울시	9,668,465	18.65	3.33	4.71	4.02
부산시	3,391,946	6.54	6.79	7.90	7.35
대구시	2,418,346	4.67	2.09	1.63	1.86
인천시	2,942,828	5.68	12.00	7.38	9.69
광주시	1,450,062	2.80	1.46	1.31	1.38
대전시	1,463,882	2.82	0.59	1.11	0.85
울산시	1,136,017	2.19	6.90	8.26	7.58
경기도	13,427,014	25.91	16.10	18.94	17.52
강원도	1,542,840	2.98	4.76	3.74	4.25
충청북도	1,600,837	3.09	3.94	4.45	4.19
충청남도	2,121,029	4.09	8.47	10.08	9.28
전라북도	1,804,104	3.48	5.37	3.74	4.55
전라남도	1,851,549	3.57	11.22	9.66	10.44
경상북도	2,639,422	5.09	7.17	8.24	7.70
경상남도	3,340,216	6.44	8.30	7.67	7.98
제주도	674,635	1.30	0.51	0.51	0.51
세종시	355,831	0.69	1.02	0.67	0.84
비율합	51,829,023	100	100	100	100

III — 일류경제도시의 의미와 추진 논거

01 일류경제도시의 의미

일류(一流, First-class)라는 사전적 의미에는 어떤 방면에서 첫째가는 지위나 부류로 정의되어 있다. 1등과 같이 구체적인 숫자로 비교우위성이 명확히 갈리는 것 이외에도 무엇인가 숫자로 정할 수는 없지만, 그 분야에서 으뜸이라는 구체적 결과뿐 아니라,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고유한 가치, 품격 등이 오랜 시간과 담금질되는 과정까지를 포함하여 타인들에게 일관되고 통일된 이미지 형태로 형상화되거나 각인되었을 때 우리는 그 방면에서 보통 일류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즉, 일류라는 용어에는 어떤 방면의 특정 시점에서 객관적인 숫자에 의해 으뜸으로 구분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뿐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품격 또는 고유한 도시가치 등을 의도적으로 지향하고 그것을 인정받기까지의 지속적인 노력과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내포되어 있는 의미라 할 수 있다. 이는 타 지자체 도시들과의 경합 내지 치열한 경쟁속에서 비교우위를 누리겠다는 단순한 의지의 표상보다는 우리 대전시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와 기회라는 잠재 역량을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 대전 시민 스스로가 그 위기 및 약점과 한계를 슬기롭게 극복해 넘으로써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도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도시, 함께 꿈꾸는 미래가 현실이 되는 도시, 그런 도시를 그려나가고자 하는 시민 모두의 염원이자 우리 자신과의 기나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나갈 것이라는 의지의 표명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대전시 민선 8기의 주요 시정 목표라 할 수 있는 “일류경제도시” 역시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 상에서 그 의미를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오늘날 국내의 도시들이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위협요인 가운데 하나는 직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문제를 들 수 있다. 전형적인 전통 제조업 위주의 공업도시들뿐만 아니라, 대전시와 같이 단순 노무 및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업 비중이 월등히 높은 소비지향적 도시들은 향후 인공지능 및 로봇 등의 자동화 기기로 노동력이 대체되면서 일자리수의 급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혁신기계(Innovation Machine)이자 혁신플랫폼으로서 도시가 제공해주고 있는 많은 도시 기능들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 공급 가능 여부는 한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시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적인 척도가 되고 있다.

물론 서비스 업종뿐 아니라 전통 제조업 부문에서도 자동화 시스템 및 스마트 공장 등의 도입에 따른 일자리 감소 문제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분야에서의 고용유발효과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매우 높기 때문에 제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및 요소기술 중심의 첨단 제조업 분야에 대한 일정 비중 이상의 산업육성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표 19〉 제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별 산업 특화계수(LQ) 변화(2006, 2011, 2016년)

구분	인공지능(AI)	3D 프린팅	IoT(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클라우드 컴퓨팅
2006년	서울(3.084)	대전(4.574) 경기(2.169) 인천(1.137)	서울(1.948) 경북(1.685) 경기(1.081)	경북(1.692) 충남(1.506) 경기(1.451) 충북(1.153) 서울(1.056)	서울(2.723)	대전(2.057) 서울(1.691) 경기(1.530) 충북(1.261)	서울(3.101)
2011년	서울(2.367) 대전(1.377) 경기(1.369)	대전(2.500) 경기(2.045) 서울(1.384)	서울(1.991) 경기(1.470) 대전(1.202)	경기(1.718) 충남(1.528) 충북(1.451) 서울(1.068)	서울(2.395) 대전(1.190) 경기(1.169)	대전(2.424) 경기(2.091) 서울(1.225) 충북(1.191)	서울(2.408) 경기(1.338) 대전(1.289)
2016년	서울(2.234) 경기(1.528) 대전(1.480)	대전(2.089) 경기(2.040) 서울(1.337)	서울(2.055) 경기(1.489) 대전(1.339)	경기(1.727) 충북(1.410) 충남(1.289) 경북(1.022)	서울(2.408) 대전(1.359) 경기(1.237)	대전(2.508) 경기(2.181) 서울(1.073)	서울(2.244) 경기(1.512) 대전(1.389)

주 :연도별 LQ≥1 시도만 표기

출처 : 정경석, 충청권 상생협력을 위한 대세밸리 조성 전략 수립 정책연구, 대전TP,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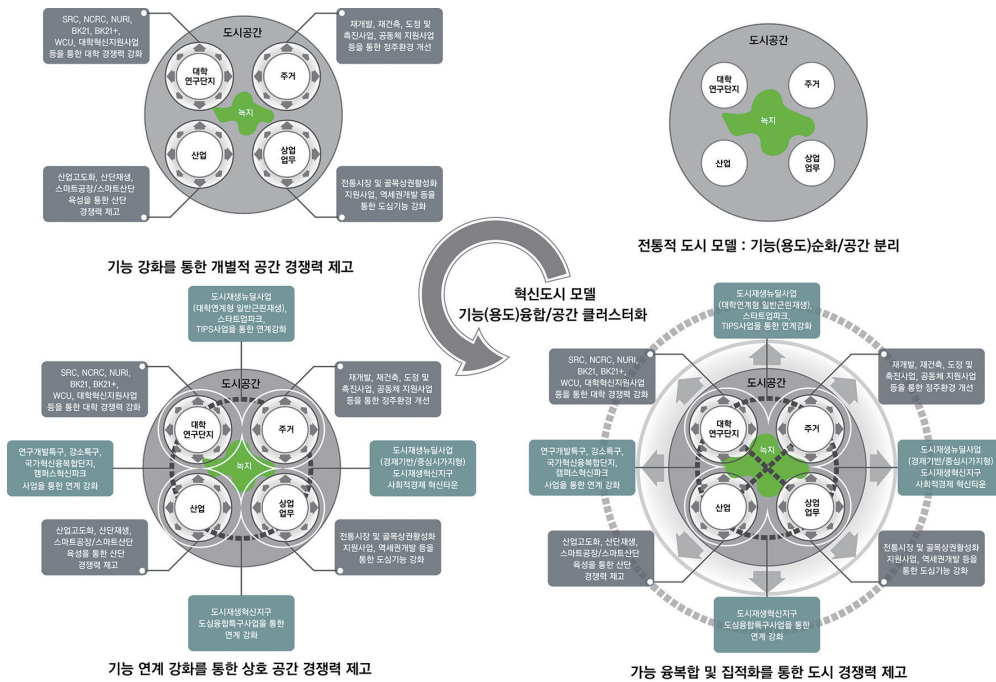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인재의 두뇌 유출을 막고, 그 지역 인재를 찾아나서는 첨단기업 내지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 내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나노소재 및 시스템반도체, 우주항공, 국방 및 로봇, 의약 및 바이오 산업 등 대전시의 주요 미래 먹거리이자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국가 위상 재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신성장 동력 산업군과 관련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내는 인큐베이팅 도시이자 산업육성 사관도시로서 도시기능의 체질 개선과 도시산업 생태계 구조를 변화시켜 나가자는 것이 “대전일류경제도시”의 주요한 핵심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창출된 경제적 이익을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행복을 위해 교육과 복지 분야 등에 골고루 재투자되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플랫폼 도시로서의 도시혁신(인재(대학), 기업, 공공, 시민 등 혁신 주체들이 선호할 수 있는 혁신적 공간 조성)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협력 활동의 증진)을 주도하고 완성해 나가고자 하는 일련의 도시변화 노력은 “대전일류경제도시”가 지향해 나가야 할 핵심적 도시가치이다.

02 일류경제도시를 지향해야 하는 이유

과거의 도시공간은 생산과 주거, 상업 공간들을 철저히 분리해 배치하는 토지용도 순화에 의한 기능적 공간 분리 및 배분이 주요 원칙이었다. 용도 간의 기능 상충을 최소화 함으로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토지의 용도를 결정하는 전략이 오랫동안 지배적으로 채택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나친 직주분리에 의한 필요 이상의 통행 동선 유발과 그것에 의한 미세먼지, 온실가스, 탄소배출 증가로 인한 대기환경 오염 문제 등 외부 불경제가 심화됨에 따라, 직주근접을 위한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의 장려를 위해 복합용도지구 내지 용도복합개발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계획법 상에서 입지규제최소구역 내지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용도혼합을 유도해 내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상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지역혁신 생태계의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지정, 산업입지법 상에서 산업단지 개발시 복합용지 제도 등을 도입한 사례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들 복합용도지구에는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과 업무 및 산업시설, 판매 등의 상업시설, 그리고 문화시설 등이 복합화된 단지 형태로 개발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업단지 역시 과거에는 대규모 장치 기반의 제조시설 및 공장들이 집적되어있는 생산 전용 단지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하도록 계획 및 조성되었으나, 최근의 산업단지는 단순히 생산거점 공간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생활공간과 문화·여가 시설들이 직주근접의 형태로 복합화되어 있는 하나의 완결된 자족도시로서 융복합도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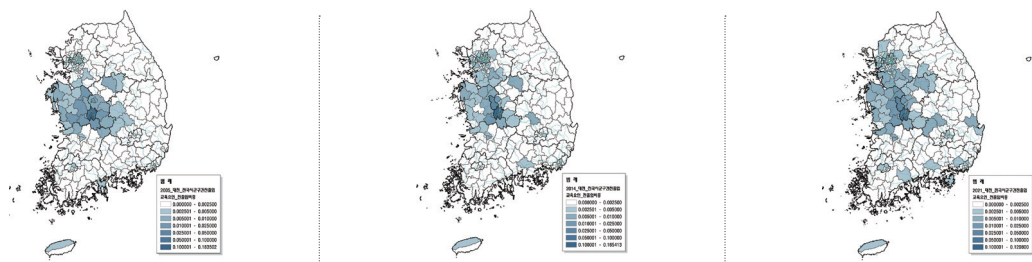
〈그림 11〉 도시공간 구조 및 기능의 변화



현재와 미래는 융합(Convergence&Collaboration)의 시대, 기술 및 이종 산업간의 융합뿐 아니라 공간 및 제도의 융합까지 확대되고 있는 양상임

주요 국내의 도시들에서 도심형의 혁신공간과 융복합형의 산업클러스터 도시 개발 사례들이 점차 늘고 있는 궁극적 이유는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디지털 혁명의 가속화, 그리고 국토의 불균형발전 심화로 지방의 젊은 청년들이 그 나라의 수도권 지역 내지 메가시티 권역으로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지역 기반 기업 및 R&D 조직, 인력 등도 역외 지역으로 급속하게 이탈하면서 지방의 혁신 주체들이 점차 고사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거나 역외 유출의 속도를 상당부분 지연시키기 위한 경제발전모델 전략의 일환으로서 지역 부동산 개발정책과 결합하거나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화해 가고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2〉 교육요인에 의한 대전시 전출입 비중 변화(2005, 2014, 2021년)



대전시는 대표적인 인재 교육도시로서 전국에서 유입되고 있는 청년층의 역유출을 최소화하고 이들 인재들이 지역내 착근될 수 있도록 하는 두뇌유출 방지책으로서의 도시전략 마련 요구

또 하나의 주요한 원인은 지역내에서 초기 창업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 기업 성장이 이뤄지면, 더 다양한 금융 지원의 기회 보장과 고급인력의 충원이 보다 용이한 수도권지역으로 이탈해 간다는 점이다. 과거 기업들의 입지 선호도는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진 비교적 저렴한 지가 지불이 가능했던 토지가 중요한 입지 결정 요인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혁신 주체들과의 공식적,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교류와 인재 채용 및 확보가 용이한 입지가 더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당면한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해 내기 위해서는 젊은 인재 및 청년들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 하고 이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정주환경 및 일자리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보다 안전한 자녀양육환경 및 수준 높은 교육·문화환경의 질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비록 현재 수도권 지역과 비견될 수는 없으나, 지방의 대도시들은 생활 환경 여건이나 교통, 문화, 교육, 의료 시설 등의 접근성 측면은 비교적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차별화된 도시발전 전략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느냐에 따라 수도권 지역과 상호 경쟁하면서 지역인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거나 청년층의 유입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유도해낼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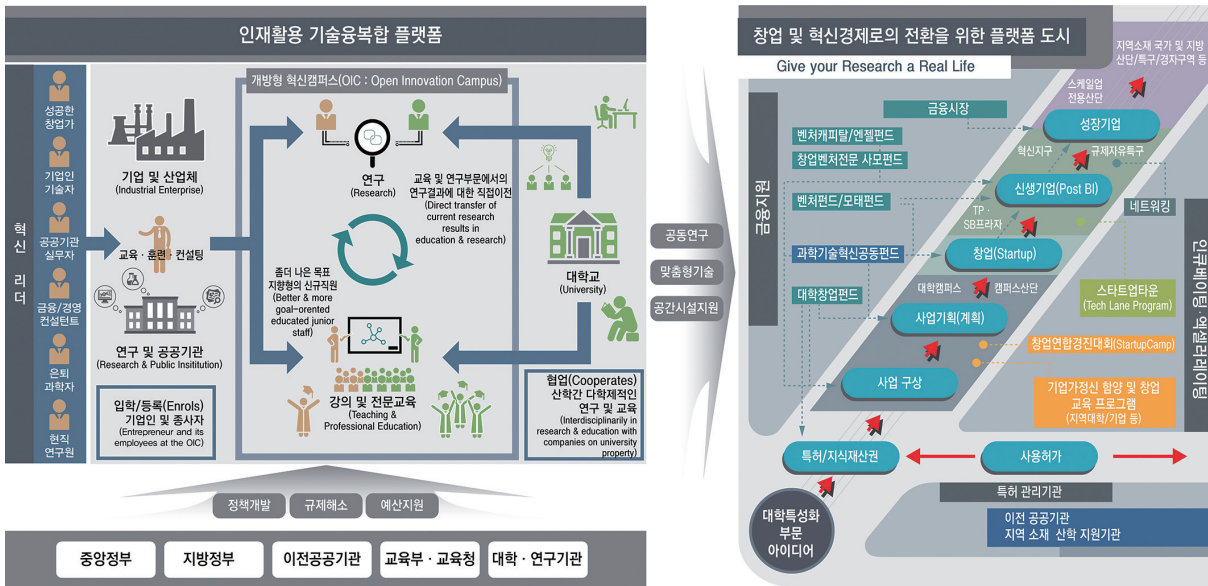
(그림 12 참조)

〈그림 13〉 도심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도심형 혁신공간 조성 예시



한편, 지속적인 인구감소의 영향 등으로 지방재정 확보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속에서 신규의 대규모 공간개발 전략보다는 버려지거나 저활용되고 있는 기존 도시공간의 업사이클링(Up-cycling)을 통해 도시 산업구조와 생태계를 기술 및 제조창업 도시로 변화시켜나가는 전략도 필요하다.(그림 13 참조) 그러나 지방대도시의 역할 재정립과 기능 재분담을 위해서는 지방대도시권역의 도시세력권(대생활권) 확대와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한 도시규모(고용 및 기업의 부가가치, GRDP 등) 및 도시 중심성을 좀더 강화해 나가는 전략도 여전히 중요하다. (그림 14 참조)

〈그림 14〉 일류경제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혁신 플랫폼 도시 개념도



대전시는 제4차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해 내는 한편, 과학기술도시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글로벌 기술 및 제조 창업도시를 지향하며, 스케일업 한 기업들이 지역내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특구, 제2 대학연구단지 등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입지 및 기업 육성 전략이 요구

대전시가 일류경제도시로 지향해 나가야 하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 수도권 지역에 비해 작지만 강한 도시, 수도권 지역과 경쟁하는 도시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궁극적으로는 세계의 주요 메가 시티들과 경쟁하고 협력하면서 상호 공존해 나갈 수 있는 글로벌 일류경제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와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수준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트리거(Trigger) 역할로서 도시 재구조화 전략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대전광역시(2022). 민선8기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백서. 민선8기 대전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 정경석(2018).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도시형 혁신공간 창출방안. 대전세종연구원
- 정경석(2019). 충청권 상생협력을 위한 대세밸리 조성 전략수립 정책연구, 대전테크노파크
- 정경석(2020). 대전 혁신도시 조성방안, 대전세종연구원
- 정경석(2021). 오정동 청사부지 활성화 방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 획 특 집 0 3

대전시 도로 및 철도 정책방향과 과제

이범규 /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 서론

대전시 교통수단분담률은 승용차 61.7%, 대중교통(버스 및 철도) 24.6%, 택시 9.3% 등으로 고비용 교통체계 구조를 갖고 있다. 부산, 대구 등 타 광역시에 비하여 대중교통분담률이 낮으며, 특히 철도교통수단의 분담률이 낮은 실정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는 탄소중립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전시도 교통체계구조를 대중교통 중심의 저비용 구조로 만들어야 하며, 우선적으로 철도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 대전시 도시철도는 2007년 1호선이 완공된 이후 현재까지 15년 동안 2호선에 대한 착공조차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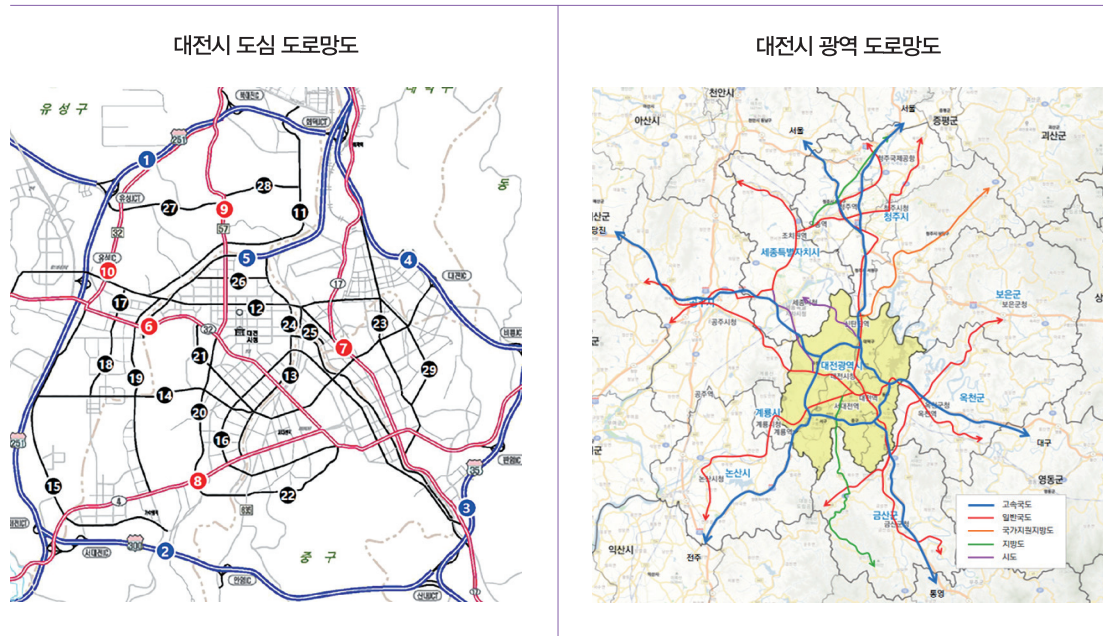
대전시 도로망 또한 도로율 등 단순지표로 볼 때 공급이 원활한 것으로 보이나, 세부적으로 보면 도로폭이 넓은 간선도로의 비율이 낮고, 특정 도로에 많은 부하가 걸리는 구조상의 문제 등을 가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민선 8기의 본격적인 출범 즈음에 대전시 도로 및 철도 교통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좀 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개선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 대전시 도로 및 철도 현황 및 문제점

01 도로 현황 및 문제점

대전시 도심의 도로망은 계백로, 계룡로, 대덕대로, 동서대로, 신탄진로 등 주요 도로가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다. 광역도로 또한 이들 도로가 연장되어 공주, 계룡(논산), 금산, 옥천, 청주, 세종 등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지역간 도로의 역할을 한다. 대전시 도로의 양적 공급수준은 인구 대비 도로연장으로 볼 때 1인당 1.52m로 서울 0.86m, 대구 1.25m보다 높은 등 울산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다.

〈그림 1〉 대전시 도로망 현황



〈표 1〉 주요 도시 도로연장 비교(2021년 기준)

구분	도로연장(km)	인구(천명)	1인당 도로연장(m)
서울	8,359	9,668	0.86
부산	3,416	3,392	1.01
대구	3,015	2,418	1.25
인천	3,317	2,943	1.13
광주	1,879	1,450	1.30
대전	2,226	1,464	1.52
울산	2,544	1,136	2.24

주: 특·광역시도, 구도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그러나 도로의 기능을 고려해서 보면 대전시 도로의 6차로 이상 비율은 46.4%로 대구 69.0%, 부산 55.5% 등에 비하여 낮은 실정이다. 즉 도로의 소통기능을 담당하는 간선도로는 적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도로의 형태로 볼 때 대전시 도심의 소통과 주변도시의 연결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계백로, 계룡로, 대덕대로, 동서대로, 신탄진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통행이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다. 고속도로의 경우 남북축 도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동서를 연결하는 동서축 고속도로가 매우 부족하다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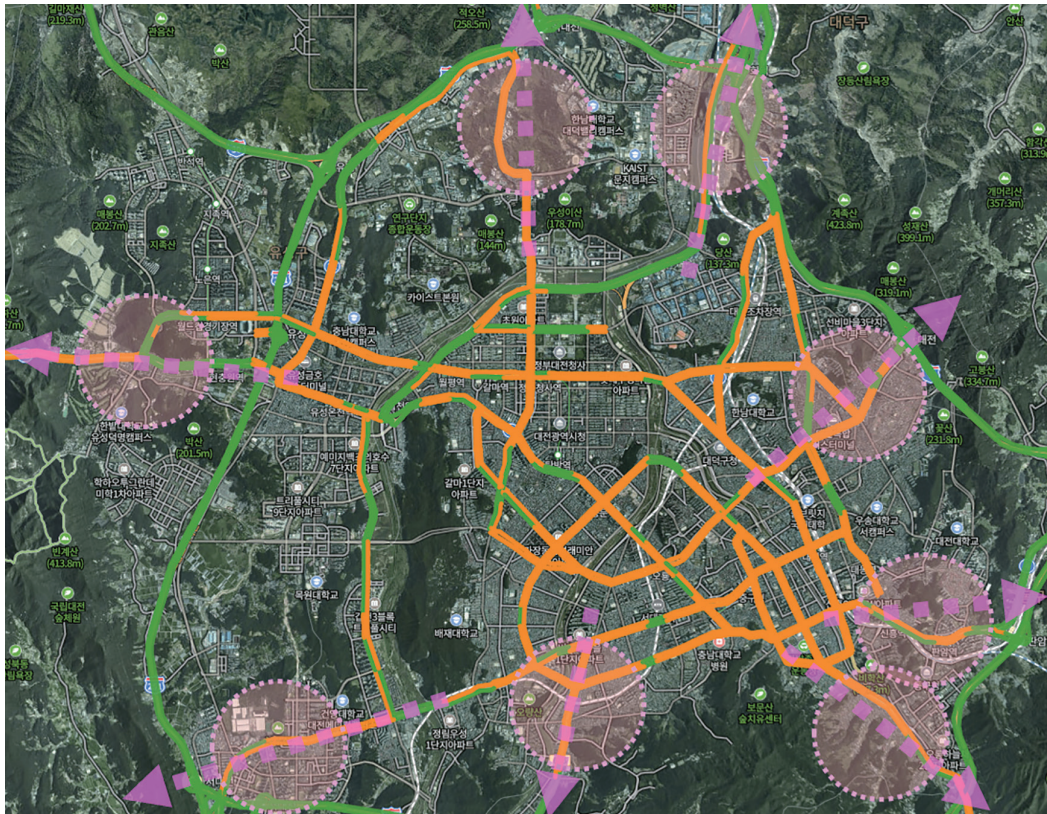
〈표 2〉 7대도시 6차로 이상 도로연장 비율 비교(2021년 기준/단위: km)

구분	2차로	4차로	6차로	8차로	10차로 이상	계	6차로 이상	6차로 이상 비율(%)
서울	71.0	339.5	355.2	226.1	61.2	1,052.9	642.4	61.0
부산	135.0	234.2	267.1	172.3	21.7	830.2	461.0	55.5
대구	-	276.7	107.9	376.5	132.6	893.7	617.0	69.0
인천	82.5	224.4	248.8	157.2	59.0	771.9	465.0	60.2
광주	17.9	250.1	144.7	161.3	4.0	578.0	310.0	53.6
대전	34.5	236.1	143.1	52.2	39.3	505.2	234.5	46.4
울산	32.2	297.8	131.3	29.7	7.9	498.9	168.9	33.9

주: 구도 제외(특·광역시도만 포함)

자료: 국토교통부 도로 및 보수현황 시스템

〈그림 2〉 대전시 주요 도로 교통혼잡지도



주: 교통혼잡지도는 대전시 교통정보센터 오후 첨두시 기준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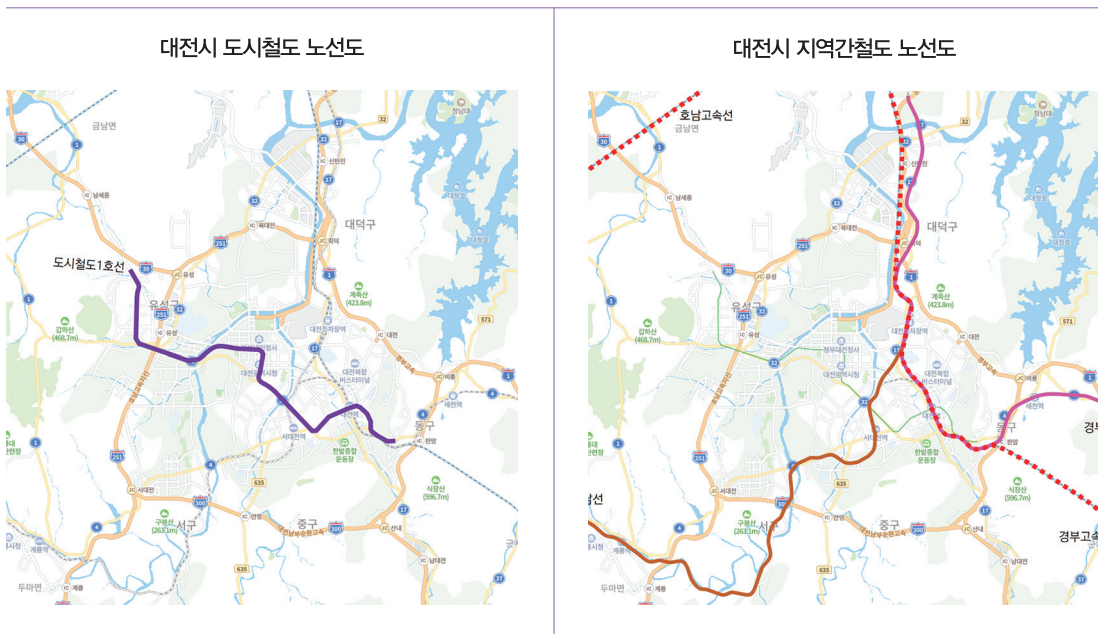
02 철도 현황 및 문제점

대전시 도시철도는 1호선이 2007년 개통되어 운행되고 있으며, 다른 노선은 아직 착공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간 철도는 경부고속철도, 경부선 및 호남선 철도가 운행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는 서대전역에서 일부 차량(1일 8회 운행)만 운행되고 있으며, 호남고속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오송역이나 남공주역을 이용해야 한다. 주변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는 충청권 광역철도사업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운행하는 노선은 없는 실정이다.

〈표 3〉 대전시 철도 현황

구분	노선명	구간	비고
고속철도	경부고속선	서울~부산	대전역
	호남고속선	오송~광주송정	오송역, 남공주역 이용 가능
일반철도	경부선	서울~부산	대전역
	호남선	대전조차장~목포	서대전역, 고속철도 8회 운행
광역철도	없음	-	
도시철도	대전도시철도1호선	판암~반석	22.7km, 22개 역

〈그림 3〉 대전시 철도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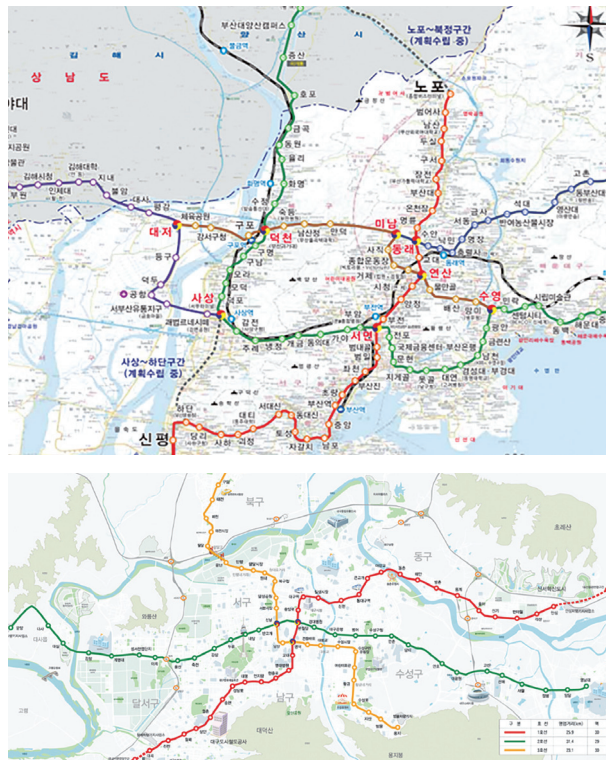
도시별 도시철도 운행규모를 보면 대전은 도시철도 1호선만 운행되고 있어 서울, 부산, 대구 등과 비교할 때 철도연장이 매우 짧다. 운행 차량수 또한 인구 1만 명당 0.14편성이 운행(총 21편성)되고 있어 서울 0.48편성, 부산 0.50편성 등에 비해 1/3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광역철도 노선 또한 대전권에는 운행 노선이 전무한 실정으로 건설이 시급하다.

〈표 4〉 국내 주요 도시 철도노선 비교(2020년 기준)

구분	노선수(개)	편성수(편성)	인구(만명)	인구만명당 차량수(편성)	연장(km)	비고
서울	13	468	970	0.48	417.5	1호선~9호선, 신분당선, 경전철 3개
부산	2	71	294	0.24	59.5	1호선~2호선
대구	5	169	339	0.50	138.4	1호선~5호선
인천	3	92	242	0.38	82.9	부산-김해경전철
광주	1	23	145	0.16	20.5	1호선~3호선
대전	1	21	146	0.14	20.5	1호선
울산	32.2	297.8	131.3	29.7	168.9	1호선

주: 철도연장은 영업거리 기준
 자료: 국가교통DB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그림 4〉 타 도시 철도망도(위: 부산, 아래: 대구)



〈표 5〉 국내 광역철도 운행 현황

기관	유형	구분	구 간	영업연장(km)	비고	
코레일	일반·광역 (101.2)	중 앙 선	청량리~덕소	17.2	2005	
		경 의 선	용산~공덕	2.5	2014	
			공덕~DMC	6.2	2012	
			DMC~문산	38.8	2009	
		분 당 선	망우~금곡	14.6	2010	
		수 인 선	의정부~동두천	21.9	2006	
	순수광역 (80.6km)	신분당선 (1단계)	왕십리~선릉	6.7	2012	
			오리~죽전	1.8	2007	
			죽전~기흥	5.9	2011	
			기흥~망포	7.3	2012	
			망포~수원	6.1	2013	
	수인선	수원~인천	52.8	2012		
	신분당선(주)	순수광역 (39.0km)	신분당선(1단계)	강남~정자	18.5	2011
	경기철도(주)		신분당선(2단계)	정자~광교	12.8	2016
	서울교통공사		하남선	상일동~검단산	7.7	2020

자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홈페이지(202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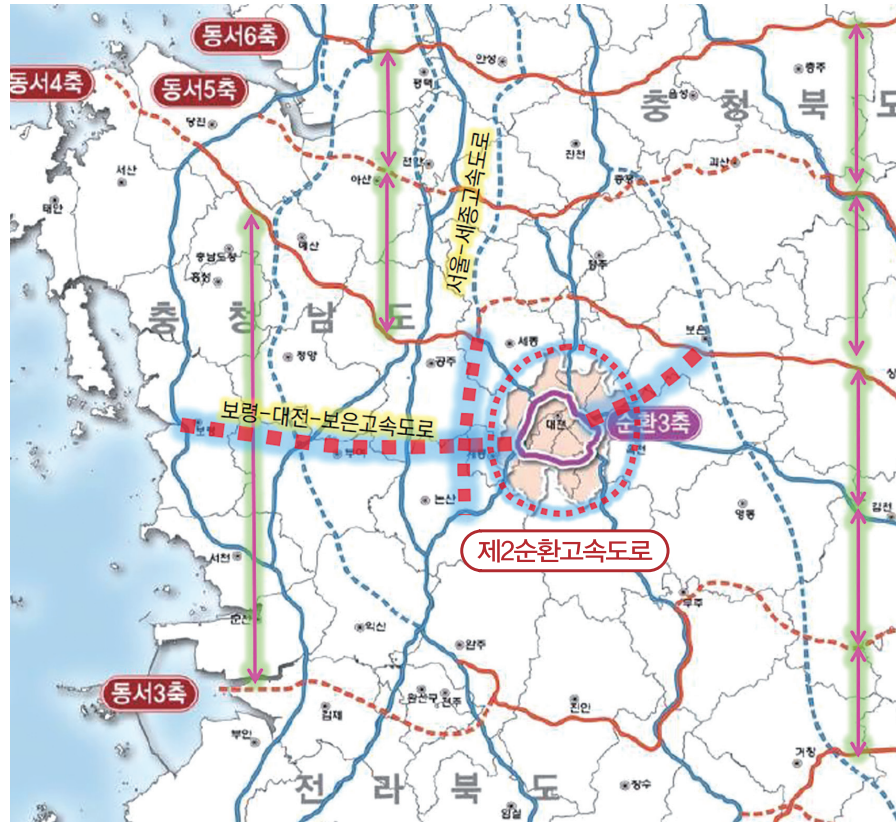
III — 대전시 도로 및 철도 정책방향과 과제

01 도로 정책방향과 과제

1) 도시내 도로

대전시 도로는 간선도로의 비율이 낮고, 계백로, 계룡로, 대덕대로, 동서대로, 신탄진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으며,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어 통행량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이들 도로의 교통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도로확장, 우회도로(대체도로) 건설, 순환도로 건설 사업 등을 우선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그림 6〉 대전권 고속도로 계획 및 추진방향



02 철도 정책방향과 과제

1) 도시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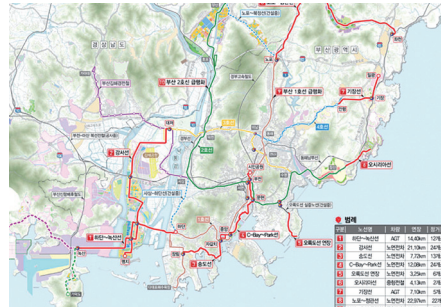
국내 주요 도시의 장래(2030 또는 2035) 도시철도망 계획을 보면 인구 1만 명당 서울은 0.432km, 부산은 0.614km로 계획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보면 인구 1만 명당 0.53km로 계획하고 있다. 타 도시의 도시철도 공급수준을 고려하여 인구 1만 명당 대전시의 공급수준을 계산해 보면 평균값 적용시에는 약 63km, 가장 많은 부산시 수준을 적용하면 약 90km가 적정 수준으로 계산된다. 대전시 도시철도 노선 중에는 용량이 적은 트램노선이 약 3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약 100km 내외가 적당한 공급수준으로 판단된다.

〈표 6〉 국내 주요 도시 철도공급 계획

구분	현황		계획		장래 도시철도 연장(km)	인구 (만명)	1만명당 장래 도시철도 연장(km)
	노선수 (개)	연장 (km)	노선수 (개)	연장 (km)			
서울	9	346.8	9	72.3	419.1	970	0.432
인천	2	59.5	6	88.9	148.4	294	0.504
부산	4	115.2	8	92.8	208.0	339	0.614
대구	3	82.9	6	55.4	138.3	242	0.571
평균							0.530

자료: 각 도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그림 7〉 타 도시 철도망 계획(위:서울 가운데:부산 아래: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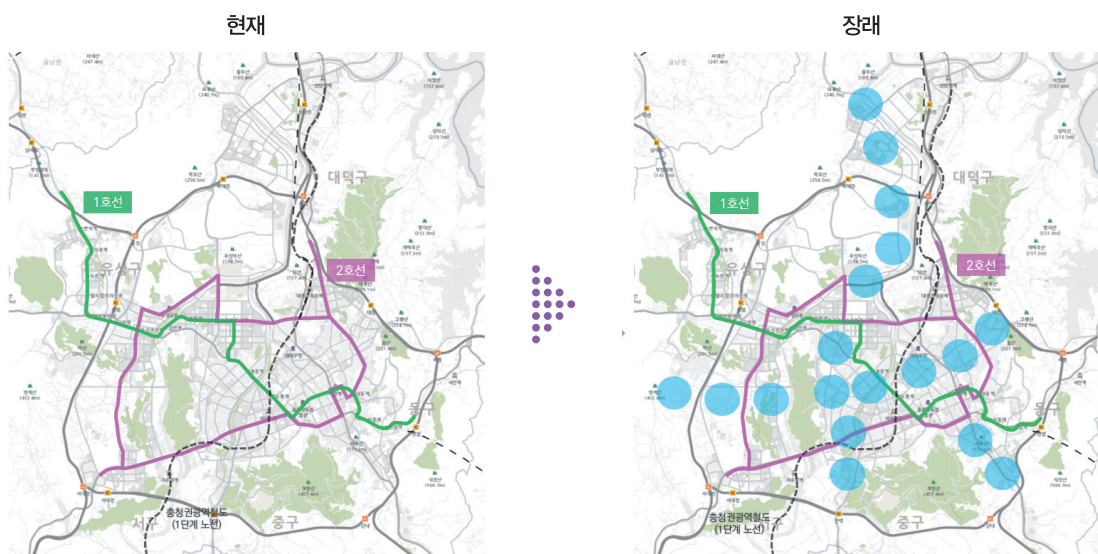


대전시 도시철도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1호선 22.7km와 추진 중인 2호선 37.8km를 포함하면 약 60.5km이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량은 약 40~45km 수준으로 판단된다. 도시철도 노선은 장래 대전시 공간구조와 도시철도망의 전체적인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대전시 전체 공간에서 도시철도가 서비스되지 않은 지역을 균형 있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연장 측면에서 볼 때 5호선까지 계획한다면 3호선 20km 내외, 4호선 15km 내외, 5호선 7km 내외 정도라 할 수 있다.

〈표 7〉 대전 도시철도 적정규모 검토

노선명	구 간	연장(km)	비 고
1호선	판암동~외삼동	22.7	운영 중
2호선	관저동~관저동	37.8	추진중
3호선		20-22	계획 미수립
4호선		15-18	계획 미수립
5호선		7	계획 미수립
계		100~105	1만명당 도시철도 연장 0.69~0.73km

〈그림 8〉 대전 도시철도 공급 필요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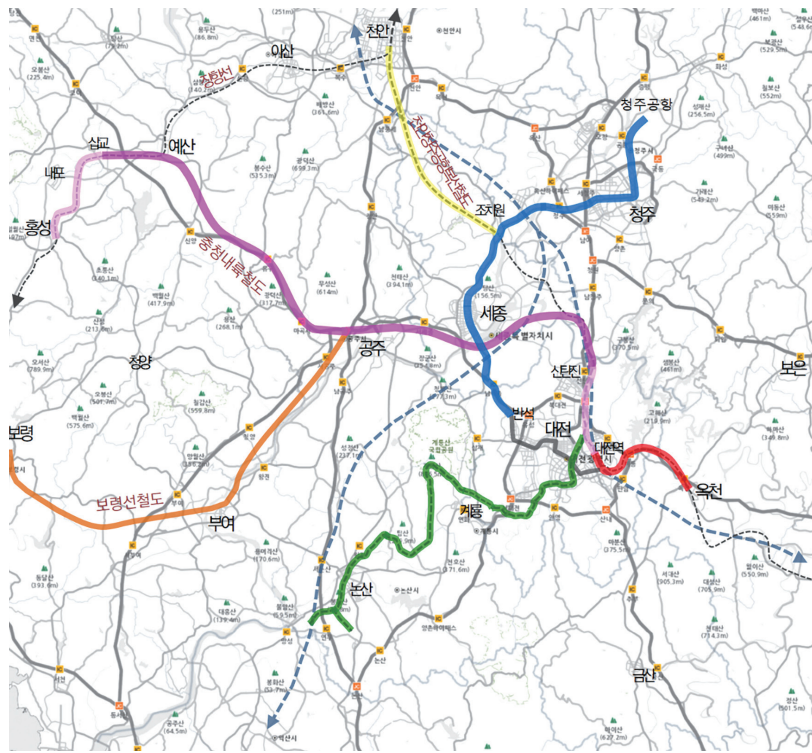
2) 광역철도

현재 대전권에 광역철도노선은 없는 실정이다. 인구 및 교통수요를 고려하면 대전, 세종, 청주를 연결하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노선이 가장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와 오정-옥천 광역철도가 건설되면 어느 정도 광역철도망의 골격은 갖추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전·세종과 서해안 지역을 연결하는 철도는 충청내륙철도, 보령선철도 등 많은 노선이 제안되고 있으나, 국가 철도망계획에 반영된 노선은 없는 상태로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을 연결할 수 있도록 노선을 압축하여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광역철도는 계획에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예타 통과, 소요재원 배분 등 향후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운영 시 많은 적자가 예상되므로 너무 많은 노선을 계획하기보다는 노선을 최대한 압축하여 관련 시도가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

〈그림 9〉 대전권 광역철도 노선망 구상



IV — 결론

대전시 도로 및 철도 교통의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대전 도심의 도로와 철도 시스템은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은 실정이다. 광역교통체계는 과거 경부선과 호남선을 중심으로 한 교통의 중심지에서 점차 타 도시와 차별성이 없어지고 있다.

대전시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편리한 도로 및 철도 교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도로와 철도 시설은 대부분 건설에 많은 자원과 시간을 요한다. 따라서 보다 빠르게 교통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도로 및 철도 노선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국가계획 반영, 예타 통과, 기관 협의, 자원 확보 등을 위한 합리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참고문헌

- 국토교통부(2021),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 국토교통부(2021),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
- 국토교통부(2022),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
- 국토교통부(2021),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대전권)
- 대전광역시(2022), 도로건설 관리계획
- 서울시(2020),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 부산시(2022),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2차)
- 대구시(2021),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 인천시(2018),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기 획 특 집 0 4

대전과 세종의 청년정책 방향과 과제

김기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 서론

청년정책은 2015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추진된 후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중앙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시행령이 수립되었고 청년정책의 총괄 및 조정기구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2020년 9월에 출범하였다. 이어서 2020년 12월에 첫 번째 청년정책기본계획이 마련되었고 2021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2021년에 임시조직으로 국무조정실에 구축되었던 청년정책추진단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직제 개편과 인력 확보에 관한 승인을 받고 사무국 역할을 하는 청년정책조정실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처럼 청년정책은 국가정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2022년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32개의 중앙행정기관이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 중이며 총 376개 과제에 24조 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정책 분야로 발돋움 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2). 지자체 역시 2015년부터 청년정책이 추진되어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청년정책 행정부서를 마련하는 한편, 중간지원조직과 청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면서 지자체 청년센터와 청년공간을 설치하였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청년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재정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선거로 새롭게 지자체장이 선출되어 지역에서도 청년정책의 향후 방향과 과제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글에서는 중앙정부부터 청년정책 추진 현황과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 방향을 살펴본 후 대전과 세종의 청년정책에 대한 진단에 이어 향후 청년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의 현황과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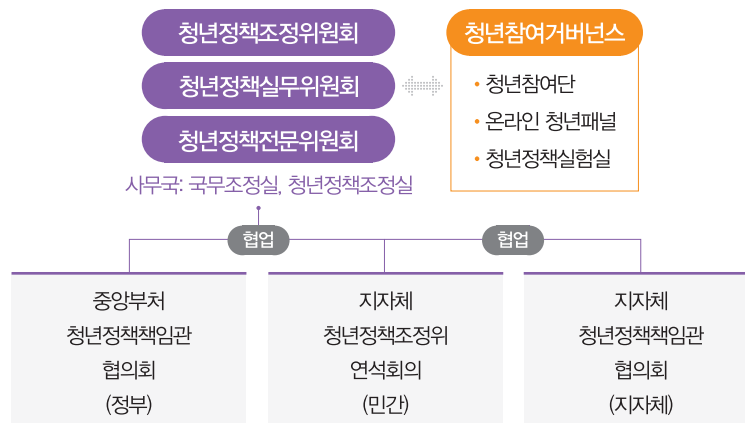
01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의 현황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국가 단위에서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2020년 9월에 출범하였다. 청년정책조정위는 법률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률에 정의되어 있는 주요 사항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와 이행사항 점검, 청년정책에 대한 조정과 협력, 청년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 국가와 지자체 역할 조정 등이다.

청년정책조정위는 총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 20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을 맡는 국무총리와 관계 중앙부처의 장관, 광역 및 기초 협의체 추천 지자체장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청년정책 전문가나 청년단체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는데 시행령을 통해 민간위촉직 중 절반은 법률에서 정한 청년이어야 한다.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만 19세에서 만 34세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연령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이 20명 중 1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21년 12월 현재 청년정책조정위의 민간위촉 중 청년위원은 12명으로 60%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총괄조정기구인 청년정책조정위에는 지원조직으로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실무위원회는 청년정책조정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무위는 20명으로 구성되며 10명은 위원장인 국무조정실장과 관계 중앙부처 차관, 조정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10명은 민간위원으로 위촉되는데 이 역시 50%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두도록 되어 있다. 실무위는 전문가들로부터 영역별로 전문적인 검토를 받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021년 10월 현재 전문위는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 및 권리, 기획 및 균형발전 등 6개 분야별로 36명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림 1〉 중앙정부 청년정책 총괄 및 조정기구 현황



여러 정책에서 총괄조정기구가 존재하고 특히 대상 중심 정책인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여러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구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다. 다른 정책에서 구성된 총괄조정기구와는 달리 청년정책조정위는 협업체와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거버넌스가 구성되어 효율적이고 수요자 중심의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선 협업체를 보면,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32개의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책임관을 두고 있으며 이들 간의 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청년정책조정위의 안건으로 올라오고 반대로 청년정책조정위에서 제안한 내용이 협의회에서 논의되기도 한다. 지자체와 관련해 각 시도는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있는데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도 운영 중이다. 마지막으로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청년정책조정위 연석회의를 운영 중이다. 지자체 협의회와 연석회의는 각 지역별 현안을 중앙정부에서도 심도있게 다룰 수 있는 정책 통로의 역할을 맡고 있다.

국무조정실에서는 2020년부터 청년참여기구를 운영 중이다(김기현, 유민상, 2020: 5). 오프라인으로 운영되었던 청년참여단은 15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하며 전국 단위로 모집해 정책분야별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온라인으로 운영되었던 온라인 청년패널은 1,000여 명의 청년들이 참여하며 온라인을 통해 청년정책 개선과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정책실험실로 공모에 참여해 최대 500만 원의 활동비 지원을 받고 정책 제안을 구체화하여 발표하는 사업도 추진되었다.

2020년 12월에 수립된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은 정책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고 있다. 기본계획에서 정책 영역은 모두 5가지로 나뉜다. 5가지의 정책영역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이다. 이 기본계획에서는 다른 정책의 기본계획에서 법, 제도 및 인프라를 정책과제와 분리해서 다루는 것과는 달리 참여권리 영역에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인 청년하나로 구축이나 청년정책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도 참여권리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

〈그림 2〉 제1차 청년정책기본계획 정책과제 및 목표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8).

청년정책을 추진 중인 중앙행정기관별로 청년정책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5개 부처와 1개 위원회에서 청년정책 전담 행정부서를 두고 있다. 총괄 및 조정 역할을 맡고 있는 국무조정실에서는 2관 4과 2팀으로 청년정책조정실을 두고 있으며 31명의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청년 일자리정책을 추진해 온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고용정책관을 두고 있으며 3과 2TF 체계로 모두 34명의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다. 2021년 신규로 청년정책과가 설치된 부처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며 금융위원회에서도 청년정책과를 신규로 설치하였다(국무조정실, 2021.08.31.).

청년 전담 중간지원조직은 교육부에서 직업계고 졸업자들의 취업지원을 위해 설치한 중앙취업지원센터가 유일하며 다른 부처에서는 기존에 이미 있던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해 청년정책사업을 맡기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집행체계 중에서 청년 전담 전달체계를 운영 중인 곳은 고용노동부로 온라인청년센터와 대학일자리+센터를 운영 중이다. 고용노동부 외에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2곳의 지자체에 청년활력센터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청년거점공간인 청년마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청년창업센터를, 병무청에서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표 1〉 중앙정부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총괄·조정 기구	행정체계			집행체계
	중앙행정기관	행정부서	중간지원조직	
청년정책 조정위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2관 4과 2팀)	-	-
-	기획재정부	청년정책과	-	-
-	교육부	-	중앙취업지원센터/(한국장학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취업지원센터/(교육지원청)/ (대학/직업계고)/(대학인권센터)/ (창업교육센터)
-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장학재단)	(대학)/(지자체)
-	외교부	-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대학)/(지자체)
-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통일+센터)
-	법무부	-	-	-
-	국방부	-	(중소벤처진흥공단)	(군대)
-	행정안전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청년활력센터/청년거점공간/ (지자체)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장학재단)	(대학)
-	농림축산식품부	-	-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	보건복지부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지역자활센터)/ (정신건강복지)/(자살센터)
청년고용 촉진 특별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3과 2TF)	(지방노동관서)/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위원회)	온라인청년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지자체 청년센터)/ (고용복지+센터) (직장내괴롭힘상담센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대학)/(민간기업)/(훈련기관)
-	여성가족부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근로보호센터)
-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보증공사)	(대학)/(민간기업)/(은행)
-	해양수산부	-	(한국수산자원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대학)/(민간기관)
-	중소벤처기 업부	청년정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센터/(기업인력애로센터) (창업보육센터)
-	국가보훈처	-	-	(제대군인지원센터)
-	병무청	-	-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은행)

자료: 김기현(2022:47). 괄호 표기는 청년정책 전담 기관이나 조직이 아닌 경우임.

02 윤석열 정부의 청년정책 방향

윤석열 정부에서는 120대 국정과제에서 정책 목표에 해당하는 17번째 정책약속으로 청년과제를 제시할 정도로 청년정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22: 149). 약속 17번은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로 제시하였고 세부 정책과제로 90번 과제인 청년에게 주거, 일자리,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91번 과제로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마지막으로 92번 과제로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를 제시하였다.

지자체와 연관성을 갖는 과제 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93번 과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부분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중간지원조직으로 중앙지원센터를 새롭게 설치하고 전달체계의 역할을 수행할 지역 거점 센터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2023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센터는 청년도약베이스캠프라는 이름으로 불릴 것으로 보이며 지역 거점센터는 지역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맞춤형으로 청년정책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며 지역 청년들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지자체 청년센터는 2곳에 불과한 행정안전부의 청년활력센터를 제외하고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로만 운영되어 왔다. 중앙정부의 센터 운영 예산을 받게 된다면 중앙과 지역을 잇는 전달체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중앙정부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번호	국정과제(주관부처)	내용
91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국토부·금융위·고용부·중기부·교육부·국방부·국조실)	청년 원기주택 50만 호 공급, 청약 등 제도 개선/재학단계 취업 조기개입, 맞춤형 서비스 제공/청년 창업 패키지 지원/부처협업형 인재양성사업 확대/국가장학금 내실화, 취업 후 상환대출제도 도입
92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고용부·권익위·금융위·복지부·국조실)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등 공정채용 기반 구축/청년도약계좌 신설/취약청년 출발지원 및 청년도약준비금 신설 검토
93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국조실·법제처)	중앙부처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청년 위촉 확대/온라인·오프라인 청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자체, 청년단체 간 협업 통한 사업 발굴, 지원/청년 재원조성방안 강구, 전담연구기관 설치 검토/조기 자립에 장애가 되는 자격제도 개선

자료: 대한민국 정부(2022:149-153).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청년정책 참여 방식은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국무조정실, 2022.06.26.). 현재 5개 부처에 청년 관련 행정부서가 설치되었고 4개 부처에 청년담당 공무원이 2명 이상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9개 부처에 대해서 해당 부처 장관의 청년정책사업 추진을 직접 보좌할 별정직 5급 이하 공무원을 청년보좌역으로 채용하고 각 부처별로 20명 내외로 정책 모니터링과 정책 제안,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는 2030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정책 추진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가 더 분명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반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거나 해외에서처럼 각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청년 참여기구를 모아 국가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는 방식의 참여 정책 추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III — 대전과 세종의 청년정책 현황 및 문제점

01 지자체 청년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지자체에서는 2015년부터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한 후 청년정책을 중앙정보보다 먼저 추진해 왔다.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1997년 이후 청년 일자리정책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으나 일자리에 국한해서만 정책을 추진했을 뿐 청년의 삶 전반을 다루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

〈표 3〉 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구분	총괄·조정 기구	행정체계			집행체계 (센터, 공간)	
		행정부서	중간지원조직		광역	기초
			기관	조례 규정		
서울	청년정책조정위	미래청년기획단(2반 8팀)	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	○	10	25
부산	청년정책조정위	청년산학창업국(1과/4과)	하고재비청년센터	○	7	15
대구	청년정책조정위	청년정책과	청년센터	○	3	1
인천	청년정책위	청년정책과	유유기지	○	1	4
광주	청년정책위	청년정책관(4팀 1단)	청년센터	○	3	6
대전	청년정책위	청년가족국(1과/3과)	청년 내일센터	○	4	3
울산	청년정책조정위	(청년정책담당)	청년센터 청년공공	○	2	2
세종	청년정책조정위	청년정책담당관(4담당)	청년센터 세청나래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	1	-

경기	청년정책조정위	청년복지정책과	경기일자리재단 경기복지재단	○	-	32
강원	청년정책조정위	청년어르신일자리과(1팀/2팀)	-	○	-	4
충북	청년정책조정위	청년정책담당관(5팀)	청년희망센터	○	1	1
충남	청년정책조정위	청년정책과	-	○	-	6
전북	청년정책위	대도약청년과	전북청년허브센터	○	1	12
전남	청년정책조정위	인구청년정책관(1팀/4팀)	-	○	-	11
경북	청년정책조정위	청년정책관(3팀)	-	×	-	17
경남	청년정책조정위	청년정책추진단(3담당)	청년온나	○	2	6
제주	청년정책조정위	청년정책담당관(4팀)	제주청년센터	○	5	-
총계	-	-	-	-	40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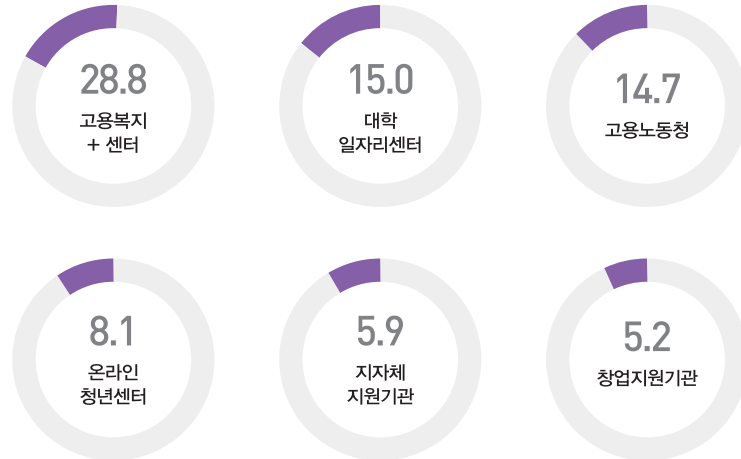
자료: 김기현(2022:49)

2021년 12월 현재 17개 시도에서는 모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총괄 및 조정기구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청년기본조례」를 제일 먼저 제정한 지자체는 서울시로 2015년 1월 5일에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었다. 이어서 경기도가 2015년 8월 13일에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2015년에 전남, 광주, 대구 등으로 이어졌다. 17개 시도 중 가장 늦게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한 곳은 인천으로 2018년 8월 26일에 제정되었다.

행정부서를 보면, 17개 시도에서는 청년만을 전담하는 과 이상의 행정부서를 대부분 두고 있는데 팀 이하로 운영 중인 곳은 울산, 강원 두 곳이다. 실이나 국, 단과 같이 과를 넘어서서 청년 전담 행정부서를 운영 중인 곳은 서울 정도이며 인구나 일자리, 창업 등을 묶어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중간지원조직은 경북만 「청년지원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였고 경북과 함께 강원과 충남, 전남이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하는 청년센터가 없는 상태이다. 서울시는 기존 중간지원조직인 청년허브와 함께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을 맡았던 서울청년활동지원센터가 각 자치구의 청년센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역할이 바뀌면서 직접 사업 추진기관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경기도는 다른 시도와는 달리 청년 전담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지 않고 경기일자리재단과 경기복지재단 등 기존의 중간지원조직의 부서 형태로 청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림 3〉 청년정책 전달체계별 이용 경험 비율(%)



자료: 김기현(2022:51)

지자체 청년센터 현황을 보면, 2021년 기준으로 185개가 전국적으로 있으며 광역 청년센터가 없는 곳은 경기와 강원, 충남, 전남, 경북 5곳이다. 청년정책 전달체계 중 지자체 청년센터에 대한 이용 비율을 살펴보면, 5.9%에 그쳐 28.8%에 이르는 고용복지+센터나 15.0%를 보여준 고용노동부의 온라인청년센터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을 보여 주었다. 이는 지자체 청년센터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반영한 것이며 청년센터 중 공간지원 사업만을 하는 곳이 많아 정책 체감도 역시 낮은 것으로 보인다.

02 대전과 세종 청년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여기에서는 대전과 세종을 중심으로 청년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조례를 살펴보면, 대전은 2016년 10월 20일에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되었고 세종은 같은 해 12월 20일에 제정되었다. 청년 연령 규정을 보면, 세종은 청년을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연령 정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반면, 대전은 보다 폭넓게 청년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데 19세 대신 18세를 하한연령으로, 34세 대신에서 39세까지를 상한연령으로 청년을 정의하고 있다. 현재 「청년기본법」에서는 각 법률이나 조례에서 청년 연령을 다르게 규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는 권장 사항이 아니다. 동시에 가급적 연령 정의를 통일하는 것이 법적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청년기본법」 개정을 통해 청년 상한 연령을 34세가 아닌 39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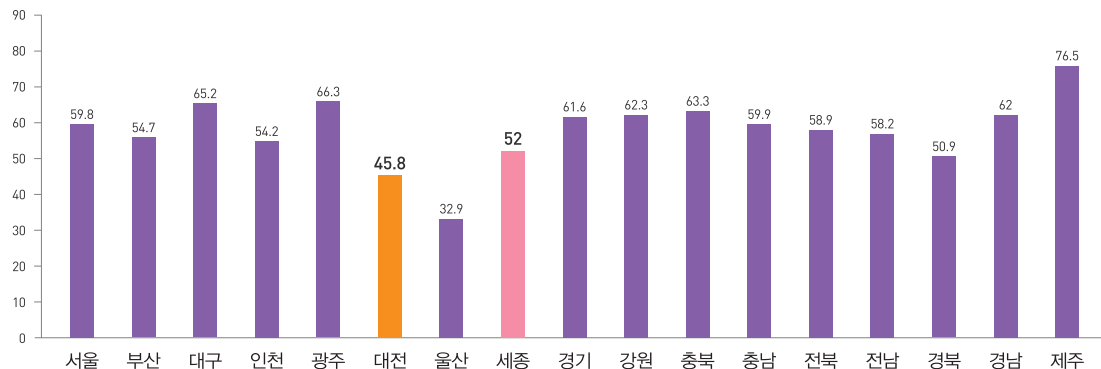
〈그림 4〉 대전과 세종 청년정책 추진체계 현황

① 조례	대전 2016년까지 10월 제정, 청년 18~39세로 정의 세종 2016년까지 12월 제정, 청년 19~34세로 정의
② 총괄조정기구	대전 청년정책위원회(심의역할), 청년 위촉 1/3 이상 세종 청년정책조정위원회(심의, 조정역할), 청년 1/2 이상
③ 행정부서	대전 청년가족국 청년정책과 14명 세종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16명
④ 조직 / 참여기구	대전 청년내일센터 / 청년정책네트워크 세종 세청나래, 청년희망내일센터 / 청년정책네트워크

자료: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2022), 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2022).

대전과 세종은 「청년기본조례」에 총괄 및 조정 역할을 하는 기구에 대한 규정이 담겨져 있고 실제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현재 운영 중에 있다. 이 역시 대전과 세종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세종은 심의와 더불어 조정 기능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나 대전은 심의 기능만이 명시되어 있다. 법률에서 심의와 조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심의와 더불어 조정 기능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민간위촉직 중 청년위원의 비율을 대통령령에서 정한 1/2 이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조례상의 차이 때문인지 대전의 청년위원 비율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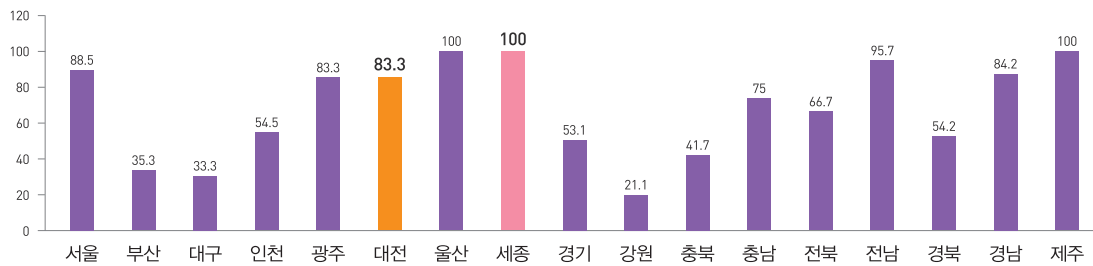
〈그림 5〉 대전과 세종 청년정책총괄기구 민간위촉직 중 청년위원 비율(%)



자료: 국무조정실(2021), 지자체 청년통계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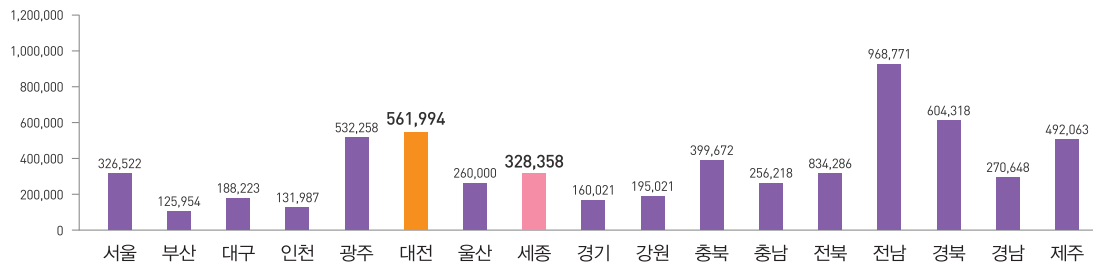
대전과 세종의 청년정책 참여기구 현황을 보면, 기초가 없는 세종은 논외로 하고 대전의 기초 지자체 설치비율은 83.3%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강원은 21.1%에 그치고 있으며 부산과 대구는 30%에 그치고 있다. 이는 광역과는 달리 기초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 제정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역간 편차가 크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초 지자체의 조례 제정 비율을 보면, 2021년 8월 현재 강원은 68.4%에 가장 낮았고 전북이 80.0%, 인천이 81.8%, 부산이 82.4%에 그치고 있다.

〈그림 6〉 대전과 세종 청년정책참여기구 기초지자체 설치비율(%)



자료: 국무조정실(2021), 지자체 청년통계자료집.

〈그림 7〉 대전과 세종 청년 1인당 예산액(원)



자료: 국무조정실(2021), 지자체 청년통계자료집. 광역 지자체 예산을 해당 지역 청년인구수로 나눈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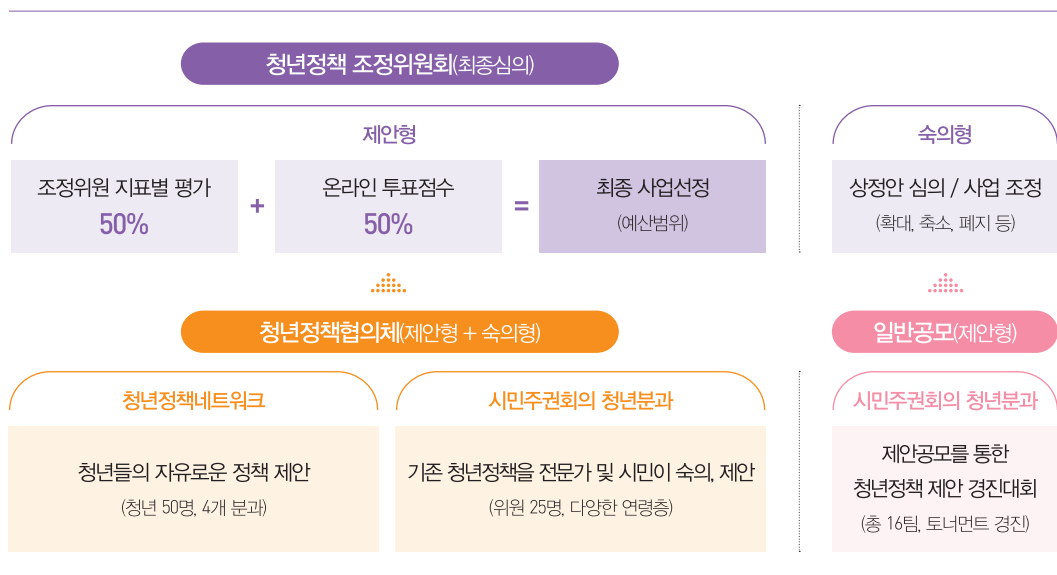
대전과 세종의 청년 1인당 예산액을 보면, 대전은 56만 원으로 다른 시도와 비교해 중간에 그치고 있고 세종은 32만 원으로 예산액이 낮은 시도에 포함된다. 인구 규모가 매우 큰 서울이나 경기를 제외하고 부산이나 인천 등은 10만 원을 조금 넘는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대전은 전남과 전북, 경북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도를 제외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예산 규모 면에서는 세종시의 예산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세종시에서는 2022년 청년 1인당 예산을 49만 원으로 확대하였고 2025년까지 60만 원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세종특별자치시, 2022).

IV — 대전과 세종의 청년정책 방향과 과제

대전과 세종의 청년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지금까지 청년정책의 흐름을 고려해 볼 때 우선 청년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년 참여와 관련하여 대전은 현재 「청년기본조례」를 개정해 청년정책조정위의 위촉직 중 청년위원의 비율을 1/3에서 1/2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대전과 세종 모두 중앙정부에서 청년정책을 수행하는 주요 부처에 청년보좌역을 두고 참여기구를 운영하는 것을 참고해 청년 참여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세종시에서 추진 중인 청년자율예산제와 청년 참여 거버넌스는 다른 시도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청년 자율예산제와 청년 참여 거버넌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되었다. 청년 자율예산제는 지자체의 청년 예산 중 일부를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다. 세종시는 이를 마련하기 위해 네 가지의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친다. 우선 청년정책 참여기구인 청년정책 네트워크에서 50여 명의 청년위원들이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부서 및 전문가 협의를 거친 후 청년정책조정위의 안건으로 제출한다. 시민주권회의 청년분과는 25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존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과 더불어 추가적인 정책 제안을 하고 이 역시 청년정책조정위의 안건으로 제출한다. 이처럼 세종시의 공식적인 참여기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일반 청년들도 청년정책 토론타에 공모로 참여해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청년정책 조정위원회는 참여기구와 일반 청년들의 제안과제를 심의해 기존사업에 대한 개선방안과 신규사업을 결정한다. 이처럼 실제 정책 추진에 있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림 8〉 세종시 청년 자율예산제 추진체계



자료: 세종특별자치시(2022:2)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국무조정실에 중앙지원센터가 마련되고 각 시도에는 지역거점센터가 들어서게 된다. 대전과 세종은 자체 지방비로 청년센터를 운영 중인데 거점센터 도입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대전은 중간지원조직인 청년내일센터와 청년 공간제공 사업 일환으로 청춘나들목과 청춘너나들이, 청춘두두두 등을 운영 중이다. 청년내일센터가 지역거점센터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고 전달체계로 재편된다면 나머지 공간제공 사업으로 추진된 센터들을 지역사회의 전달체계로 재편하는 작업이 연차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세종은 세청나래와 청년희망내일센터로 나누어져 있다. 전자가 청년정책 전반을 다룬다면, 후자는 청년일자리정책을 다루고 있는데 이처럼 기능 중심으로 센터를 나누기보다는 권역별 전달체계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두 센터 모두 신도심 지역에 위치해 있어 구도심 지역인 조치원에 전달체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두 지역 모두 브랜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전과 세종 모두 사업과제는 매우 많지만 확실하게 지역 청년이면 모두 알 수 있는 뚜렷한 사업 모델이 없다. 예를 들어 서울은 청년수당, 경기도는 청년 기본소득과 같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해당 지역 청년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대표 브랜드 사업을 갖고 있다. 반면, 대전과 세종은 그런 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다. 대표 브랜드 사업을 정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국무조정실.
- 관계부처 합동(2021). <청년고용 활성화대책>. 고용노동부.
- 관계부처 합동(202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중앙행정기관)>.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2021). <지자체 청년통계자료집>.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2021.08.31.). 기재부 등 4개 주요부처에 ‘청년’ 전담부서 생긴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국무조정실(2022.06.26.). 중앙부처에 ‘젊은 피’ 수혈로 국정운영에 활기 불어넣는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 김기현·유민상(2020).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정책참여 현황과 과제. <블루노트 이슈앤정책> 129: 1-12.
- 김기현(2022). 청년정책 전달체계 및 참여 거버넌스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305(05): 44~58.
- 대전광역시(2022). <대전시 청년생활안정 강화대책>. 대전광역시.
- 대한민국 정부(2022).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대한민국 정부.
-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2022).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1(지방자치단체 과제)>. 국무조정실.
- 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2022).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2(지방자치단체 과제)>. 국무조정실.
- 세종특별자치시(2022). <세종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2차 회의 자료>. 세종시 청년정책 담당관.

기 획 특 집 0 5

세종시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소고

김성표 /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I — 서론

세종시 민선 4기의 방향은 미래전략수도로 압축된다. 미래전략수도는 행정수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도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행정기능과 연구기능 그리고 문화기능과 자족성까지 포함하는 도시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세종시 성장과 발전에서 큰 비중을 담당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분야도 소상공인이다. 세종시가 자족성을 갖춘 미래전략수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세종시 상권은 도시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상권의 이동, 높은 공실률, 폐업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짧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주변지역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특징은 도시가 아직 완성단계에 접어들지 못하고 다양한 소비 기회가 확보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세종시는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권활성화 TF 운영, 금융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재단 설립 등의 정책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 앞으로 조성 단계인 세종시의 상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그리고 세종시와 상인, 소비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이 글에서는 위에서 던진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상권활성화 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세종시 소상공인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중앙정부와 세종시 소상공인 공약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세종시 상권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 상권활성화 지원 정책

01 상권 지원정책 변화

정부는 2002년부터 시설현대화사업, 주차환경개선사업, 특성화시장지원사업 등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권육성을 지원해 오고 있다. 2010년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상권활성화 구역제도를 상권관리제도로 도입하였다. 이 법을 통해 지원대상을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시장이나 상점가가 포함되지 않는 상업지역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2013년에는 지원대상 지역을 상업지역이 반 이상 포함된 지역으로 확대하여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포함된 생활권으로 확장되었다. 2011년에는 문화관광부의 ‘문전 성시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청년몰 사업이 시작되었고, 2017년 중기부로 이관되었다. 전국 36개 청년몰에 672개 점포에 입점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도시재생사업 이후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을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지원하고 있다(골목길 경제학자, 2021).

정부의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부정적인 견해와 긍정적인 평가가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견해는 정부의 지원으로 활력을 되찾은 상권이나 시장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청년몰 입점 점포 672개 중에서 2021년 8월 기준 263개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21년 9월 1일). 반면 전통시장 상인들은 정부의 전통시장 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해 시장 상인 응답자들은 70%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나타냈다(세종특별자치시, 2021).

상권활성화사업이 부진한 이유로 정부의 개입 방식과 사업내용에 대한 지적을 들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한 지역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해당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고, 전국적인 상권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정부지원이 끝나면 상권활성화구역이 자생적인 재정구조를 확보하는데 실패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기존 상인들의 민원 요구사항이 주를 이루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권활성화사업이 상권의 콘텐츠를 개선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이다. 상권을 효율성을 강조하는 유통시장으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경험을 제공하는 자원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골목길 경제학자, 2021).

02 상권 변화과정과 상권활성화 요인

상권의 변화과정을 관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가 있다. 압구정 로데오 거리의 5가지 유형의 변화 단계와 상권변화과정의 특징을 도출한 연구로 군집1(상권 등장 단계)은 의류업 중심의 업종 동질화가 나타났다. 군집2(초기활성화)에서는 상업화정도는 낮지만 의류업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군집3(활성화)에서는 상권활력도가 높고 양식음식점 중심으로 성장했고, 군집4(안정기 및 초기쇠퇴)에서는 상업화정도가 높고 카페 및 서양 음식 점포수가 가장 많은 시기로 나타났다. 군집5(쇠퇴 및 재활성화 가능)에서는

폐업하는 업종이 생겨나며 일정 기간 이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으로 압구정 로데오 상권은 변화 단계를 거치며 대표적인 상권이 축소되고 의류 중심에서 양식음식점과 카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권은 활성화와 쇠퇴 이후에 재활성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구가 필요하다. 업종의 변화와 상권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 특성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태연·박진아, 2021).

도심상권에서 소매업 공실의 원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소매업의 구조전환, 인구 변화, 소매업 운영 비용의 상승을 전통적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을 인터뷰한 결과 부동산을 소유한 임대인의 행동에 대한 부분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실률 완화를 위해서는 공실 데이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상인연합회와 같은 조직을 통해 소매업자들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야 한다. 임대인과의 계약 협상지원이나 허가 절차 및 규제완화, 온라인 전환 지원도 중요한 부분이다 (Talen and Park, 2022).

상권활성화구역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고객특성 중에 연령대를 보면 10대의 만족도가 20~50대 방문객보다 높게 나타났다. 20~50대가 필요로 하는 주차장, 시설환경개선, 위생이나 친절도의 개선 여지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 외에서 유입되는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거주하는 고객들보다 높게 나타나 기존 거주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권을 홍보하는 매체 수는 적더라도 효과성 있는 홍보 방법이 필요하다는 결과도 나타났다. 운영 조직에 있어서는 상권전문재단이 운영하는 곳일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사업 수의 증가는 고객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은애·김영기, 2022).

도심 내부에서의 상업지역의 활성화에 대한 개념과 실증의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도 있다. 특히 상권 활성화에 있어서 이웃에 있는 소상공인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소상공인들이 시민연대를 구성하고, 마을계획에 참여하고, 상업지역을 경제적인 영토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보다 효과적인 상권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조직을 깊이 인식하고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관련된 정보, 규범, 실천을 공유할 수 있는 조직이 중요하다. 소상공인들과 관련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정책입안과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소상공인 클러스터를 보존하고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도구들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면 지역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캠페인이나 지역적 생산과 소비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될 수 있다 (Sutton, 2010).

03 지역상권법과 상권활성화

정부에서는 기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2021년 8월에 지역상권법을 공포하였다. 전통시장법에서는 지자체가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해야 했으나, 지역상권법에서는 주민과 상인이 조합을 만들어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임시법으로 추진하던 상권활성화사업을 공식화하였고, 쇠락상권만으로 한정했던 대상을 임대료가 상승한 상권을 포함하도록 확대하였다. 지역상생구역은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주민협력을 통한 임대료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임대료 상한 제한이나 지방세 감면, 대수선비 용자 등을 지원하게 된다. 자율상권구역은 자율협력과 정부지원을 통해 쇠퇴 상권 활성화를 추구하는 구역으로 온누리 상품권 가맹이나 상권 특성화 사업으로 지원하게 된다(골목길 경제학자, 2021). 2022년부터 도심형소형상권으로 자율상권구역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지원을 위해 상인과 임대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자율상권조합을 구성해야 한다(중소벤처기업부,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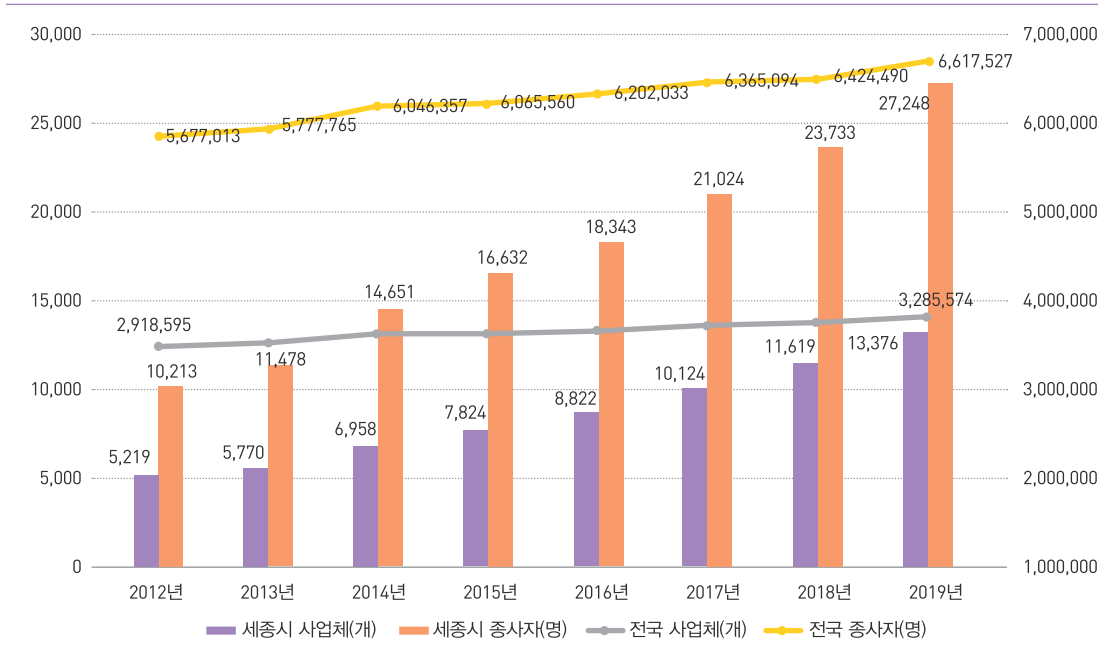
지역상권법이 상권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와 사업 내용이 중요하다. 상인과 임대인 중심의 정책으로 상권 경쟁력 강화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기존 사업자가 원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이 가지는 한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주택과 일자리 정책과 연계하는 부분과 도시와 상권의 공간구조 개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상권관리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기존 상인의 매출을 올리는 것은 지속가능한 상권을 조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다른 상권과 경쟁할 수 있는 지속적인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상권, 기존 사업체가 성장하고 새로운 브랜드가 들어오는 로컬 브랜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골목길 경제학자, 2021).

III — 소상공인 현황 및 상가 공실률 분석

01 세종시 소상공인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변화

세종시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2012년 5,219개에서 2019년 13,376개로 증가하였다. 7년 동안 8,157개, 156.3%가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전국은 366,979개, 12.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소상공인 종사자수는 2012년 10,213명에서 2019년 27,248명으로 17,035명(166.8%)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은 같은 기간 940,514명(1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전국 및 세종시 소상공인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2012년~2019년)



자료 :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전통시장 현황

세종시 소상공인 사업체수 업종별 추이를 보면, 숙박 및 음식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순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가 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단계에 따른 것과 인구 구조상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은 특징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1〉 소상공인 업종별 사업체 수 추이(2012년~2019년)

구 분	숙박 및 음식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2012년	1,434	1,369	311	145	494	448
2013년	1,493	1,436	384	180	516	492
2014년	1,715	1,735	604	207	541	611
2015년	1,981	1,902	636	272	626	677
2016년	2,275	2,135	761	373	720	685
2017년	2,551	2,359	982	545	816	787
2018년	2,802	2,559	1,107	698	1,016	898
2019년	3,134	2,933	1,256	913	1,159	958
증감	1,700	1,564	945	768	665	510

자료 :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전통시장 현황

세종시 소상공인 종사자수 업종별 추이를 보면, 숙박 및 음식업, 도매 및 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제조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순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수 증가와는 달리 교육 서비스업과 제조업에서 종사자수 증가가 다른 업종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소상공인 업종별 종사자 수 추이(2012년-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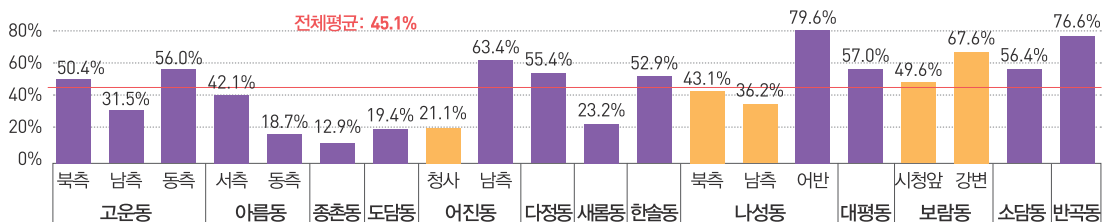
구 분	숙박 및 음식업	도매 및 소매업	교육 서비스업	제조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2012년	2,783	2,450	287	1,492	523	731
2013년	2,989	2,477	348	1,638	619	736
2014년	3,635	3,126	391	2,199	971	781
2015년	4,343	3,563	544	2,365	1,016	924
2016년	4,958	3,888	788	2,390	1,301	1,087
2017년	5,649	4,376	1,198	2,526	1,638	1,227
2018년	6,196	4,706	1,482	2,833	1,784	1,532
2019년	7,122	5,394	1,925	2,996	1,939	1,692
증감	4,339	2,944	1,638	1,504	1,416	961

자료 : 소상공인마당, 소상공인·전통시장 현황

02 세종시 동지역 집합상가 공실률 추이

2019년 기준 세종시 동지역의 상권별 집합상가 공실률은 45.1%로 나타났다. 중심상권 중에서는 보람동이 높고, 주거지 상권 중에서는 나성동 어반, 어진동 남측, 고운동 동측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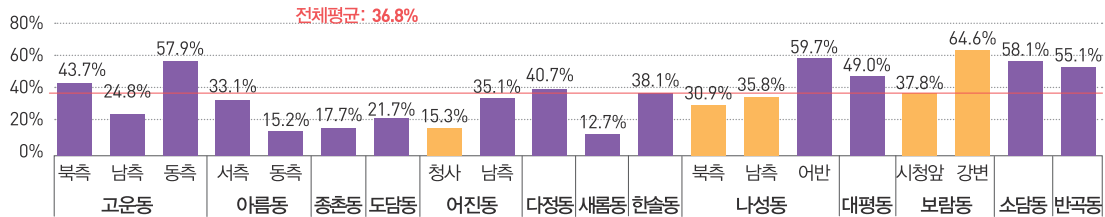
〈그림 2〉 세종시 동지역 상권별 공실률(2019년 9월)



자료 : 행복도시 상업시설 2차 모니터링(2020)

2020년 기준 세종시 동지역의 상권별 집합상가 공실률은 36.8%로 나타났다. 2019년에 비해 8.3%p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공실률을 나타내고 있다. 중심상권 중에서는 보람동 강변이 높고, 주거지 상권 중에서는 나성동 어반, 대평동, 고운동 동측, 다정동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 세종시 동지역 상권별 공실률(2020년 9월)



자료: 세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2021)

세종시 동지역 집합상가의 공실률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먼저 세종시가 아직 건설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세종시 동지역은 2030년을 목표로 건설이 진행 중에 있어서 인구의 유입과 정착에 시간이 걸리며 이는 상권형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둘째, 집합상가의 공급이 많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다른 신도시에 비해 인구나 면적 대비 상가의 공급량이 많은 것도 공실률에 영향을 주고 있다. 셋째, 야간 및 주말의 유동인구가 상대적으로 적다. 주간활동 인구나 야간활동 인구가 복합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고, 주말에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은 것이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지구단위계획의 영향으로 일부 상권에는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다. 특히 강변 인근 상권의 경우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제한적이어서 공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 새 정부의 소상공인 관련 공약

01 새 정부의 소상공인 관련 공약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이다. 국정과제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온전한 손실보상, 채무조정 및 금융지원, 경영 부담 완화, 경쟁력 제고, 디지털 전환, 민간주도 상권회복으로 압축된다. 온전한 손실보상 측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 기간 중에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에 대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손실보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채무조정 및 금융지원에서는 담보 및 보증대출, 부실우려 채권까지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구제형태의 채무조정을 추진하고 대환보증 신설 등 맞춤형 금융공급을 할 방침이다.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 세금, 공공요금 등에서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폐업과 재도전 과정에 대한 패키지 지원을 통해 재취업과 업종전환을 촉진할 예정이다(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2022).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AI 기반 상권정보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유망한 소상공인을 선별하여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할 방침이다. 디지털 전환 측면에서는 전담인력 교육 등을 통해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에게 맞는 스마트기술 보급과 온라인 활용 역량을 높이는 것을 지원할 예정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상권회복을 위해 특화상권 육성, 발전기금·상권기획자 제도 도입, 안심재단·동네상권발전소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2022).

02 세종시 민선 4기 소상공인 관련 공약

세종시는 민선 4기에서 소상공인 경영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먼저 '세종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성장, 재기, 직업전환 등 성장 단계에 따라 맞춤형 종합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세종포스트, 2022년 7월13일). 상가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도 제안되었다(세종포스트, 2022년 7월20일). 기존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가공실 대책 추진단' 설치를 제시하였다. 또한 상가지역 조정과 상가 업종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를 위해 매년 요식업소 200개 업소에 서빙로봇 구입비 30%를 지원할 것을 제시하였다. 여민전 발행액을 매년 10%씩 상향하여 발행할 것도 제안하였다.

V ——— 세종시 상권활성화 방안

01 세종시 상권육성구역 지정과 지원

세종시 동지역의 상권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권육성구역을 제안한다. 정부의 상권활성화구역은 지정요건이 침체지역에 적합하기 때문에 세종시 동지역에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세종시 동지역에 맞게 지정요건을 설정하는 상권육성구역 제도가 필요하다. 시장 및 상점가 포함 여부, 점포의 밀집정도, 상인회 구성 비율, 상업활동 위축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김성표, 2021).

상권육성구역에 대한 지원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과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추진하면 좋을 것이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상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 공유와 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커뮤니티와 연계한 봉사활동이나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상권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축제, 버스킹 공연 등 문화

예술 행사와 연계한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다. 상권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홍보 방법 및 채널을 확장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상권에서 참신하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가진 점포들이 들어오고 생겨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한다(김성표, 2021).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상권에 특화된 상품을 집적시키고 앵커점포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화된 공간을 만들고 상징물을 조성하여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 환경 개선을 위해 야간 조명 개선, 상권 안내 게시판,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고객 편의를 위해 쉼터나 테마골목을 조성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김성표, 2021).

02 세종시 상권활성화 정책 제언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권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주택과 일자리 정책을 연계하는 부분과 상권의 공간구조 개선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상권관리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를 지속적인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상권을 만드는 것에 두어야 한다(골목길 경제학자, 2021).

세종시 동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인역량 강화, 상권활력 제고, 인프라 및 지원체계 구축, 미래 변화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 상인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골목상권 조직화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자금지원과 컨설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창업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에서 소상공인 창업을 활성화 시켜 나가야 한다. 상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권과 연계된 문화 및 관광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간판디자인이나 상가를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가야 한다(세종특별자치시, 2021).

인프라 측면에서는 접근성 제고를 위해 주차공간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지원체계 및 제도에 있어서 공실상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상업용지와 상업시설 공급량을 검토해야 한다. 다양한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상권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설립하고 상권활성화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야 하며, 온라인 플랫폼과 디지털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세종특별자치시, 2021).

VI — 결론

세종시의 소상공인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도시가 건설됨에 따라서 공실률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시와 상권이 성숙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어 상권형성을 위한 지원과 공실률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소상공인들은 더욱 어려운 게 현실이다. 중앙정부와 세종시는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피해를 보상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상권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권활성화의 목표는 공실률을 낮추고 입점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상권에서 다양한 업체들이 생겨나고 들어올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상권에서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입점하고,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과 상권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상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수요와 함께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만들어가고,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과 적용이 필요하다.

지역상권법의 시행으로 도심형 소형상권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침체되는 도심형 소형상권을 찾아내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인 참여와 임대인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상향식 접근이 중요하다.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모델을 만들고,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상권의 활력을 더하기 위한 상업시설 공급조절, 주차장 확보, 도보환경 개선, 건물인식 시설 설치 등의 물리적 지원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문화와 예술 프로그램을 더하고 소상공인들의 자금 지원과 컨설팅을 확대하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소상공인들의 자발적 참여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TF 또는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은 세종시 상권이 안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태연 · 박진아(2021), <상권변화과정 분석을 통한 상권 재활성화 진단 연구>, 국토계획, 56권, 3호, 78-91.
- 김성표(2021), <세종시 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 골목길 경제학자(2021), <상권에도 OS가 필요하다>, 브런치북, <https://brunch.co.kr/brunchbook/bid-korea>
- 세종특별자치시(2021), <세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
- 세종포스트, '세종시장 인수위, 시정 4기 시정에 '5개 과제' 제안', 2022년 7월 13일자.
- 세종포스트, '세종시장 인수위, 시정 4기 핵심과제로 '8대분야 59개 공약과제' 제시', 2022년 7월 20일자.
- 조선일보, '죽어라 뛰는데 답이 없다... 백종원 · 이마트 파워도 안 먹히는 '청년물'', 2021년 9월 3일자.
- 중소벤처기업부(2022), '상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63호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22),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 정은애 · 김영기(2022), 상권활성화 성공 요인 분석 및 정책 방향: 18개 상권 르네상스 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제20권 제1호, 193-210.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20), <행복도시 상업시설 2차 모니터링>
- Talen E. and Park J.(2022), Understanding Urban Retail Vacancy, Urban Affairs Review, 58(5):1411-1437
- Sutton, S(2010), Rethinking commercial revitalization: a neighborhood small business perspective,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24(2), 352-371

기 획 특 집 0 6

미래전략수도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세종시 지역산업 발전 방향

남영식 /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Ⅰ — 서론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출발해서 국가 행정의 중심지로서 그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는 정치권 및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 국회세종지사당 설립과 같이 주요한 성과들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세종시가 국가 행정 중심지로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수도로서의 기능 및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성장동력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도시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세종시가 스스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자족 기능을 확보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세종시 민선 4기의 비전인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종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고찰을 위해서는, 지역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요인과 지역산업 현황을 검토한 뒤 이를 고려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우선 세종시 지역산업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종시 및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방향 검토에 기반하여 세종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큰 방향성을 도출하고, 다음으로 세종시 특화산업의 범위 및 현황을 검토한 뒤,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세종시 지역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 세종시 및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방향¹⁾

본 고에서는 지역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요인으로써 세종시 및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검토하였다. 지역산업 발전은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의 산업정책에 기반하여 이루어지지만, 지방정부의 산업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산업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에 기반한 지원이 필수적인데 대부분의 경우 지방정부의 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므로, 중앙정부의 산업정책을 고려한 지방정부의 산업정책 수립은 관련 정책의 효과성 제고 차원에서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종시 민선 4기의 산업정책은 지방선거 공약을 기반으로 검토하고 중앙정부의 산업정책은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검토한 뒤, 해당 내용의 매칭을 통해 세종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01 세종시 산업정책 방향

2022년 7월에 출범한 세종시 민선 4기의 산업정책은 지방선거 공약에 기반하여 검토하였다. 세종시 민선 4기의 지방선거 공약은 10대 분야 및 지역 관련 공약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중 지역산업과 관련된 공약은 10대 분야 중 4개 분야와 지역 관련 공약 중 1개 분야에 해당하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세종시 산업정책 방향을 검토한 결과, 세종시가 실질적인 수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산업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디지털미디어센터(DMC) 조성,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중입자·중이온 가속기산업 클러스터화, 홍대-고대 퓨처밸리), 혁신적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며(창업혁신클러스터 조성, 글로벌 청년창업빌리지 조성), 미래형 인재 교육·양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세종 교육자유특구 지정 추진, 대학 세종공동캠퍼스 조기 개원) 것이 주요 방향으로 판단된다.

<표 1> 세종시 산업정책 방향(세종시 민선 4기 공약 참고)

분야	핵심과제
[분야] 실질적인 수도 세종시를 완성하겠습니다.	디지털미디어센터(DMC) 조성
[분야] 청년일자리가 풍부하고 성공창업이 보장되는 경제수도를 만들겠습니다.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창업혁신클러스터 조성
[분야] 어린이와 여성이 행복한 도시, 수준 높은 미래형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세종 교육자유특구 지정 추진 대학 세종공동캠퍼스 조기 개원
[분야] 행정수도 및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에 맞도록 국립중입자가속기 연구·의료센터를 유치하겠습니다.	중입자·중이온 가속기산업 클러스터화
[분야 지역3] 세종시 중심의 글로벌 밸류체인 구현	홍대-고대 퓨처밸리 글로벌 청년창업빌리지 조성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마당,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당선인 선거공보, 2022.

1) 본 고에서 정리된 세종시 및 중앙정부 산업정책 방향 검토 및 매칭 관련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 판단에 기반하여 분류된 내용임을 밝힌다.

02 중앙정부 산업정책 방향

2022년 5월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중앙정부의 종합적인 국정 운영 방향성을 담아 동해 7월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는 국정목표(6개), 국민께 드리는 약속(23개), 국정과제(12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세종시 산업정책 방향과 관련된 내용은 3개 국정목표(국정목표 2, 4, 6)에 담겨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중앙정부 산업정책 방향을 검토한 결과, 민간 주도의 미래 지향적인 핵심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국정목표 2), 과학기술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 확보 및 혁신 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며(국정목표 4), 이와 같은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이 지역 주도의 지역산업 혁신 성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선순환적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국정목표 6) 주요 방향성으로 판단된다.

<표 2> 중앙정부 산업정책 방향(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참고)

국정목표	국민께 드리는 약속	국정과제
[국정목표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 마련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 견인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 구현	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국정목표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 마련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인재 육성	지방 과학기술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 실현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 마련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등 맞춤형 지원	
[국정목표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 구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자료 :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2022.

03 중앙정부 및 세종시 산업정책 방향 매칭

세종시 및 중앙정부 산업정책 방향 검토 내용에 기반하여 세종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해, 중앙정부 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국정과제 단위의 내용과 세종시 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공약명 단위의 내용을 매칭시켜 보았다. 중앙정부 및 세종시 산업정책 방향 매칭 시 <표 2>에 제시된 중앙정부 국정과제(23개)마다 <표 1>에 제시된 세종시 민선 4기 공약명(8개)을 매칭시켜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검토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매칭 결과를 살펴보면, 세종시 산업정책 중 중앙정부 산업정책에 매칭되는 누적 건수는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13건), 창업혁신클러스터 조성(9건), 홍대-고대 퓨처밸리(9건), 글로벌 청년창업빌리지 조성(8건), 세종 교육자유특구 지정 추진(4건), 대학 세종공동캠퍼스 조기 개원(4건), 디지털미디어센터(DMC) 조성(2건), 중입자·중이온 가속기산업 클러스터화(2건)의 순서로 나타났다.

국정목표별로 가장 많이 매칭된 세종시 공약명을 살펴보면, '국정목표 2'는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8건), '국정목표 4'는 창업혁신클러스터 조성(5건) 및 홍대-고대 퓨처밸리(5건), '국정목표 6'은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3건), 창업혁신클러스터 조성(3건), 홍대-고대 퓨처밸리(3건), 글로벌 청년창업빌리지 조성(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세종시 및 중앙정부 산업정책 매칭 결과(국정목표별 세종시 산업정책 매칭 관점에서 정리)

중앙정부 국정목표	세종시 민선 4기 공약 매칭 (누적 매칭 건수)	세종시 지역산업 발전 방향성 (누적 매칭 건수)
[국정목표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8) • 디지털미디어센터(DMC) 조성(1) • 중입자·중이온 가속기산업 클러스터화(1) • 창업혁신클러스터 조성(1) • 홍대-고대 퓨처밸리(1) • 글로벌청년 창업빌리지 조성(1) 	방향1 특화산업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13) • 홍대-고대 퓨처밸리(9) • 디지털미디어센터(DMC) 조성(2) • 중입자·중이온 가속기산업 클러스터화(2)
[국정목표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혁신클러스터 조성(5) • 홍대-고대 퓨처밸리(5) • 글로벌청년 창업빌리지 조성(4) • 세종 교육자유특구 지정 추진(3) • 대학 세종공동캠퍼스 조기 개원(3) •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2) • 중입자·중이온 가속기산업 클러스터화(1) 	방향2 혁신적 창업생태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혁신클러스터 조성(9) • 글로벌청년 창업빌리지 조성(8)
[국정목표6]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3) • 창업혁신클러스터 조성(3) • 홍대-고대 퓨처밸리(3) • 글로벌청년 창업빌리지 조성(3) • 디지털미디어센터(DMC) 조성(1) • 세종 교육자유특구 지정 추진(1) • 대학 세종공동캠퍼스 조기 개원(1) 	방향3 미래형 교육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 교육자유특구 지정 추진(4) • 대학 세종공동캠퍼스 조기 개원(4)

※ 세종시 지역산업 발전 방향성은 중앙정부 국정목표별 매칭이 아닌 세종시 지역산업의 종합적인 발전 방향성으로 간주하여 제시함

자료 : 저자 작성.

세종시 및 중앙정부 산업정책 방향 검토 내용과 매칭 결과를 종합 정리해보면, 중앙정부의 과학 기술 기반 핵심산업 육성 방향을 고려하여 세종시 특화산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특화산업과 연계된 혁신적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이와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미래형 인재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내는 것을 세종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도출할 수 있다.

III — 세종시 특화산업 범위 및 현황²⁾

01 세종시 특화산업 범위

앞서 도출된 세종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지역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산업 범위 설정 및 현황 파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세종시는 세종테크노파크와 함께 지역산업 특성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여 세종시에서 전략적인 육성이 필요한 주요 산업 분야를 ‘2030 세종 미래먹거리산업 마스터플랜(세종시·세종테크노파크, 2020)’을 통해 제시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주요 산업 분야 및 분야별 추진 전략과 관련된 내용들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시간적 범위를 고려하였으며, 이를 통해 단기적 관점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까지 고려하여 미래 지향적인 지역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특화산업의 범위를 ‘2030 세종 미래먹거리산업 마스터플랜(세종시·세종테크노파크, 2020)’에서 제시된 스마트그린 융합부품·소재, 미래차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실감형 콘텐츠, 스마트시티 관련 산업 분야로 설정하고자 하며,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세종시 특화산업 정의 및 범위

구분	특화산업 정의 및 범위
스마트그린 융합 부품·소재	<p>정의 세종시 그린뉴딜 스마트 제조 혁신을 위한 핵심 소재개발 및 이를 적용한 고기능성 부품·장비를 제조·생산하는 산업</p> <p>범위 정밀기계, 완제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전자부품 분야에 활용되는 금속·비금속 소재·부품 및 바이오 기능성 소재·제품</p>
미래차 모빌리티	<p>정의 인공지능과 ICT에 기반한 자율주행차와 실외 자율주행 로봇, UAM 등 미래 모빌리티를 포괄하는 산업으로 O2O 플랫폼 기반의 교통 서비스 산업까지 확장된 개념의 산업</p> <p>범위 미래 모빌리티 관련 생산·제조 산업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교통 서비스</p>

2) 세종시 특화산업 범위에 대한 내용은 ‘2030 세종 미래먹거리산업 마스터플랜(세종시·세종테크노파크, 2020)’에 제시된 주요 산업 분야별 내용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여 제시하였으며, 세종시 특화산업 현황에 대한 내용은 ‘2030 세종 미래먹거리산업 마스터플랜(세종시·세종테크노파크, 2020)’에 제시된 주요 산업 분야별 표준산업분류 코드를 고려하여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통계 자료를 정리한 내용임을 밝힌다.

바이오 헬스	<p>정의 바이오메디컬 첨단 R&D 인프라시설과 인허가, 인력양성 등 전주기 기술혁신 산업생태계 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가능성과 고용효과가 크고 고령화시대 및 미래 건강수요 증가를 대응하는 고부가가치 창출 유망산업</p> <p>범위 바이오메디컬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 바이오메디컬 활성소재 R&BD 고도화 및 인력 양성 등 '연구개발→인허가·시장창출→생산·판매·유통의 바이오메디컬 기업 육성 파이프라인 구축'을 지원하는 바이오 제조 거점 조성</p>
실감형 콘텐츠	<p>정의 디지털 트윈 기술을 세종시 실감형 교육콘텐츠와 접목하여 시장구조 및 비즈니스 모델에 중점을 둔 콘텐츠 신산업</p> <p>범위 실감형 콘텐츠를 접목할 수 있는 산업 분야 중 교육 콘텐츠, 문화, 건강라이프 관련 분야</p>
스마트 시티	<p>정의 AI 플랫폼 등 세종시의 독창적 첨단 기반시설과 규제 샌드박스 등 첨단 도시 서비스 실증을 지원하는 정책을 기반으로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p> <p>범위 스마트도시법 상 규정하고 있는 산업의 범위는 스마트도시기술,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스마트 도시 서비스와 연관되는 분야</p>

자료 : 세종특별자치시·세종테크노파크, 2030 세종 미래먹거리산업 마스터플랜, 2020.

02 세종시 특화산업 현황

앞서 설정된 세종시 특화산업의 범위를 고려하여 특화산업별 현황을 관련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로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특화산업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을 구성하는 세부 산업들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는 이를 위해 '2030 세종 미래 먹거리산업 마스터플랜(세종시·세종테크노파크, 2020)'에 제시된 특화산업별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참고하였으며,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전국사업체조사 자료(2016년~2019년)³⁾를 기반으로 정리하였다. 세종시 특화산업 현황 정리 시 세종시 현황뿐만 아니라, 특화산업별로 전국, 충청권, 충청권 내 타 지자체(대전시, 충북, 충남)의 현황까지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세종시의 특화산업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현황이 전국, 충청권, 충청권 내 타 지자체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특화산업별 세종시의 현재 위치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1) 스마트그린 융합부품·소재

스마트그린 융합부품·소재 분야의 세종시 사업체 수는 2019년 기준 283개이며 2016년부터 연평균 7.0%만큼 증가하였다. 2019년 기준 스마트그린 융합부품·소재 분야의 전국 대비 세종시 사업체 수 비중은 0.52%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는 2022년 8월 10일 시점을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가장 최근 연도가 2019년 이므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스마트그린 융합부품·소재 분야의 세종시 종사자 수는 2019년 기준 7,483명이며 2016년부터 연평균 8.1%만큼 증가하였다. 2019년 기준 스마트그린 융합부품·소재 분야의 전국 대비 세종시 종사자 수 비중은 1.21%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미래차 모빌리티

미래차 모빌리티 분야의 세종시 사업체 수는 2019년 기준 144개이며 2016년부터 연평균 36.2%만큼 증가하였다. 2019년 기준 미래차 모빌리티 분야의 전국 대비 세종시 사업체 수 비중은 0.45%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차 모빌리티 분야의 세종시 종사자 수는 2019년 기준 2,439명이며 2016년부터 연평균 11.7%만큼 증가하였다. 2019년 기준 미래차 모빌리티 분야의 전국 대비 세종시 종사자 수 비중은 0.38%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바이오 헬스

바이오 헬스 분야의 세종시 사업체 수는 2019년 기준 98개이며 2016년부터 연평균 30.6%만큼 증가하였다. 2019년 기준 바이오 헬스 분야의 전국 대비 세종시 사업체 수 비중은 0.43%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 헬스 분야의 세종시 종사자 수는 2019년 기준 2,338명이며 2016년부터 연평균 22.8%만큼 증가하였다. 2019년 기준 바이오 헬스 분야의 전국 대비 세종시 종사자 수 비중은 0.58%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실감형 콘텐츠

실감형 콘텐츠 분야의 세종시 사업체 수는 2019년 기준 116개이며 2016년부터 연평균 52.1%만큼 증가하였다. 2019년 기준 실감형 콘텐츠 분야의 전국 대비 세종시 사업체 수 비중은 0.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감형 콘텐츠 분야의 세종시 종사자 수는 2019년 기준 937명이며 2016년부터 연평균 32.3%만큼 증가하였다. 2019년 기준 실감형 콘텐츠 분야의 전국 대비 세종시 종사자 수 비중은 0.27%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분야의 세종시 사업체 수는 2019년 기준 118개이며 2016년부터 연평균 18.5%만큼 증가하였다. 2019년 기준 스마트시티 분야의 전국 대비 세종시 사업체 수 비중은 0.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시티 분야의 세종시 종사자 수는 2019년 기준 1,201명이며 2016년부터 연평균 14.8%만큼 증가하였다. 2019년 기준 스마트시티 분야의 전국 대비 세종시 종사자 수 비중은 0.2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세종시 특화산업별 사업체 수 현황(단위: 개, %)

구분	2016		2017		2018		2019		CAGR	
	사업체	비중	사업체	비중	사업체	비중	사업체	비중		
스마트그린 융복합 부품소재	세종	231	0.44	252	0.48	273	0.51	283	0.52	7.0
	대전	1,028	1.97	1,060	2.01	1,082	2.01	1,089	2.00	1.9
	충북	2,723	5.23	2,820	5.34	2,956	5.49	2,957	5.44	2.8
	충남	3,314	6.36	3,412	6.46	3,515	6.53	3,619	6.66	3.0
	충청권	7,296	14.01	7,544	14.28	7,826	14.54	7,948	14.63	2.9
	전국	52,078	100.00	52,811	100.00	53,818	100.00	54,316	100.00	1.4
미래차 모빌 리티	세종	57	0.21	73	0.26	106	0.35	144	0.45	36.2
	대전	769	2.78	750	2.70	828	2.77	928	2.91	6.5
	충북	502	1.82	537	1.93	594	1.98	626	1.96	7.6
	충남	1,098	3.97	1,152	4.14	1,228	4.10	1,350	4.23	7.1
	충청권	2,426	8.78	2,512	9.03	2,756	9.21	3,048	9.56	7.9
	전국	27,639	100.00	27,811	100.00	29,925	100.00	31,891	100.00	4.9
바이오 헬스	세종	44	0.22	61	0.30	69	0.32	98	0.43	30.6
	대전	814	4.05	830	4.04	871	4.03	938	4.13	4.8
	충북	451	2.25	476	2.31	531	2.46	583	2.57	8.9
	충남	852	4.24	927	4.51	1,046	4.84	1,081	4.76	8.3
	충청권	2,161	10.76	2,294	11.16	2,517	11.66	2,700	11.89	7.7
	전국	20,088	100.00	20,564	100.00	21,592	100.00	22,707	100.00	4.2
실감형 콘텐츠	세종	33	0.15	51	0.22	78	0.32	116	0.44	52.1
	대전	725	3.21	710	3.10	779	3.16	873	3.31	6.4
	충북	228	1.01	231	1.01	252	1.02	282	1.07	7.3
	충남	310	1.37	334	1.46	361	1.46	405	1.54	9.3
	충청권	1,296	5.74	1,326	5.79	1,470	5.95	1,676	6.36	9.0
	전국	22,566	100.00	22,892	100.00	24,689	100.00	26,357	100.00	5.3
스마트 시티	세종	71	0.32	89	0.41	101	0.46	118	0.51	18.5
	대전	665	3.03	671	3.08	662	2.99	717	3.10	2.5
	충북	414	1.89	430	1.97	442	2.00	475	2.05	4.7
	충남	588	2.68	591	2.71	611	2.76	693	3.00	5.6
	충청권	1,738	7.92	1,781	8.17	1,816	8.20	2,003	8.66	4.8
	전국	21,938	100.00	21,808	100.00	22,142	100.00	23,130	100.00	1.8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해당 산업 분류코드 고려하여 자료 재가공함.

주 : 비중은 전국 대비 비중을 의미함.

〈표 6〉 세종시 특화산업별 사업체 수 현황(단위: 개, %)

구분		2016		2017		2018		2019		CAGR
		종사자	비중	종사자	비중	종사자	비중	종사자	비중	
스마트그린 융복합 부품소재	세종	5,922	0.99	6,622	1.11	7,239	1.18	7,483	1.21	8.1
	대전	7,999	1.34	8,385	1.40	8,519	1.39	8,701	1.40	2.8
	충북	44,793	7.49	46,711	7.80	51,014	8.33	50,141	8.09	3.8
	충남	64,305	10.75	63,103	10.53	64,162	10.47	66,055	10.66	0.9
	충청권	123,019	20.56	124,821	20.84	130,934	21.37	132,380	21.36	2.5
	전국	598,388	100.00	599,045	100.00	612,563	100.00	619,646	100.00	1.2
미래차 모빌 리티	세종	1,751	0.30	1,970	0.33	2,231	0.36	2,439	0.38	11.7
	대전	15,400	2.62	15,900	2.68	15,462	2.47	15,642	2.45	0.5
	충북	12,494	2.13	13,025	2.19	13,658	2.18	13,589	2.12	2.8
	충남	32,235	5.48	31,859	5.37	33,291	5.32	34,529	5.40	2.3
	충청권	61,880	10.52	62,754	10.57	64,642	10.32	66,199	10.35	2.3
	전국	587,947	100.00	593,441	100.00	626,148	100.00	639,554	100.00	2.8
바이오 헬스	세종	1,263	0.36	1,432	0.40	1,585	0.42	2,338	0.58	22.8
	대전	14,554	4.18	15,512	4.29	16,061	4.21	17,368	4.34	6.1
	충북	11,364	3.26	12,207	3.37	13,480	3.53	14,549	3.63	8.6
	충남	19,113	5.49	20,424	5.64	20,283	5.31	21,821	5.45	4.5
	충청권	46,294	13.30	49,575	13.70	51,409	13.46	56,076	14.01	6.6
	전국	348,065	100.00	361,868	100.00	381,906	100.00	400,249	100.00	4.8
실감형 콘텐츠	세종	405	0.13	551	0.17	749	0.22	937	0.27	32.3
	대전	8,608	2.75	8,581	2.70	9,046	2.69	10,014	2.85	5.2
	충북	2,747	0.88	2,782	0.88	2,860	0.85	3,228	0.92	5.5
	충남	3,586	1.14	3,523	1.11	3,696	1.10	3,976	1.13	3.5
	충청권	15,346	4.90	15,437	4.86	16,351	4.86	18,155	5.17	5.8
	전국	313,381	100.00	317,469	100.00	336,525	100.00	350,922	100.00	3.8
스마트 시티	세종	793	0.20	1,121	0.28	1,324	0.31	1,201	0.27	14.8
	대전	10,212	2.54	10,572	2.62	10,920	2.59	11,184	2.52	3.1
	충북	6,683	1.66	6,851	1.70	7,547	1.79	8,369	1.89	7.8
	충남	8,399	2.09	9,121	2.26	9,457	2.24	11,189	2.52	10.0
	충청권	26,087	6.48	27,665	6.85	29,248	6.93	31,943	7.20	7.0
	전국	402,278	100.00	403,737	100.00	422,194	100.00	443,430	100.00	3.3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해당 산업 분류코드 고려하여 자료 재가공함.

주 : 비중은 전국 대비 비중을 의미함.

IV — 과학기술 기반 세종시 지역산업 발전 방향

01 세종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고려 사항

지금까지 세종시 지역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서 세종시 및 중앙정부의 산업정책을 검토한 뒤, 세종시 특화산업의 범위 및 현황 또한 검토하였다. 지금까지의 검토 내용에 기반하여 세종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해 무엇을 고려해야하는지 살펴보고, 이를 고려하여 세종시 지역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세종시 및 중앙정부 산업정책 검토 내용을 종합 정리해보면, 세종시 여건을 고려한 특화산업의 역량 강화 및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산업 고도화 플랫폼 및 교육 인프라)을 마련하고, 이와 연계 가능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세종시 특화산업 범위 및 현황 검토 내용을 종합 정리해보면, 특화산업의 범위적 내용을 고려할 때 디지털 플랫폼과의 연계를 통해 특화산업 발전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화산업 현황 검토 내용을 고려할 때 세종시가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관점에서 발전 잠재력(사업체 및 종사자 수 연평균 증가율 등)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충청권 또한 경쟁력(전국 대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연도별 비중 등)이 상대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세종시 특화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자체적인 발전 방향 모색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더불어 충청권 상생 협력에 기반한 특화산업 경쟁력 향상 방안 모색 또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세종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고려 사항을 정리해 보면, 발전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종시 특화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충청권 차원의 상생 협력을 통해 그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기반 세종시 지역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02 과학기술 기반 세종시 지역산업 발전 방향

1)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특화산업 고도화

세종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고려 사항에서 세종시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발전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때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세종시 특화산업을 관통하면서 연계 가능한 과학기술 관련 산업을 발전기반으로 간주하고 선정할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을 세종시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산업으로 간주하고, 이를 활용한 특화산업 고도화 방안을 지역산업 발전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세종시 특화산업 범위와 관련된 내용 검토를 통해, 대부분의 특화산업이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고도화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제조 및 서비스 관리(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기반 제조 공정 개선, 가상공간 기반 실감형 체험 서비스 제공, 데이터 기반 시뮬레이션 기능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는 세종시 특화산업과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 개선·개발에 기여하면서 특화산업 고도화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활한 특화산업 고도화를 위해서 디지털 플랫폼의 기능 강화 및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이 필요한데,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통해 이와 관련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프트웨어산업은 현재 기술 수준에서도 특화산업 고도화를 위해 활용 가능하지만,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반 메타버스, 양자기술 등의 미래형 기술과도 연계성이 높아, 현재 시범단계에 있는 미래형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가 상용화되는 시기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 산업 기반 세종시 특화산업 고도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세종시만의 지속 가능한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충청권 차원의 상생 협력을 통한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

세종시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고려 사항에서 세종시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청권 차원의 상생 협력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세종시 특화산업 현황 검토 내용을 통해서도 특화산업과 관련된 충청권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의 전국 대비 비중이 연도별로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충청권의 특화산업 관련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세종시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청권 차원의 상생 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세종시 특화산업과 관련된 소재·부품산업(충남), 바이오산업(충북), 정보통신산업(대전)이 충청권 내 타 지자체의 특화산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충청권 내 타 지자체(대전, 충북, 충남)에서 세종시 특화산업과 연계 가능한 산업 분야에서 이미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상생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인프라 및 데이터 공유, 전문 인력 교육 및 교류 등)을 모색할 수 있다면, 세종시 특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세종형 과학기술진흥 거점기관의 운영 방안 모색

과학기술 기반 세종시 특화산업 발전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세종시의 과학기술 기반 혁신, 신성장산업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세종형 과학기술진흥 거점기관의 운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세종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는 지역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전담 거점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충청권 내 타 지자체 또한 대전과학기술진흥원(대전), 충북과학기술혁신원(충북), 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충남)을 운영하고 있다. 세종시는 세종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지역 과학기술진흥과 관련된 대응을 하고 있으나, 기관 특성상 과학기술진흥만을 전담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종시 과학기술진흥을 전담하는 거점기관의 운영 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어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거버넌스 체계가 먼저 잘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세종시가 현재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서 도시 규모, 인구 등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과학기술진흥을 전담하는 거점기관 운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세종시가 과학기술 기반의 특화산업 고도화를 통해 실질적인 수도로서 기능할 수 있는 미래전략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세종형 과학기술진흥 거점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판단된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화산업을 중심으로한 세종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03 한계 및 향후 대응

1) 한계

본 고에서는 미래전략수도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세종시 지역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세종시 민선 4기 출범 이후 성공적인 시정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발전 방향의 구체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민선 4기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시정 비전 달성을 위한 지역산업 발전 방향성을 모색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제시된 지역산업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2) 향후 대응

향후 추가적인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세종시 지역산업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성을 고려한 대응 방안 모색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정목표 6'의 115번째 국정과제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산업부)'에서 제시된 '기회발전특구(Opportunity Development Zone, ODZ)'를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연계하여 세종시 특화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잘 활용할 경우 세종시 지역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대한민국정부(2022),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
- 세종특별자치시·세종테크노파크(2020), '2030 세종 미래먹거리산업 마스터플랜'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마당(2022),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당선인 선거공보' .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전국사업체조사(시도) 통계 자료.

DAEJEON

정담(情談)

대전과 세종의 우주를 향한 꿈

RANDEV 큐브위성, 누리호와 함께 우주로 날아오르다

김태호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연구팀 'ASTRIS-II'은 카이스트 항공우주시스템 및 제어 연구실 (ASCL, Aerospace Systems and Control Laboratory)의 지도 교수인 방효충 교수와 졸업생까지 포함 총 14명의 석박사과정 학생들, 박사 후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주비행체 유도·제어·항법 분야에서 학술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시스템으로 구현하여 이를 검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2019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최한 큐브위성 경연대회에 ASTRIS-II 팀이 최종 선정되어 3U 큐브위성인 RANDEV(Repeater Arrangement & Disaster Early View)를 개발하였고, 누리호의 탑재체인 성능검증위성의 발사관에 장착되어 22년 7월 1일 사출되었다. RANDEV 위성 개발부터 누리호와 함께 우주를 날아오르던 순간까지, 김태호 팀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연구팀에서 개발한

RANDEV 위성은 무엇인가요?

RANDEV 위성의 주요 임무는 초분광 카메라를 이용하여 한반도의 재난 지역을 촬영하여 지상국으로 전송하는 것입니다. 초분광 카메라는 일반 광학카메라와 비교했을 때 가시광선 영역보다 넓은 범위의 파장대로 빛을 나눌 수 있어 적외선, 자외선 파장대에서 목표 지점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구름으로 대상이 가려지는 경우, 밤이어서 대상이 보이지 않는 경우 모두 식별이 가능합니다. ASTRIS-II 팀에서 직접 초분광 카메라의 광학부, 구조부, 센서부, 영상처리부 등 모든 시스템을 자체 제작하였으며, 실험을 통해 성능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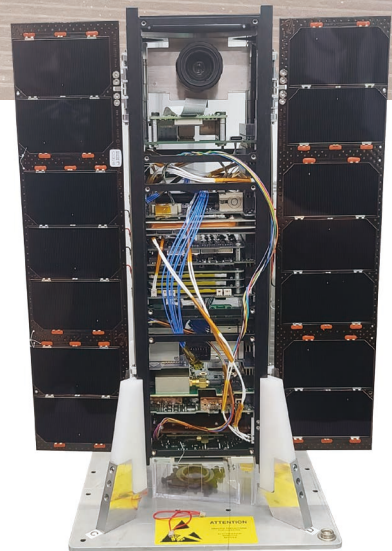
RANDEV 위성을 개발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개발 기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한 반도체 대란이 발생하여 큐브위성 부품 수급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2022년 4월과 5월 큐브위성의 인도 일정까지는 RANDEV 위성의 개발 기간 중 가장 바쁜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분광 카메라의 영상 데이터 처리 보드 1차 시제품을 개발하였지만, 반도체 대란으로 부품 수급이 기간 내 불가능하여 우여곡절 끝에 대체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마침 태양전지판도 4월에 배송 완료되어 태양광을 이용한 배터리 충전 시험, 전개형 태양전지판의 전개 시험과 같은 태양전지판을 이용한 여러 가지 시험을 모두 차질 없이 한 번에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
항공우주시스템 연구실은 내실을 다져
독자적인 큐브위성 시스템 솔루션을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RANDEV 위성을 나로센터로 인도하던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위성 인도 전날까지 밤을 새워가며 RANDEV 위성의 최종 조립을 수행하였고, 인도 당일 새벽 RANDEV 위성의 최종 조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침 7시경 펠리컨 박스라는 특수 용기에 위성을 포장하여 수납하였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실험 도구와 공구를 최대한 지참하였습니다. RANDEV 위성을 떠나보내기 전 방효충 교수님과 학생들이 모여 RANDEV 위성과의 마지막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나로센터로 출발하였습니다. 나로센터에 도착한 후 성능검증위성의 발사관에 장착하기 전 크기, 질량 등을 측정하였고, 배터리 완충 여부를 확인하고 마지막까지 배터리가 완충될 수 있도록 충전하였습니다. 모든 검사를 통과하고 대학교마다 차례대로 큐브위성을 성능검증위성에 장착하였습니다. 혹시나 장착 과정

에서 RBF(Remove before flight) 핀이 오작동하여 RANDEV 위성의 전원이 켜질까 조마조마했고, 킬스위치(Kill switch)에 부착했던 캡톤 테이프를 제거하지 않고 발사관에 장착하였는지 사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성공적으로 성능검증위성의 발사관에 장착된 것을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후련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2년 넘는 시간 동안 개발 및 시험했던 위성을 떠나보내는 것에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RANDEV 위성이 누리호와 함께 발사되던 순간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나로센터에서 누리호 발사를 직관하였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저 멀리 보이는 누리호가 마침내 발사하는 순간 마치 CG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누리호가 뿜어내는 굉장히 밝은 불꽃을 보니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비록 약 10초 후에는 유리창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갑자기 밀려오는 지진과 같은 큰 진동이 발생하여 누리호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상황 보고용 모니터를 시청하며 누리호의 고도 및 상태 정보를 확인하였고, 궤도 안착 후 성능검증위성이 정상적으로 사출되었을 때 다들 기쁨의 환호를 외쳤습니다. 카이스트로 돌아오는 길에 과학기술부 장관님이 누리호 성공 축사를 하시는 뉴스를 보며 우리나라도 드디어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 큰 자부심을 느꼈고, 한편으로는 이제 남은 것은 저희가 개발한 큐브위성의 정상적인 사출 및 운영이라는 점에 기대감과 불안함 모두 느꼈습니다.

7월 1일 오후 4시 38분경 RANDEV 위성이 정상적으로 사출되었습니다. 사출되고 5분 뒤에 안테나가 전개되고, 태양전지판이 차례대로 전개되었습니다. 교신 시도를 하였지만, 워낙 고각





(Elevation angle)이 낮고, 통신 시간도 50분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첫 교신은 실패하였고 다음 교신 시간인 7월 2일 오전 3시 30분경 첫 교신에 성공하였습니다. 방효충 교수님, RANDEV 위성 개발 학생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구철희 박사님 모두 카이스트 기계공학동 1층 위성 실험실에 늦은 새벽까지 기다리며 첫 교신을 지켜보았고, 모두가 초조하게 지켜본 가운데 신호가 잡히는 순간 지상국 소프트웨어에서 신호의 주파수 및 세기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크게 솟아올랐고 동시에 첫 패킷 데이터를 수신하였습니다. 다들 일어나 환호를 하였고, 손뼉을 치며 기쁨을 만끽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7월 3일 오후에는 위성으로 신호를 송신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같은 날 오후 4시에 성공적으로 신호 송신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써, 양방향 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RANDEV 위성은 성공적으로 사출됐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누리호에 실려 처음 사출된 큐브위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RANDEV 위성은 현재 양방향 통신을

넘어 지상국 시설을 보강하며 임무 수행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다면 국내 최초로 큐브위성의 초분광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 및 지상으로 전송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해도 탑재체 및 탑재 컴퓨터 외의 RANDEV 위성의 서브 시스템은 해외 제품을 탑재하였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서 오랜 부품 수급 기간 소요 및 적은 범위의 제품 커스터마이징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RANDEV 위성 개발 일정을 준수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항공우주시스템 연구실은 내실을 다져 독자적인 큐브위성 시스템 솔루션을 보유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김태호 팀장은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에서 학사과정을 마치고, 카이스트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RANDEV 큐브위성 개발 과정에서 팀장 역할을 맡았으며, 주요 연구 주제는 동역학적 환경에서 적응형 칼만 필터를 이용한 별 추적기의 별 벡터 중심점 찾기 방안이다.

뉴 스페이스(New Space)의 문을 연 대전 우주산업 대표기업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최초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가 8월 5일 전이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다누리에 실린 6개 탑재체 중 5종이 국내에서 개발되었다. 국내 40개 기업 중 대전에 위치한 기업 씨트랙아이, 한컴인스페이스, 솔탐 등이 지상운영시스템에 참여했다. 우주 비즈니스 중심지 대전의 대표적인 우주산업 기업들을 소개한다.



위성수신처리시스템 으뜸 기업, (주)솔탑

Space, Ocean, Land, Earth의 첫 글자를 딴 솔탑(SOLETOP)은 우주, 해양, 지상의 원격 탐사 및 제어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다. 이 독보적인 위성수신처리시스템을 이용해 세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스페이스X와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에 맞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큐브셋'이라고 불리는 초소형위성시스템도 구축중이다. 큐브셋은 초소형화, 저가화, 기간단축으로 상징되는 뉴 스페이스 시대에 글로벌 우주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솔탑 역시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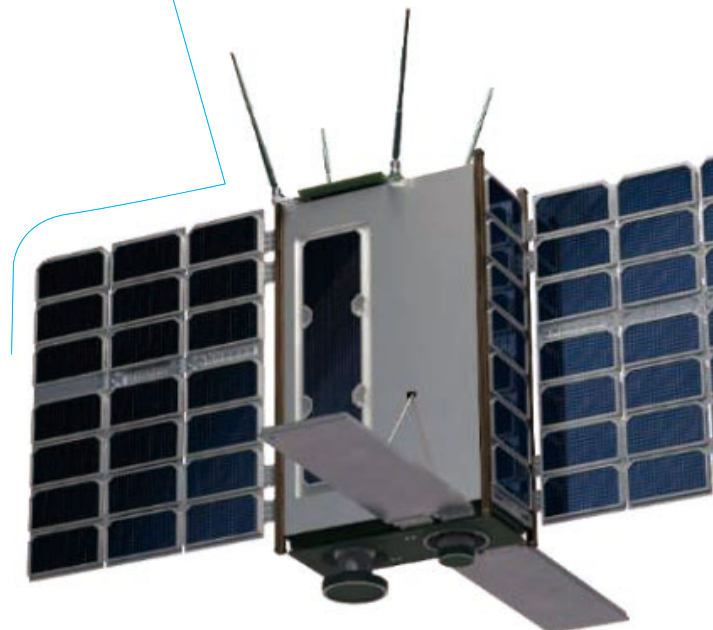
국내 최초 우주산업 분야 상장 기업, (주)세트랙아이

세트랙아이는 우리나라 최초 위성인 '우리별 1호'를 개발한 KAIST 연구 인력을 중심으로 1999년 설립됐다. 그 이후 인공위성 수출을 통해 전 세계에 독자적인 기술력을 선보이며, 국내 최초 우주산업 분야 상장기업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다. 위성본체를 포함한 우주용 부품을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그 동안의 경험으로 위성 시스템 교육까지 진행 중이다. 8월 출간된 도서 「세트랙아이 러시에는 세트랙아이 스타트업 창업부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협업, 미래의 뉴 스페이스 시대까지의 스토리가 담겨있다.



민간 관측 위성 세종 1호 발사, (주)한컴인스페이스

지난 5월 한컴인스페이스가 국내 첫 민간위성 '세종1호'를 성공리에 발사했다. 한컴인스페이스는 세종1호를 통해 세계 최초로 우주, 항공, 지상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영상 데이터 서비스를 만들어냈다. 세계 속 우리나라의 지리적 이점을 파악해 시작한 세종1호 사업은 뉴 스페이스 시대에 한컴인스페이스가 착실하게 발 맞춰가는 것을 보여준다. 한컴인스페이스는 2023년 세종2호를 추가 발사하고, 하반기에는 3·4호를 보낼 계획이며, 2024년에는 5호를 발사할 예정이다.



세계적인 항공우주도시를 향하여

글_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 위원장 신명호 (발사체보증팀 책임연구원)





우주산업의 핵심 ICT 기술

뉴스페이스 시대의 핵심에 ICT 기술의 발전이 자리잡고 있다. 뉴스페이스는 일본 총무성의 언급처럼 “ICT가 불러일으킨 우주산업의 빅뱅”인 것이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디지털/데이터의 시대는 위성활용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공간정보, 영상정보, 위치정보, 전자관측정보 등을 폭발적으로 필요로 하게 되었다. 둘째, ICT 기술의 발전은 위성제작과 위성운용에 획기적인 기술혁신을 가져왔다. 100 ~ 500kg 규모의 수억원에서 수십억원 수준의 초소형/소형위성으로 저궤도 군집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위성제작과 위성활용 서비스 비용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자극하여 양의 피드백을 강화시켰다. 셋째, 재사용 로켓, 3D 프린팅, 위성과 로켓 제작의 수직계열화를 위한 제작공정 혁신 등의 방법이 도입되면서 위성발사 비용이 극적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뉴스페이스로 불리는 우주산업의 핵심수요와 동력은 ICT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우주기술과 ICT의 융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만 산업과 시장의 급격한 확대를 가져오게 된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우주 선진국은 기존에 구축된 위성발사와 위성제작 인프라를 혁신함으로써 위성활용 서비스 비용을 급격하게 낮추고 이를 활용하는 범위와 영역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자체 기술로 누리호 2차 발사에 성공하고 다누리 달궤도선을 설계·제작해서 발사하였다. 이러한 우주 분야의 성공은 그 기술적 성취 자체로 높이 평가 받아야 하지만, 발사체 개발과 우주탐사 분야에서 기존 기술을 추격한 것에 해당한다. 뉴스페이스 시대로 진입한 것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고, 두 분야 모두 민간의 상업화 영역으로 보기에 어렵다. 발사체 개발은 국가 및 민간 위성발사 수요에 부응하여 위성발사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비용을 줄이는 데 있으므로,

위성활용 서비스 비즈니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해당한다. 코로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미중 간 전략적 경쟁 등으로 인해 불어닥친 경기침체,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등으로 우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우주기술과 ICT에 기반한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기술들은 살아남아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후발국으로서 우리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부합하는 민간의 상업화 영역으로서 위성활용 서비스 비즈니스를 촉진하는 것뿐 아니라, 위성활용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위성발사와 위성제작, 위성정보제공 등의 인프라를 저비용, 고효율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030년 경에는 세계의 위성활용 서비스 시장이 성숙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한국의 경우에는 5 ~ 10년이라는 추격의 시간 문제까지 가중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우주산업 현황과 발전 방안

한국은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 우주물체 발사 능력, 발사체 개발 및 인공위성 제작 등 우주역량에서 세계 7위권, GDP 대비 우주개발 분야 R&D 투자비중 등에도 불구하고, 세계 우주시장 점유율은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세계 7번째로 1톤급 위성을 자체제작하여 자력발사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우주산업 분야의 다수의 기업들과 관련 기관 및 제도들이 지리적으로 모여서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생산·물류비용, 기술혁신과 확산 등에 유리한 집적경제인 우주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고, 둘째, 국가 차원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요 정책과 공급 정책을 민군을 통합하는 범부처 차원에서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을 확립하는 것이다.

발사체 개발, 관제센터 구축과 운영, 우주탐사 등은 재사용발사체, 3D 프린팅 등 기초·기반기술 확보나 운영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로, 지속적인 대규모 자금투입이 필요해서 직접적으로 상업화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많다. 이러한 인프라 영역에서는 공공과 민간영역을 종합하는 적극적인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 위성발사와 위성제작, 위성관제 등이 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 우주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강력한 공급 정책이 기획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반면에 위성활용 서비스 비즈니스는 비교적 소규모 자금투입으로 민간의 참여가 가능하므로, 정부 차원에서의 수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과 동시에 우주 스타트업을 위한 자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 위성활용 서비스

비즈니스에서 민간의 혁신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우주 산업체와 전문 인력들이 활동하고 있는 우주산업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대전은 우주산업클러스터로서 뉴스페이스 시대에 세계적인 항공우주도시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국방과학연구원, KAIST 등을 포함한 정부출연연구원 26개, 교육기관 7개, 국공립 연구기관 3개, 기타연구기관 9개 등 총 45개의 연구기관에서 우주 및 ICT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공급할 수 있다. 행정수도인 세종, 군사도시인 계룡과 인접하여 민군 통합 범부처 차원의 우주 정책을 수립하고 우주개발을 총괄할 수 있다.



다누리와외의 교신을 위해 경기도 여주에 구축된 심우주안테나

“

대전은 우주산업클러스터로서
뉴스페이스 시대에 세계적인
항공우주도시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

또한 대전은 현재 우주 관련 기업이 밀집되어 클러스터가 형성된 지역 중 하나이며, 다른 지역 클러스터인 서울이나 판교와도 가까운 편이어서 우주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에 적합하다. 국토의 중앙에 있어 우주 시험을 수행할 때 생산·물류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 우주 전문인력 양성과 공급, 우주시험체계 구축, 뉴스페이스 시대에 필요한 우주기술과 ICT의 융합기술 개발지원, 우주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 위성활용 서비스 비즈니스 촉진은 우주산업클러스터의 핵심 요소이다. 대전은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세계적 항공우주도시 대전을 꿈꾸며

유럽 제일의 항공우주도시 툴루즈,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가 있는 올랜드, 미공군과 스페이스X, 뉴스페이스 우주 스타트업들이 있는 LA 등이 세계적인 항공우주도시들이다. 뉴스페이스 시대라는 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시작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한다면 세계적인 항공우주도시로서의 대전의 잠재력을 이해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모든 발전은 불균등

발전이다. 특히나 추격의 시간이라는 제한까지 주어져 있다면 정부는 현재 가능한 최적의 입지를 선택하여 집중해야 하며 강력한 수요 정책과 공급 정책을 적절하게 적극적으로 구사해야 한다. 적어도 현재 우주산업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 인력과 자금, 기술을 집중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민간의 혁신 역량을 극대화하여 신속하게 우주산업 생태계와 인프라를 구축하며 우주개발 총괄기구를 통해 정부 차원의 수요 정책과 공급 정책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중앙집중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주 분야에 종사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대전시가 국익과 미래를 위해서 툴루즈나 LA 같은 도시를 모델로 삼아 세계적인 항공우주도시 건설에 매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도요셋의 위대한 비상

글_ 황정아 한국천문연구원 우주과학본부 책임연구원



도요셋 가상도 출처 2021년 한국천문연구원

2022년은 대한민국의 우주가 크게 도약하는 해가 될 것 같다. 2022년 6월 21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2번째 시도에 지구 저궤도에 1.5톤 중량의 인공위성을 올려놓는데 드디어 성공했다. 이제 우리나라의 땅에서, 우리가 만든 로켓을 타고, 우리가 만든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우주 주권'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누리호의 추력이 한참 부족해서 정지궤도 위성들은 다른 나라의 로켓을 타고 우주로 나가야 한다. 달로 나가는 위성도 마찬가지다. 올해 8월, 지구 저궤도와 정지궤도에만 머물러 온 우리의 우주는 이제 달까지 영역이 확장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우주로의 여정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순수한 과학 임무의 인공위성

이렇게 우리나라에 우주 관련 희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고,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가 발사된 지도 30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나라의 우주탐사의 미래와 장기적인 비전을 제대로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역사에 빠진 것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과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순수한 과학 임무의 인공위성이 없었다. 대학교에서 학부생들이 만든 캔위성들을 제외하면 말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에서 시작해서 과학기술위성, 차세대 소형위성 시리즈로 그 명맥을 이어 오고 있는 100kg급의 과학위성 플랫폼은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에서 계속해서 개발해 오고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위성 플랫폼이다. 이들 위성 시리즈들도 이름만 과학위성이지만 실제로 주요 임무는 기술 검증이었다. 우주에서 필요한 핵심 기술들을 검증하는 것이 주요 미션이었고, 기술 검증 탑재체에 우선 배정하고 남은 무게를 과학 탑재체에 할당하는 식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과학적 목적에 부합하는 미션 자체를 처음부터 계획해 본 일이 없다.



도요새

도요새를 닮아

작지만 멀리 나는 위성, 도요새



그런 면에서 한국천문연구원에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도요새 위성들은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 임무를 위해서 최초 설계부터 시작한 위성들이다. 도요새는 도요새를 닮은 위성이란 뜻으로 과학자들이 직접 붙인 이름이다. 크기는 작지만 높이, 그리고 멀리 나는 도요새처럼 도요새는 작지만 우리나라 우주탐사의 큰 꿈을 꾸는 위성들이다. 도요새는 순수 과학임무 목적의 과학위성으로 우주 날씨 변화와 오로라, 지자기 폭풍 변화를 관측하여 전리권과 자기권에 존재하는 소규모 플라스마 구조들의 시공간적 변화를 규명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다. 한국천문



연구원이 미션 총괄, 과학 임무 개발, 과학 탑재체 개발, 지상국 개발을 맡고, 6U 위성 본체 시스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이 개발했고, 4기로 구성된 위성들의 편대비행 알고리즘은 연세대학교에서 개발했다. 도요샛은 중량 10kg 이하의 나노급 위성 4기로 구성되며, 고도 500km의 태양동기궤도를 정밀한 자세 제어를 통해서 편대비행을 하며 지구 저궤도에서 우주 날씨의 변화를 관측할 예정이다. 이 정도급의 초소형 위성에서 편대비행은 세계 최초의 시도이다. 도요샛은 앞으로 나란히 비행하는 종대 편대를 하면서 관심 지역의 재방문 주기를 줄이면서 시간적인 분해능을 확보하고, 옆으로 나란히 횡대 편대 비행을 하면서 경도 방향으로 넓은 지역의 공간적 분해능을 확보할 수 있다. 2017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도요샛 위성들은 현재 비행 모델 개발이 완료되었고, 2023년 초에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소유즈 로켓을 활용해서 발사할 예정이다.

'how'가 아니라 'what'을 우선하는 우주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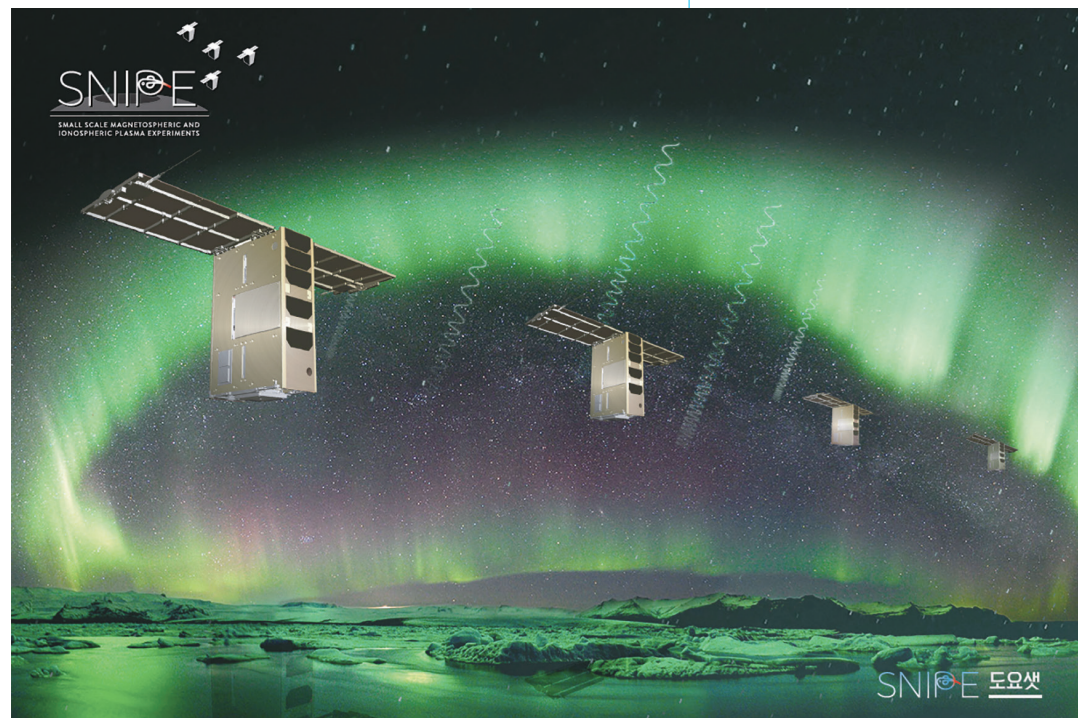


도요샛은 순수한 과학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설계된 우리나라 '최초'의 위성이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위성 전체 시스템을 총괄하는 '첫' 시도이며, 초소형 위성의 편대 비행을 시도하는 세계 '최초'의 도전이다. 이렇게 많은 '최초'를 포함하는 미션인 만큼 개발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다. 천문연이 과학목적의 탑재체가 아니라 위성 자체를 총괄하고 지상국을 운영한다는 것에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다. 하지만, 수단이 목적을 이길 수는 없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은 수단이 목적을 압도하는 수준이었다. 우주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미래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은 이제는 목적이 먼저가 되어야 한다. 'how'가 아니라 'what'을 먼저 결정하는 게 우선시 되어야 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우주탐사를 시작해 볼 수 있게 된다. 앞으로 달도 가고, 소행성도 가고, 화성도 가려면, 이제라도 우리에게 제대로 된 로드맵과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 2050에 우리나라도 화성에 한번 가 봐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만의 우주탐사



최근에 영국 런던에서 열린 달-화성탐사 (M2M, Moon-to-Mars Exploration) 워크숍에 참석했다. 미항공우주청(NASA)가 주관하고, 영국 우주청이 주최한 이 워크숍에는 세계의 우주 전담기관의 과학자들이 기관별로 4명씩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비공개 미팅이었다. 여기에서는 M2M 계획 추진을 위한 4개 분야를 운송 및 거주(Transportation & Habitation), 시설 구축(Infrastructure), 운영 관리(Operation), 과학 연구(Science)로 구분하고, 총 50개의 세부 목표를 결정하기 위한 워크숍이었다. 한국에서는 항우연과 천문연이 참석했다. 워크숍 자체는 미국 주도의 달, 화성 탐사 계획을 전 세계 우주기관의 전문가들을 소집해서 의견을 수렴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우주 탐사를 가능하게 하려고 미국도 나름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라도 우주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우리나라만의 우주탐사 계획과 비전을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첫 걸음이 이번에 과학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요셋 프로젝트다. 도요셋들의 위대한 비행이 꼭 성공했으면 하는 이유다.



도요셋 기상도 출처 2021년 한국천문연구원

가볍게 떠나기 좋은 대전·세종 문화 산책

한국관광공사가 최근 3년간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심층 인터뷰와 여행자의 설문조사를 통해 발표한 2022년 국내 관광 트렌드는 '즉흥여행'으로 꼽았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여행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97.2%가 국내 여행 의향이 있으며, '당일 여행'은 57%로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당일치기로 가볍게 떠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 언제나 가볍게 탁! 떠나기 좋은 대전·세종 도시 이야기가 담긴 문화 명소를 소개한다.



성심당의 역사는 곧 도시의 문화가 된다

성심당문화원

한국관광공사의 빅데이터 플랫폼 관광데이터랩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전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141,155건이나 검색된 압도적 맛집 1위는 성심당으로 나타났다. 대전 방문의 중심에 있는 성심당이 지난 5월 문화원을 개원했다. 창립65주년과 문화원 개관을 기념하여 초심을 떠올리게 하는 전시가 4층 갤러리에서 진행 중이다. <연결 : 시간을 잇다>는 1950년 성심당 창업주의 밀가루 두 포대 이야기와 브랜드 성장과 위기, 극복 과정을 조동환·조해준 부자(父子)의 구술드로잉으로 풀어냈다. 연필과 지우개만으로 그려낸 작품 100점은 시간과 사람을 연결해 이 자리의 소중함과 우리 존재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과학과 예술이 만나 미래 도시를 상상하다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

대전시립미술관에서 미래도시를 주제로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가 8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환경위기를 비롯한 이 시대 도시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 첨단 기술의 발전과 전례 없던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겪으며 지구의 모든 인간·비인간이 소외되지 않고 어떻게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미래도시의 열린 가능성들 떠올리며 도시의 미래, 환경, 인류세에 대한 예술적 담론을 다채롭게 표현했다. 특히 이번 비엔날레는 선승혜 관장을 비롯한 대전시립미술관 큐레이터팀이 직접 기획하고, KAIST 교수진이 전시도록의 필진으로 참여해 과학기술의 이해를 도왔다. 과학예술의 중심도시로서 역량을 쌓고 대전만의 비엔날레가 완성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을 위한 열린 독서쉼터 한글·독서·출판문화향유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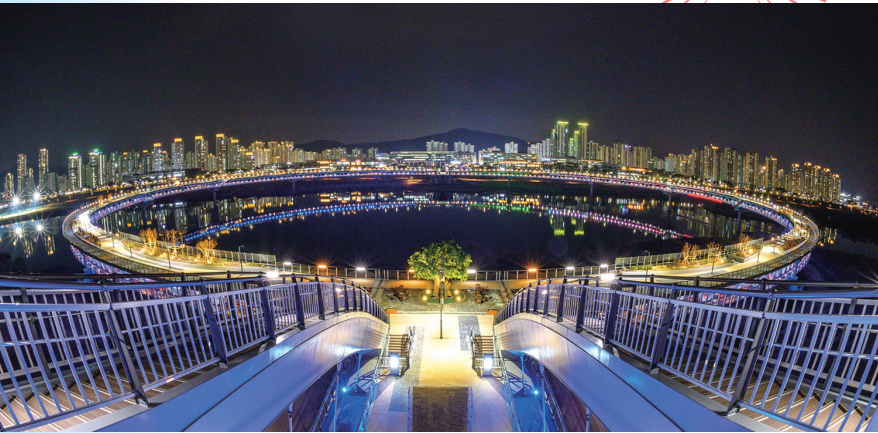
한글사랑 세종책문화센터

한글사랑 도시를 표방한 세종시에 출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세종책문화센터'가 올해 3월 세종시청에 개관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지역책문화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강릉, 안성에 이어 선정됐다.

1층에 마련된 출판체험공간 '책벗'은 책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인쇄기, 코팅기, 재단기 등의 출판 장비와 직접 쓴 글을 오디오로 녹음을 할 수 있는 오디오북 녹음실이 마련돼 있어 교육과 체험이 가능하다. 4층 중정의 독서쉼터 '글벗'은 높은 층고와 벽면 가득 채운 1만 8천 여 권의 도서를 열람하거나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특히 한 손에 책을 든 세종대왕 조형물 앞으로 가면 이 공간의 정체성이 드러난다. 훈민정음의 창조부터 일제강점기 항거, 그리고 현재 우리말의 변화와 세종학까지 알 수 있는 서적들이 비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서 대출 외에도 연령대별 출판문화 프로그램과 경로당, 어린이집 등 지역 자원과 연계하거나 인문학특강, 작가와의 만남 등 한글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의 열린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사진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



낮에도 밤에도 반짝이는 국내 최장 보행교

이응다리

세종시 금강을 따라 연기면 세종리에 도시를 상징하는 새로운 명소가 생겼다. 바로 이응다리다. 도시이름을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에게서 가져온 만큼, 디자인도 세종대왕과 연결짓기 쉽게 한글 자음 'ㅇ'자를 활용했다. 길어도 훈민정음을 반포한 1446년 기념하기 위해 1446m로 도시의 이야기를 담았다. 교량 상부는 보행자, 하부는 자전거 전용 도로로 분리돼 있다. 금강을 따라 걷는 시민들은 사랑 약속나무, 이응 모양 그네, 전망대 등 포토존과 클라이밍, 익스트림 스포츠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경기장과 미디어파사드,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망원경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낮에는 금강의 윤슬이, 밤에는 도심의 빛과 조명으로 언제나 반짝이는 이응다리는 한국관광공사의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되었다.



(사진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

DAEJEON

연구원
이모저모

연 구 원 N E W S



6월 월례회의 개최

6월 3일(금) 오전 10시부터 대전청사 1층 로비에서 6월 월례회의를 진행하였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첫 번째 신규 입사자 3인에게 시령장 수여, 부서별 업무보고, 불필요한 일 버리기 운동 T/F 결과보고 후 이현숙 젠더인권센터소장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과 권흥순 충남대학교 명예교수의 <충청, 충청인!> 특강이 이어졌다.



제18차 한국지역학포럼 개최

6월 10일(금) 충남대학교 중앙도서관 강당에서 '지역의 장소성과 호명 효과를 주제로 제18차 한국지역학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전국의 10여 개 지역학 연구기관 50여 명의 연구자들과 대전권역 지역학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지역정체성을 구성하는 호명의 함의와 다양한 사례를 논하였다.



2022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 정책학술대회 개최

6월 16일(목)~17일(금) 호텔 오노마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022 하계 정책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2년간 코로나 위기 속에서 세계경제가 급변하고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올해 주제를 <코로나19 이후 세계경제 환경변화와 지역경제 회복력>으로 선정하였다. 1일 차에는 포스트 코로나19의 세계경제 환경변화와 지역경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2일 차에는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연구자문위원회 개최

6월 27일(월) 오후 4시 대전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22년 1차 연구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연구자문위원회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안내 및 연구원 전략과제 차별화 방안, 민선8기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연구방향 등을 주제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되었다.



대전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세미나 개최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는 4월 8일(금) 대전세종연구원 멀티미디어실에서 2022년 상반기 대전세종지역학연구포럼을 개최하였다. 대전세종의 지역학 연구 동향 보고 및 공유하는 자리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센터의 역량 강화 등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였다.



대전세종상생포럼 2022년 상반기 정기포럼

대전세종연구원은 대전시, 세종시와 함께 6월 30일(목) 대전컨벤션센터 1층 중회의장에서 대전세종상생포럼 상반기 정기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을 통해 대전과 세종의 새로운 민선정부 출범 즈음하여 분과별 대전세종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 및 공유하고 전체 심층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정기포럼에는 대전세종연구원 원장, 대전세종상생포럼 제3기 포럼위원, 관계부처, 상생협력 연구단 등이 참여하였다.



고객만족위원회 개최

7월 5일(화) 오후 4시 대전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2022년 1차 고객만족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연구원 성과 및 지난 위원회 자문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고, 고객만족 향상 방안 및 시민 만족도 높은 정책연구 홍보 방안 등을 주제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되었다.



민선 8기, 대전경제 회복과 성장 과제(방안) 세미나

대전세종연구원은 7월 21일(목) 유성호텔에서 대전상공회의소, 중도일보와 공동으로 <민선 8기, 대전경제 회복과 성장 과제(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약과제 중 산업단지 조성과 산업육성, 기업 유치 등을 중심으로 한 대전경제성장방안(정경석 혁신공간연구실장)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대전경제회복방안(이철성 소상공인진흥공단부연구위원)에 대한 주제발표 후 토론이 이어졌다.



2022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제1차 성인지 정책 포럼 개최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대전 NGO 지원센터에서 대전지역 내 성주류화 달성을 위한 핵심영역으로 안전·폭력, 가족·돌봄, 일자리·성평등가치 확산을 설정하고, 각 분야의 종사자 및 활동가와 함께 지역내 중요 이슈에 대한 현황 진단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7월 29일 '젠더폭력, 사후 대응만이 최선인가?'를 주제로 제1차 성인지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민선 8기 출범 대전광역시 시정 방향 세미나

대전세종연구원은 8월 3일 1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일보와 공동으로 '민선 8기 출범과 대전광역시 시정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해외 연구혁신거점 조성사례와 대덕연구단지의 미래계획 방향(김동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금융 지원을 위한 지역은행 설립 전략(오대원 경희대 교수), 그리고 교통난 해소와 공간활용성 제고를 위한 경부고속도로지선 기능고도화 전략과 시사점(황두영 디에이건축 실장)에 대한 주제발표 후 김영진(좌장/대전대 교수), 황혜란(대전세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심상협(민선 8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 간사), 이진선(우송대 교수), 송연순(대전일보 논설위원)의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세종시 민선 4기 변화와 대응 세미나 개최

대전세종연구원은 8월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충청투데이, 세종시지역혁신협의회와 공동으로 '세종시 민선 4기 출범에 따른 시정 방향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종시 인력과 일자리(사단법인 아이야 김형만 대표), 기회발전특구 조성 방안(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강경표 한국교통연구원 자율협력주행연구센터장), 세종시 부동산 시장 과제(박유석 대전과기대 교수)에 대한 주제발표후 강영환(좌장/대전대 교수), 김일순(충청투데이 본부장), 이상호(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용준(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장), 정재호(목원대학교 교수), 권영섭(국토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한국이민행정학회 2022년 하계학술대회 공동개최

대전세종연구원은 한국이민행정학회와 공동으로 8월 19일(금) 13시 15분부터 18시까지 하계 학술대회를 한경대 본관 1,2층과 대전세종연구원 3층 멀티미디어실에서 공동개최하였다. '다문화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김윤희(대전외국인통합지원센터장) : 지역내 중장기 외국인 주민 정책과 유형별 통합방안, 김혜영(대전광역시 가족센터장) : 대전 다문화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세종시 출범 10년 기획세미나 개최

8월 23일(화) 대전세종연구원은 세종시 출범 10년 기획세미나를 세종시청 5층 세종실에서 세종시지역혁신협의회와 공동개최하였다. 세종시 출범 10주년의 성과와 과제를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로서 세종시 성과와 역할(안용준), 어린이와 여성이 행복한 미래전략도시, 세종(최성은), 열 살 소년 세종, '몸짓'에서 '눈짓'이 되기까지(이재민), 세종시 물복지 향상을 위한 물관리 정책 방향과 중점과제(송양호)로 나누어 세종연구실 소속 연구원들이 4개 주제 발표를 한 후 육동일(좌장/충남대 명예교수), 김진섭(세종시 치수방재과장), 도명식(한밭대 교수), 박세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운정(목원대 교수), 정제호(한국교통대 교수) 등의 지정토론과 참석자 질의응답 등을 진행하였다.

NEWS

편집위원

위원장 강영주 (대전세종연구원 미래기획실장)

위원 박근수 (배재대학교 여가서비스경영학과 교수)

설성수 (한남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장은정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범규(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병선(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한상현(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성은(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남영식(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송양호(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이지은(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변성수(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대전세종포럼

대전세종포럼 통권 제82호

발행일 2022년 9월 1일

발행인 정재근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등록번호 대전유성, 비00013

주소 34051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37(문지동)

전화 042-530-3500

팩스 042-530-3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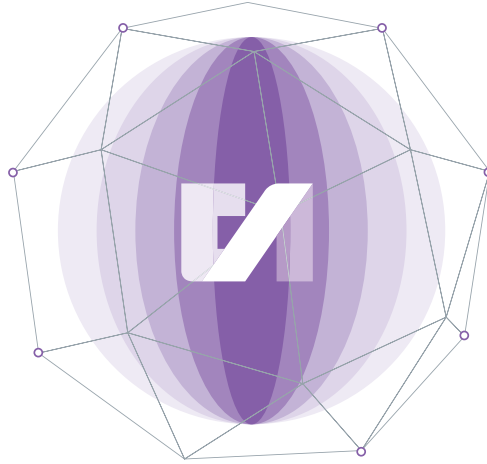
제작 (주)봄인터랙티브미디어 (Tel.042-633-7800)

©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전세종포럼

DAEJEON
SEJONG
FORUM

연구과제 제안 안내



대전세종연구원은 대전시·세종시 각계각층의 연구요구를 수용하고
활발한 지적교류와 정책연구에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과제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연구과제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대전세종연구원 홈페이지(www.dsi.re.kr) 시민의소리(연구제안)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DAEJEON
SEJONG
FORUM

www.dsi.re.kr